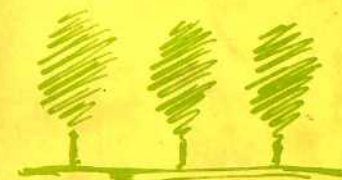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하루소식

합본 1호
(1호~100호)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하루소식

인권정보자료실
R1.1.1

인권운동사랑방



제98호(94.2.2, 수) / 302

- 1면 ·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중점, 「여연」 정기총회, 여성의 권익 향상 위해
 - 40년 감옥살이 안학섭씨 석방 요구, 국제앰네스티, 양심수 선정 전세계에 호소
 - 인천 당직변호사제 실시, 인천지방변호사회
 - KONUCH 대표단, 세계인권대회 후속회의 참가, 2-3일 방콕
 - 서울대조교 성희롱사건 심리, 1일 민사지법
 - 영등포교도소 인권유린 항의집회, 오늘 12시, 교도소 앞
- 2/4면 ·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4/7면 · 주·월간지 기사색인

제99호(94.2.3, 목) / 309

- 1면 · 50차 유엔 인권위원회 열려, 1월 31일-3월 11일, 제네바, '일본군 위안부' 문제 부각될 듯
 - "인사안했다고 징벌방에", '소장 사과·징벌 해제' 농성중, 2일 영등포교도소 앞
 - "국제화는 정신대문제 올바른 해결로부터", 2일 105차 수요시위
 - '언론' 인권침해 적극 대처, 2일 「바른언론」 창립대회
 - 양심수를 위한 거리음악제, 임수경·김광석씨등 출연, 22차 목요집회, 3일 2시
- 2/3면 · 인터뷰/필리핀 인권운동연합 사무국장 에블린 발레세라노
- 3면 · 국제앰네스티, 미국내 사형집행 중단 요구

제100호(94.2.4, 금) / 312

- 1면 · "재소자 치료소홀 국가가 배상해야", 서울민사지법, 적극적인 소송제기 필요
 - 박석진 일경 징벌 풀려, 교도소장 공개사과도
 - 정부, 무급생리휴가 추진, 여성계 거센 반발
- 2면 · 지령 100호 특집, <인권하루소식>에 바란다
- 3면 · 만화로 본 <인권하루소식>

색 인 / 315

인권하루소식

준비 1호 - 24호

(8월 4일 - 9월 4일)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범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민가협)와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가 공동으로 8.3.부터 8.5.까지 명동성당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연대농성」을 벌인다. 이와 함께 옥중에 있는 322명의 양심수들은 같은 기간에 단식농성을 벌이기로 하였다.

또한 연대농성 지지집회가 대구(8.3), 대전(8.5), 광주(8.5), 부산(8.5), 안양(8.6), 마산(8.6), 전주(8.8) 각 교도소 앞에서 열린다. 광주에서는 광주연합 사무실에서 3일 오전 9시 기자회견을 갖고 저녁 9시까지 40여명이 연대농성에 참가하였다.

이번 농성을 공동주최하는 민가협과 범추본은 3일 오전 10시에 기자회견을 한데 이어 11시에 연대농성 발대식을 거행하였다. 민가협 회원과 범추본 소속단체 회원 및 양심수 후원회원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다.

기자회견에서 밝힌 이번 연대농성의 배경은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온 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때에 여전

히 43년을 감옥안에서 살고 있는 김선명(69세, 대전 교도소) 등 322명의 양심수가 있다. 국가보안법, 양심수는 통일과 개혁의 시대와는 양립할 수 없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8월 3일 부터 연대농성에 들어가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농성의 요구사항은 "1.세계최장기수 김선명씨를 비롯한 모든 장기수들을 즉각 석방, 2.분단조국의 희생양이자 반인간적 고문의 피해자인 조작간첩의 진상규명 및 즉각 석방, 3.민주주의와 민족통일을 위해 노력하다 구속된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4.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가로막고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즉각 철폐"이다.

그리고 오후 2시30분에는 명동성당 입구에서 「밀실수사·고문수사 근절 및 국가보안법 철폐추진대회」, 민가협 회원, 외대 배병성 학우 대책위, 범추본, 민정련 소속회원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천재 서울연합 의장이 국가보안법 성립배경, 피해사례 및 경험 등의 내용으로 국보법 폐지에 대한 기

조연설을 하였다. 뒤이어 이적표현물 입수탐독 혐의로 구속된 노태훈씨 사건에 대한 경과보고,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살인죄로 구속된 외대 배병성 학우 대책위의 성명서 발표, 사노맹사건 관련 수배자의 보고가 있었다. 이어서 김근태씨가 국보법으로 인한 왜곡된 현실, 사법부의 굴욕적 태도 등에 대한 연설을 하였다.

오후 8시에는 '노래마을'이 주관하여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노래공연」이 있었다.

한편 명동성당 입구에서는 단식중인 양심수에게 염서보내기 운동을 전개하면서 염서와 선전물을 나누어주고 있으며, 「김춘도 순경 사망사건」 배병성 학우 무죄석방을 위한 외대 학생대책위에서 무죄석방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이후 일정
4일(수) 오후3시, 가두홍보 오후7시, 장기수환마당
5일(목) 오전10시 정리집회 오후3시 대전교도소 집회 (연락처:763-2606)

유가협 박정기 회장
국순단 부단장 맡아

유가협은 4일 오전 11시 천안역에서 거행되는 '93 국토순례행진단 발대식에 참가한다. 유가협 박정기 회장은 국순단 부단장의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8월 6,7,8일에 범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에서 마련하는 통일장터(장소:연대)에 결합하여 의문사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일 예정이다.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 8월 5일 결성!

북한 방문 등과 관련해 국보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현재 재판과 받고 있는 황석영씨의 석방 촉구 활동을 펼치기 위한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민예총 강당에서 결성된다.

신경림(시인) 민족문학작가회의 회장, 염무웅(비평가)·강연균(화가) 민예총 공동의장, 김원일 펜클럽 한국본부 인권옹호위원장 등 문화예술분야에서 각계를 대표하는 인사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정계와 재야, 문화계 인사 등 200여명으로 꾸려진다. 대책위는 문인 등 문화예술인, 재야, 정계, 독자 등 5천여명 규모의 석방 탄원서명을 받아 청와대에 보내 예정이다. 아울러 9월 중에는 「황석영 문학의 밤」 행사를 개최할 계획이다.(작가회의:313-1486, 민예총:743-5873)

『유서사건 총자료집』 한정 200질 판매중

「유서사건」 강기훈씨 무죄석방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 '유서사건'의 수사기록, 공판기록, 기타 성명서 및 책자, 신문 등 보도내용 등을 망라한 총 2700여 페이지의 방대한 『유서사건 총자료집』을 3권 200질 한정판으로 출간하였다. 총자료집의 가격은 3권 1질당 10만원이다.

서울지역은 직접 배달해 준공대위는 앞으로도 신청이 들어올 경우 직접 배달한다는 방침이다. (주문처: 766-1163)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 천정배·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노태훈씨(29세,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대위 상근간사, 인권운동사랑방 실무자)는 국보법 위반혐의(이적표현물 입수·탐독)로 경찰청에서 8일간 조사를 받고 23일 검찰로 송치되었다. 검찰은 31일 또다시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8월 11일까지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받았다. 이에 노태훈씨 변호인단은 즉각 석방을 요구하는 구속적부심을 청구하였다.

구속적부심 청구 요지: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영장에 적힌 범죄사실의 요지는 "피의자가 1991. 11. 말쭙-1992. 5. 말쭙 사이 에 청구 보안감호소 출소를 지휘키 위한 공동모임이 제작한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제2호, 제3호를 얻어 소지하고, 1992. 장기수 김도한이 지은 시조를 모은 『육중일월』을 얻어 소지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노태훈씨에 대한 실제 수사내용은 증거제시도 없이 일본에서 연 '양심수 서화전' 때 북한 관련자를 만나 지령을 받는 등 '간첩' 활동을 하였다 는 것이다. 검찰은 7월 23일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 7월 26일까지 '이적표현물'에 대한 수사를 마쳤고, 27일 이후에는 '간첩'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피의자의 자백만을 요구하고 있다. '이적표현물 소지' 행위를 처벌하는 국보법 규정은 민주주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으로 위헌효이다. 그리고 '이적표현물 소지죄'의 성질상 관련 증거를 모두 압수함으로써 더이상 인멸할 증거가 없고, 증거가 일정하며 시

민인권운동 단체의 실무자로 일하고 있어 도망할 우려도 없다. 더구나 이미 구속영장 발부의 기초가 된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에 대한 검찰의 조사는 마무리되었다.

검찰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터무니없는 사실을 수사할 목적으로 '이적표현물' 부분에 대한 수사를 빙자하여 피의자를 구속하고 있고, 이러한 편법과 국가권력의 남용은 더이상 남용되어서는 안된다. 이 건 구속의 계속 문제는 과거의 불행을 청산하고 민주적 형사사법 체계를 확립한다는 차원에서 심각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공안사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구속기간 연장 신청에 대하여 거의 자동적으로 허가해온 관행은 과감하게 시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은 위법한 수사절차에 의한 인신의 구속은 절대로 안된다는 사법부의 의지를 국민과 수사기관 앞에 천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카톨릭 정보센터 국제연대활동 워크샵 개최

카톨릭 자료정보 센터에서는 93년 상반기 해외연대 활동에 대한 성과를 정리하고 향후전망을 모색하고 국제연대활동을 워크샵을 개최한다.

- 1. 주제: 가톨릭 운동의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중간공유와 검토
- 2. 일시: 1993. 8. 7. 오후 4시-1993. 8. 8. 오전 10시
- 3. 주제발표 내용
 - 1) 현 국제정세의 특징과 국제연대활동의 의의
 - 2) 경험사례 발표
 - 비엔나 세계인권대회 참

윤금이 공대위 소식

「주한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708-4181),에서는 주한미대사관, 주한미군사령부에 1)살해미군 엄중처벌, 2)미국의 사과와 정당한 배상, 3)미군범죄 근절대책 마련, 4)불평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을 요구하여 왔다.

국민 모두를 경악시킨 끔찍한 살인범 마클 이병에 대한 '공정한 재판권 행사와 살해미군 엄중처벌을 위한 서명운동'에 9만여명이 참가하였고, 연인원 3,000여명이 재판을 방청하였다. 마클 이병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불구속 상태로 항소심이 열릴 예정이다. 그 이유는 『한미행정협정, 본문 22조 5항의 "피의자가 미군 관할하에 있으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고 한국에서 구금중이라도 미군이 요청하면 재판이 끝날 때까지 미군이 구금"하게 되어 있는 규정과 "합의의사록" 22조 9항의 "한국 구치소 시설이 미국 요구에 충족되어야 한다"(냉장고, 양변기가 있는 감방이 없기 때문에)는 조항에 따라 마클 이병을 구속할 수 없었다.

알림

1. 클린턴 미국대통령에게 사과와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열서보내기 운동
*7월 16일부터 매주 금요일 오후 6-8시 YMCA 앞
2. 공대위는 '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로 전환 예정이며, 그 기금을 마련하고 있다.
(조흥은행 325 - 01 - 149967 대책위)
3. '상설기구' 기금마련을 위한 김지숙씨 연극 「로젤」(8월 16(월), 18(수)-20일(금), 오후 7시30분)이 대학로 충돌 2 소극장에서 공연된다.
4.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자료집 『우리들의 금이』를 판매함(미군범죄사, 한미행정협정에 대한 분석, 윤금이씨 사건관련 자료 등 수록)

가 경험

- 문화운동의 국제연대
- 아시아정의평화운동 위크샵 참가 경험
- 4. 토론
- 진보적 가톨릭운동과 진보적 국제연대의 관계 (연락처:322-9122)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간하는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타 편집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의사개진도 실을 예정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민가협·범추본 명동성당 농성 속보

가두선전 및 장기수 한마당 가져 한총련 단식단 농성 참여

범추본과 민가협이 공동 주최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연대농성」이 8월 4일로 2일째를 맞이하였다.

이날 진행된 농성일정은 11시부터 12시까지 출소장기수 8명과 농성 참가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고, 2시부터 3시 사이에는 옥중장기수에게 열사쓰기를 진행하여 70여 매를 주최측에서 모았다. 이후 명동 일대에서 가두 홍보를 벌였다.

7시부터 열린 「장기수 한마당」에는 출소장기수, 민가협, 한총련 단식단, 양심수 후원회, 천정련 장기수 후원회, 민정련, 사노맹 관련 석방자 동지회, 민자통 등에서 3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 행사에서는 옥중장기수에게 쓴 모범열서 발표회, 참가자들의 장기 자랑, 20여분의 출소장기수와 가족 소개, 양심수

후원회의 노래공연 등이 있었다.

한편 농성 본부에서는 농성지원금 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예금주/민가협, 제일은행 151-10-074730).

한총련 구국 대단식 들입
8월 4일부터 13일까지

연대농성 2일째인 8월 4일 한총련 산하 「범민족대회 성사와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한총련 구국 대단식」, 참가자 40여명이 명동성당 농성에 결집하였다.

이번 한총련의 단식농성은 범민족대회의 합법화와 대중화 및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을 알리는 목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8월 13일까지 10일동안 100여명이 참석하는 단식농성 기간에서는 시내에서 거리홍보와 민주단체를 방문하여 단식농성의 의의를 알리는 활동을 벌인다.

노태훈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심리가 8월 5일(목) 오전 11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5호 신문실에서 열린다. 지난 3일 천정배·이오영변호사가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바 있다.

(서울구치소 수번 158번) 『시사저널』 8월 4일자에 "문민과 경찰은 '따로국밥'이라는 제목하에 노태훈씨에 대한 경찰과 검찰의 케어맞추기 수사를 고발하는 기사가 실려 있다.

천정련 장기수후원회
지리산 3박3일 수련회 가져

천주교 정의구현 전국연합 산하 「장기수후원회」에서는 7월 31일부터 8월 3일까지 지리산에서 출소장기수 6명과 후원회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회를 가졌다.

이번 수련회는 출소장기수인 이종환, 이세균씨 등 6명과 수녀, 40대 부부, 회사원, 학생 등이 다양하게 참가하였다.

「장기수후원회」는 400여명의 후원회원이 있으며,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평화의 일꾼』을 800여곳에 보내고 있다.(322-6075)

『민주법학』 6호 발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진보적인 법학연구자들의 모임인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7월 26일 『민주법학』 제6호를 발간하였다.

『한국 진보법학의 현황과 과제』라는 특집 아래 헌법·형법·노동법·파스주의법학을 소주제로 다루는 등 총 15편의 글이 실려 있다.

민주주의 법학연구회는 올 11월중에 『민주법학』 제7호를 발간할 예정이다.(766-1163, 740-4500 이상수)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

엠네스티 한국지부(053-426-2533)는 7월 31일부터 8월 1일까지 용인중앙경제연구원에서 여름 전국교육대회를 열었다.

8월 5일부터 14일까지 보스턴에서 열리는 엠네스티 국제총회에 김현수 부지부장, 오완호 사무국장 등 3명이 참석한다.

한편 한국지부는 지난 6월 12일 대전에서 「국가보안법과 인권」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 세미나에는 민주당 정기호의원, 민변 정덕진 변호사, 한국지부장 허장수 등이 기조발제를 하였다. 또한 세미나 참석자 일동 명의로 국가보안법에 관한 의견도 채택되었다.

「장기수후원회」는 400여명의 후원회원이 있으며, 매달 발행하는 소식지 『평화의 일꾼』을 800여곳에 보내고 있다.(322-6075)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 민교협·학단협 등 5개 단체

울산대 교수인 조국씨는 지난 6월 23일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과 관련하여 서울경찰청에 연행되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었다. 이에 민교협·학단협을 비롯한 5개 단체는 8월 3일 「조국교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유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동의장 : 김대환 인하대, 김진균 서울대, 허평길 부산대 교수)를 결성하였다.

공대위에는 민교협, 학단협 등 5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다. 지난 7월 8, 9, 14일에 8개 단체가 합의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엘네스티는 7월 16일 조국교수를 양심수로 선정하고 소속 회원들에게 합의서한 발송 등 석방에 필요한 제반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또한 공대위는 지난 7월 16일 1차 자료집 「프로크루스테스 침대에 갇힌 스물아홉의 교수」 400부를 발간·배포하였고, 8월초에 리플렛 7000부를 제작중이다. 조 교수의 기소만기일 다음 날인 오는 12일 오전 10시에 세실레스토랑에서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공대위는 앞으로 「조국교수 석방 요구 서명운동」과 「국가보안법 학술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6월 25일 오후 6시경에 법정시한인 48시간을 훨씬 지나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고, 지난 7월 13일 장안동 대공본실에서 검찰로 송치되었다(서울구치소 수번 118번).

경찰은 수사 초기에 조국교수를 사노맹의 핵심간부로 보고 이를 입증하기 위하여 관련자들의 증언 확보에 주력하였다. 그러나 '사

과원' 관련자 전원이 사노맹과의 관련성을 부인하고, 경찰 또한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자 '사과원'을 사노맹과는 다른 독자적인 반국가단체로 발표하였다.

가족과 변호사에 따르면 조 교수는 ①사과원의 조직원과 운영위원이 아니며, ②조 교수가 책임자라는 '강령팀'은 '사과원'에는 존재하지도 않고 팀장을 맡은 지도 없다. ③따라서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적도 없다. ④'사과원'은 '사노맹'의 하부단체가 아니며 서로 노선도 같지 않다. ⑤이와 같은 점을 살펴볼 때 '사과원'은 "정부를 참칭하거나 국가를 변란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의의 결사 또는 단체"인 '반국가단체'(국보법 제3조)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상에 비추어볼 때 이 사건은 재판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인정여부를 둘러싸고 치열한 법정공방이 벌어지리라고 예상된다.

(공대위 : 888-3683)

◆◆◆ 동 정 ◆◆◆

▣ 강기훈씨 사건 담당 변호사였던 이석태 변호사(덕수합동법률사무소)가 1년동안의 미국 유학을 마치고 7월 31일 귀국하였다.

♣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 발간하는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참여로 더욱 빛날 것입니다.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나 기타 편집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연락을 주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의사개진도 실을 예정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극 거부에 항의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명동성당 연대농성단은 8월 5일(목) 오전 10시에 연대농성 해산식을 하고 이어 농성단 본진은 대전교도소로, 민가협 회원중 일부는 가족이 있는 각 교도소로 출발하였다.

오후 2시 30분에 대전교도소 앞에 도착한 농성단 150여명은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어 소장 면담신청과 단식농성중인 세계 최장기수 김선명씨, 장기수 최하종씨, 전 전대협 의장 송갑석씨에 대한 절전신청을 하였으나, 8월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에 대전교도소 양심수들은 절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3일부터 5일까지 해은 단식을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전해왔다. 결의대회 참가자는 교도소측에서 접견을 거부할 경우 밤샘농성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가 대구교도소, 광주교도소, 부산교도소 앞에서도 있었다.

대구에서는 절전 요구를 거부하였으나 오후 늦게 한철수씨와 강용주씨에 대한 절전을 하고 7시에 해산하였다.

광주에서는 11시부터 집회를 가졌고, 장기수 한명씨에 대한 절전신청을 하였으나, 8월 5일 밤 11시 30분 현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한 가운데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8월 6일에 안양·마산교도소, 8일에는 전주교도소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작가 황석영씨 석방대책위원회」가 5일 오후 2시 낙원동 민예총 5층 강당에서 동료문인, 재야·정계인사 등 412명의 대책위원으로 결성되었다.

결성식에는 가족, 작가회의 신경림 회장 등 동료문인들과 문익환 목사, 김근태씨, 유원호씨 등 100여명이 참가하였다.

신경림씨의 인사말, 경과보고 및 활동계획, 황석영씨 아들 황호준군의 인사말 등의 순서로 결성식이 진행되었다.

대책위는 양심수에 대한 대서면 요구, 국가보안법의 즉각 철폐, 집필활동의 자유보장 등을 주장하는 성명서를 채택하였다(관련기사 2면).

한 가운데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결의대회」를 가졌다.

그리고 8월 6일에 안양·마산교도소, 8일에는 전주교도소에서 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황석영 대책위」 결성 8월 5일 민예총 강당

8월 10일(화) 오후 6:30-9:00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522-7284)과 한교협 인권위(744-3717)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 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현 변호사가 기초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향교수,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이상안 치안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노태훈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현 변호사 출두

지난 7월 15일 노태훈씨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영장제시를 요구하는 조용환·백승현 변호사에 대한 감금과 노태훈씨에게 폭행을 행사한 경찰청 보안국 소속 7명의 수사관에 대한 고소 고발인 조사가 6일 오후 4시에 서울지검 권혁중 검사방에서 진행된다. 고소, 고발장을 7월 16일에 낸 바 있다.

건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

8월 10일(화) 오후 6:30-9:00 기독교회관 2층 대강당에서 민변(522-7284)과 한교협 인권위(744-3717)에서 공동으로 주최하는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공청회가 열린다. 공청회는 '시위현장에서 사망 사건 등의 불행한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집시법 등 사회전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마련한다.

백승현 변호사가 기초발제를, 김경남 목사가 사회를 맡는다. 민자당 백남치 의원, 민주당 강철선 의원, 서울대 구철향교수,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이상안 치안연구소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다.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노태훈씨 구속적부심 기각

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서울형사지방법원 이홍복 부장판사(배석: 안영진·서정걸 판사)는 노태훈씨 담당변호인 천정배, 이오영 변호사가 8월 3일 제출한 구속적부심을 기각하였다.

서울형사지법 315호실에는 열린 적부심 심리를 노태훈씨 어머니, 민가협 회원, 출소장기수, 조용환변호사, 사랑방 회원 및 노태훈씨가 활동했던 민족진강회 회원 15명 등 30여명이 10여명도 들어갈 수 없는 재판정을 꽉 메운 채 방청하였다.

"경찰은 10일 동안 매일 증거도 없이 재일동포 이철재, 정경모씨, 사진작가 마키타씨, 조무하씨, 손병선씨 등과의 관계를 간첩혐의로 단정하고 자백을 강요하였다. 그러다가 경찰은 결국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문구 몇자를 가지고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송치하였으며, 검찰 또한 7월 26일까지는 '이적표현물' 소지혐의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그후 경찰에서의 수사내용을 매일 반복하고 있다. 일본에서 만난 사람들을 무조건 조총련과 연계되었다고 생각하는 낯은 냉전이데올로기에 젖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였다"고 그간의 수사과정을 밝혔다.

이러 노태훈씨는 "민가협에서 활동하면서 40여년 이상을 감옥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사상이나 이념보다 민족공동체의 일원인 그분들의 자기희생이 중요하며, 사회에 복귀할 때 '빨갱이' '간첩'이란 낙인을 찍는 현실에 안타까웠고, 그분들을 원호하는 것이 젊은이의 책무라고 생각하였다"고 장기수후원

사업을 하게 된 동기를 말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에 대한 소감에 대해서 "지난 군사독재와 관료체제 아래서 관과 민, 개인과 개인, 사회와 사회, 집단과 집단의 불신이 이제 대화의 물꼬를 터가는 상황에서 '책자'를 이유로 구속되었다는 사실이 황당하였다. 국보법 7조 5항 '이적표현물 소지죄'는 이제 사문화되어 가고 있다. 지난해 인권에 관한 정부보고서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심사에서 많은 지적을 받았던 이 조항은 건강한 사회를 회복하는 데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국내외의 우려를 급증시키는 낯은 조항으로 시급히 극복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피력하였다.

퇴직하던 노태훈씨는 "김영삼정부 최초의 이적표현물 소지죄이니 열심히 싸워봅시다"라고 방청석을 향해 외쳤다.

미군범죄 근절대책 촉구

미 대통령에게 엽서보내기 주한미군의 유금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매주 금요일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종로 2가 YMCA 앞에서 클린턴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범죄근절대책을 세울것을 촉구하는 엽서보내기 운동을 펼친다. 엽서는 유금이 공대위에서 나누어준다.

성명서

소위 문민정부가 들어선지 어언 반년이 되어가지만 아직도 3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분단의 쇠창살을 거머쥐고 신음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전국 일원의 교도소와 구치소에서 321명의 정치범들이 "국가보안법 철폐", "도서차입 제한 철폐", "신문검열 철폐"의 정치적 요구를 내걸고 옥중 단식투쟁중인 이 참담한 현실을 과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한단 말인가?

김영삼정부가 주창하는 개혁이 전국민적 공감대를 갖고 실효성을 거둘려면 그리하여 김영삼씨가 모름지기 문민대통령 통일대통령으로 민족과 역사앞에 자랑스럽게 우뚝 설려면, 그 개혁은 모름지기 분단으로 인한 민족사적 고통을 덜어주고 민중의 살림살이를 넉넉하게 해주는 방향으로 자리잡혀야 한다. 알맹이는 없고 겉껍질만 요란히 포장될 때, 과거의 군사정권과 그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그 어떤 지역적인 개혁보다 민족과 민중의 문제를 우선시하는 대승적 자세가 절실히 요청된다고 아니할 수 없다.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전근대적 냉전악법이 여전히 그 위세를 떨치는 한, 군사정권의 정권안보용 희생양으로 손목과 발목이 묶인 정치범들이 여전히 옥방고초를 당하는 한, 우리는 바로 그러한 문민시대 문민정부를 신뢰할 수 없고 그것은 역사와 민족의 앞날을 위해서도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결성식을 맞아 김영삼정부와 국민 여러분에게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1. 남북합의서가 채택되었건만 국가보안법은 여전히 민족의 반쪽을 원수와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민족의 화해와 조국의 자주적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철폐되어야 한다.
2. 지금 옥중에서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는 300여명 이상의 정치범들은 한결같이 군사정권의 정권안보용 희생양들이다. 김영삼씨가 진정 문민시대의 문민대통령이라면 이들 양심수에 대한 대사면을 즉각 단행해야 한다.
3. 우리는 작가 황석영씨의 방북과 해외체류기간에 있었던 그의 제반활동이 외세의 간섭을 남북해외의 단합된 힘으로 돌파하려는 문학적 실천이었다고 확신한다. 안기부와 공안검찰은 악의적인 공소사실 남용을 즉각 취소하라.
4. 작가 황석영씨에게 즉각 집필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라! 그에게 펜과 종이를 달라! 수감된 정치범들에게 필기도구를 주라!
5. 우리는 작가 황석영이 석방될 때까지 세계인권단체 문학예술단체와 연대해 그의 구명을 위한 제반활동을 전개할 것이다. 국가보안법 철폐운동에 온 국민의 뜨거운 동참을 적극 호소한다.

1993. 8. 5.

'작가 황석영 석방대책위원회'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대전교도소 농성단에 폭력행사

손병선씨 딸 방패에 머리 찍혀 부상 6일 오후 접견 후 해산

대전교도소 경교대는 6일 새벽 6시 40분경부터 5일부터 밤샘농성을 벌이던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의 농성단에 무자비한 폭력을 행사하였다.

민가협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30분부터 '책임자 면담'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던 도중 6시 40분경 경교대가 시위대를 덮치면서 방패로 마구 찍었다. 이 과정에서 손민아(31세, 손병선씨 딸)씨가 방패로 머리를 심하게 맞아 15센티 정도 찢어지는 부상을 입었고, "사람 죽는다"고 외치며 막는 구속자 가족들에게 구타를 계속하였다. 또 정양엽(57세, 송갑석 어머니)씨, 유정옥(60세, 백태웅 어머니)씨를 구타하여 실신시킨 후에도 계속 폭력을 행사하였다. 이들 3명은 대전 성심병원에 입원

하여 치료를 받았다. 정양엽씨, 유정옥씨는 6일 오후에 퇴원을 하였으나 손민아씨는 부상이 심하여 계속 치료를 받고 있다. '책임자 처벌' '양심수 면담 실현'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계속하다가 오후 4시경 대표단과의 접견이 이

무어졌고, 5시에 해산을 하였다.

한편 안양교도소와 마산교도소에서 '국보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 결의대회'가 있었고, 대구교도소에서는 5일에 이어 집회를 가졌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

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윤후사에서

지난 7월 21일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 농성을 벌이다가 파고다 공원으로 행진중에 연행된 임성호, 박석진씨 등 8명에 대한 지원을 모색하기 위한 대책위가 결성된다. 임성호씨 등 8명이 연행된 후 가족, 친구, 윤석양 후원사업

회(윤후사, 766-4979) 등이 중심이 되어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을 모색하고, 이들의 양심선언이 군민주화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다가 9일(월) 1시에 윤후사 사무실에서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위원장 김종일, 서울 법무본 조지국장)를 공식 결성한다.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식을 높이고, 국내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탈영이 아니다. 탈영은 군무를 기피할 목적이 있어 야 성립하는데 이들은 잘못된 국방의 의무를 거부하고 군의 민주화를 통해 올바른 군무를 수행하려는 행위에서 양심선언을 한 것이다. 진짜 탈영범인 전두환·노태우씨 등은 그대로 둔 채 양심선언자만을 구속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3.6사면과 석탄철사면 때에도 양심선언자는 전혀 포함되지 않았는데 문민정부라면 이들을 즉각 석방해야 할 것"이라며, 군민주화에 대한 국민홍보활동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대책위는 정기국회에 법개정을 청원준비 작업을 해나갈 예정이다.

대책위는 9일 기자회견과 발족식을 거행하고 기독교회관에서 탑골공원까지 군민주화를 촉구하는 가두홍보를 한다.

법민족대회 기간에는 김법관판을 통해 기금을 마련한다. 9월 중순에는 '일일주점'을 하고 양심선언 내용이 담긴 기념품을 판매할 예정이다(대책위 후원금 계좌:예금주 윤석양 조흥 325-06-129590, 국민 027-21-0474-187)

7월 21일 연행된 양심선언 군인전경이 수감되어 곳은 다음과 같다. 임성호(춘천교도소), 이종수(성동구치소), 박석진(수원교도소), 고대성(11사단 현병대), 이동익(50사단 현병대), 조정희(32사단 현병대), 이재규(천안구치소), 강태중(정주경찰서 대용감방)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양심선언 군인전경 석방 요구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9일 오후 발족 파고다공원까지 행진도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 위한 대책위원회」(766-8828)가 9일 오후 1시 윤석양 후원사업회 사무실에서 발족하였다.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행된 이날 발족식에는 가족과 학생, 대책위원 등이 참가한 가운데 가족인사, 이천재 서울연합 상임의장의 격려사, 김종일 대책위원장(서울법률촌 조직국장)의 인사말, 발족선언문 채택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관련내용 2면).

기자회견에서 “양심선언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과거 군사독재의 버팀목이던 군의 민주화를 위한 노력이었다”고 평가하고, “문민정부는 이런 노력들이 모여 수립되었으므로 김영삼정부는 진정한 군의 개혁을 이룰 의지가 있다면 양심선언 군인전경을 석방, 수

배해제하는 데로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정부는 실정법을 내세우며 이들을 구속, 수배하고 있는데 집단적으로 무장을 하고 군무를 무단 이탈하여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 노태우를 구속,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

하였다. 발족식에 이어 2시부터 5시까지 비가 오는 가운데 기독교회관에서 파고다공원까지 60여명이 참가하여 ‘양심선언 군인전경 석방, 전두환·노태우 구속’ 등의 내용으로 선전·홍보를 벌였다.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

8월 6일(금), 부상자 치료 책임지기로

민가협과 범추본이 공동으로 진행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위한 연대농성」을 6일 오후 5시에 옥중양심수 대표들과 접견 후에 마무리되었다. 장기수인 안학섭(40년 복역), 최하중(32년 복역)씨, 전 전대협위원장 송갑석씨 등과 농성대표단이 권

오한 양심수후원회 회장, 안육회 민가협 상임공동의장, 남규선 민가협 총무와 접견을 가졌다. 안학섭씨는 이날 가족 이외의 외부 인과의 40년만에 처음으로 접견을 하였다. 한편 이날 오전 6시 30분 옥중대표들의 접견을 요구하던 농성단은 대전교도소(소장 김희탁) 경비교도대에 집단폭행을 당하였다. 이때 손병선씨 딸인 손민아씨와 송갑석씨 백태웅씨 어머니 등이 부상을 입어 병원에 입원, 두 어머니는 다음날 퇴원을 하고, 손민아씨는 계속 치료 중이다. 소장은 이러한 폭력에 대하여 부상자에 대한 치료비 일체를 부담하겠다는 각서를 썼으며, 조사를 하여 폭력행사자를 처벌하겠다고 약속하였다.

조국교수 석방 시 요구

국제 엠네스티(AI)는 조국교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긴급구명활동 촉구문을 발표하였다(관련내용 2면). AI는 조 교수를 양심수로 규정하고, 조 교수에 대한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석방을 요구하였다. 또한 김영삼 대통령과 김두희 법무부장관에게 조 교수 석방을 요구하는 편지를 보낼 것을 전세계 회원에게 촉구하였다.

국제연대 워크샵 마쳐

가톨릭 자료센터에서는 지난 8월 7일(토) 5시부터 1박 2일동안 인천교구 가톨릭회관에서 ‘국제연대워크샵’을 열었다. 가톨릭권에서 최초로 열린 이 워크샵에서는 국제연대활동에 대한 공유와 평가가 있었다.

첫번째 주제발표에서 ‘현 시기 국제정세 분석,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함’을 제기하였다. 두번째 주제발표에서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와 아시아지역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

이어 가진 토론에서는 ‘올바른 정보유통구조의 확립과 활동가의 개방성과 헌신성 및 국내상황에 정확한 이해가 요구되며, 각 단체와 부문간에 국제연대 활동에 대한 공유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 선언문 (일부 게재)

문민정부의 첫걸음은 군민주화의 실현입니다. 진정한 문민정부는 군사정권과의 단호한 단절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습니다. 군사통치의 잔재를 깨끗이 청산하고 오욕으로 얼룩진 한국군의 모습을 바로 세우는 일은 현 정부가 진정한 문민정부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입니다. (중략)

5·6공 군사정권하에서 군부와 정치군인들은 병사들의 ‘국방의 의무 수행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여 왔습니다. 정치군부에 의해 변질된 국방의 의무는 병사들의 모든 권리를 박탈해 왔으며, 전쟁도 하지 않는 군대에서 1년에 700여명이나 되는 병사들이 죽어가고 있는 군의 비민주적 구조를 온존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군부와 정치군인들에 대항하여 그동안 44명이나 되는 군인·전경들은 일선상의 수배와 구속이라는 시대의 아픔속에서도 양심선언을 통해 군대에서 빛어지는 온갖 부정과 비리의 진상을 사회에 폭로함으로써 군민주화 와 사회민주화를 실현하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특히 지난 5월 25일부터 7월 21일까지는 임성호 일경 등 양심선언 군인·전경 수배자 8인의 ‘한국군의 5·6공 청산과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농성투쟁이 58일간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군사통치의 잔재가 청산되고 진정한 군민주개혁이 실현될 수 있으리라 기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문민정부임을 자임하는 현 정권은 지난 7월21일 ‘한국군의 민주개혁을 촉구하기 위한 청와대 면담’을 위해 평화행진을 하던 양심선언 수배자 8인을 백골단을 동원해 무차별 연행, 전원 구속하였습니다. 이러한 사태에 대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5·6공 군사정권과 현 김영삼정권이 과연 무엇이 다른지 근본적으로 회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영삼 정권은 군사정권 시절 군대에서 자행되었던 온갖 부정비리를 고발하고 병사들의 권리회복과 군민주화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에 대해 양심선언이 문민정부 출범에 크게 기여했다며 그 정당성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현 정권이 진심으로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한다면 실정법 운운하며 처벌만을 강조할 것이 아니라 먼저 양심선언 속에 담겨 있는 군민주화의 내용들을 실현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양심선언은 탈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중략)

진정한 문민시대는 전면적인 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지금은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기 위한 국민과 병사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의 가족과 윤석양후원사업회, 계속해서 양심선언 군인전경들의 농성을 지원해왔던 학우들이 함께 모여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의 결성을 선언합니다. 본 대책위원회는 앞으로 양심선언자들의 무죄석방과 명예회복 그리고 병사들의 권리회복과 군 민주화의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1993년 8월 9일

국제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AI는 6월 23일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된 조국교수의 즉각적, 무조건적 석방을 요구한다. 우리는 조국교수가 표현과 결사의 권리를 비폭력적으로 행사했음을 믿고, 그를 양심수로 규정한다.

조국교수(29세)는 울산대 법대교수이다. 그는 잘 알려진 법학자이고, 몇권의 연구논문과 책을 출판하였는데 그 제목은 ‘마르크스주의 법학’, ‘사상의 자유’ 등이 있다. 그는 공개적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해 비판해왔고, 바로 그 법에 의해 구금되어 있다. 그는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의 회원이고, 진보적 사회 대개혁안 준비위원회 위원장이다.

6월 23일에 그는 경찰청 보안국 수사관에게 체포되었다. 구속영장은 이틀후인 6월 25일까지 발부되지 않았다. 그는 경찰에 7월 12일까지 조사받고 검찰로 송치되었다. 국가보안법으로 구속되는 수인들은 기소되기 전에 최고 50일까지 구금될 수 있다. 우리는 이 기간이 가혹하다고 생각한다.

조국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사회주의 과학원을 설립했거나 그 구성원이라는 혐의를 받고 있는데 경찰 당국은 이것을 사노맹에 관련된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하였다. 사노맹 성원들은 90년에 구속되어 수감중이며, 지도자는 현재 무기징역을 살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모호하게 규정된 ‘반국가단체’나 혹은 ‘친북한활동’에 대해서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사회주의자 조직과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이나 단체들을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구실로 그 활동을 차단하는데 자주 이용되어 왔다.

AI는 사회주의 과학원이 91년에 설립되어 92년 초에 해산된 단순한 소규모 연구모임으로 알고 있다. 이 단체는 짧은 활동기간에 ‘우리사상’이라는 간행물을 발간했다. 조국교수는 그 간행물 일부의 편집에 자문을 주었을지언정 사회주의 과학원의 구성원이 아니다.

조국교수의 연행은 한국내 인권단체들과 학계에 많은 우려를 불러일으켰고, 조국교수 대책위는 그의 석방을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그의 구속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에 대한 침해이며 따라서 그는 즉시 자유로워져야 한다고 AI는 믿는다.

한고협 인권위 · 민변 공청회

- 주제 :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 일시 : 8월 10일(화) 오후 6:30
-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강당

주요공판 안내

- *10일(화) 2시, 박철연, 3회공판, 417호
- *12일(목) 10시, 이인섭 외 4명, 1회공판, 311호
- *13일(금) 2시, 이진건, 3회공판, 311호
- *16일(월) 2시, 황석영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위안부' 문제 정부 입장 표명 요구

정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공동대표 이효재 등)는 지난 9일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외교현안으로서의 종결'이라는 정부입장에 대한 질의>를 김영삼 대통령 앞으로 보냈다.

이 서한에서 "지난 8월 4일 일본정부의 2차 진상조사 발표는 정치외교적 수사로 종군위안부가 전쟁범죄라는 본질과 법적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2면 참조)

그리고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더 이상 한일간의 외교현안으로 제기하지 않는다는 것이 정부방침'이라고 밝힌 외무부 관계자의 발언에 대해 외무부장관의 국민에 대한 사과와 담당자의 해임을 요구하였다.

이어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배상에 대한 우리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하였다.

한편 같은 날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 박현서 범추본 일본문제특위 위원장, 이해학 범추본 공동의장 등은 '8.15에 즈음한 815

인 민족선언'을 발표하고, 강제종군위안부 단행의 전면공개와 배상, 징용노무자의 미지급 공탁금과 종군위안부 등의 군사우편 저금 반환 등을 일본 정부에 요구하였다.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민변·한교협 인권위가 공동주최한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공청회가 10일 오후 6시30분에 기독교회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김경남 한교협인권위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공청회는 백승헌 변호사의 기초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2면 참조)

안 경찰위원회 위원, 황인성 전국연합 집행위원장 등이 토론을 벌였다. 토론자로 참석키로 한 백남치 민자당 국회의원은 불참하였다.

백승헌 변호사는 기초발제를 통해 대중매체로부터 소외된 집단이 정치적 반대의를 표명하는 중요한 수단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데 악용되는 조항들을 분석하여, 사실상의 허가제인 현 집시법의 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2면 참조)

이어 가진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집시법 개정에 대하여 동감을 표시하였다. 토론자 중 고철환교수는 정치성을 가진 집회를 불허하는 것은 여전히 문명 정부에서도 행정관료와 공안당국의 보수성에 기인한다고 보았다. 이상안 위원은 현 집시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동감하나 법집행자인 경찰은 현존의 법을 지킬 수밖에 없다고 하였으며,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집시법이 오히려 탄압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노태훈 석방요구 잇따라

김영삼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적표현물'소지 혐의로 구속된 노태훈씨에 대한 석방요구가 잇따르고 있다. 영국에 있는 '한국에큐메니칼 교육프로그램', 일본의 '노태훈씨 석방을 요구하는 친구 모임' 등에서 노태훈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한국에큐메니칼 교육프로그램'은 노태훈씨의 구속을 '장기복역 양심수들' 지원하는 활동을 막으려는 처사'로 규정하였다. 일본에서 '노태훈씨 석방을 요구하는 친구의 모임'은 8월 6일자로 이적표현물 소지혐의로 구속하는 것의 부당함을 주장하는 항의서한을 김영삼 대통령 등에 보냈다.

또한 일본에서는 비엔나에서 노태훈씨와 함께 활동했던 변호사들의 서명운동이 벌어지고 있으며, 월간 '세계'지는 9월호에 '세계인권대회 정신에 대한 도전, 회의 참석자인 노태훈씨 구속'이란 제목으로 구속관련 기사를 실었다.

일본정부의 강제종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우리의 입장 (요약)

1. 전체적 논평
전쟁범죄라는 본질을 회피한 발표로서 법적 책임을 지려는 태도를 발견할 수 없고, 책임을 안지는 선에서 부분적 인정을 하고 있을 뿐이다.

2. 일본 발표에 대한 구체적 문제점

1)일본정부는 '소위 종군위안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저의가 무엇인지? 또한 일본 개천여성 위안부들을 같은 범주에 넣고 있으며, 위안소 설치 경위에서도 위안부의 성격 규정이 빠져 있는 것은 문제 본질을 회피하려는 저의이다.

2)위안소가 존재했던 지역에서 조선(당시)과 대만이 빠져 있다.

3)위안부의 출신지

'전시에 이송된 위안부의 출신지로는 일본인을 제외하면 한반도 출신자가 많다'고 되어 있다. 일본위안부는 일본의 공창제 아래에서 위안부가 되었고, 계약이 끝나면 위안부 생활을 그만둘 수 있었다. 일본인 위안부를 은근슬쩍 이 보고에 집어 넣은 것은 강제종군위안부의 성격을 흐리기 위함으로 보인다.

4)위안부의 모집에서의 강제성이 모호하게 부분적으로 인정되었다. '위안부 모집에 관해서는 군 당국의 요청을 받은 경영자의 의뢰에 의해 알선업자들이 한 것이 많으나...업자들이 공모심을 주는 형태로 본인들의 의사에 반하여 모집된 케이스가 많고'에서 강제모집의 주체가 민간업자인 것으로 발표하였다. 1940년 이후부터는 '국민조선총연맹'이라는 단체를 통하여 군, 관, 민이 공동으로 강제모집에 나섰다는 명백한 자료가 있다.

5)위안부 수송

'패주의 혼란상황에서 현지에 두고 떠난 사례도 있었다.'라고 발표하였는데 현지에 방기하고 떠난 사례가 대부분이다.

6)명령체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3. 앞으로의 대책과 요구

1)일본의 새정부는 전후 일본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이 일에 진지하게 임해줄 것을 바란다.

2)한국정부는 진상규명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만큼, 위와 같은 문제점이 많은 보고내용을 지적하고 강력하게 진상규명을 요구해야 할 것이며, 일본의 법적 책임을 요구해야 할 것이다.

3)정대협의 대책활동

(1)93년 8월 1일부터 25일까지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인권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에 대한 진상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제법을 근거로 진상조사와 배상, 책임자 처벌을 요구할 것이다.

(2)정대협 차원에서 '진상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연구 조사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3)일본 검찰에게 곧 책임자 처벌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다.

'건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헌 변호사의 기초발제문 (발췌)

새정부 출범 후 과거에 비해 지배, 피지배 계층 사이의 대립이 완화되고, 그 해결방식도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이러한 기대는 5월항쟁 기념집회 시기에 무너지기 시작하였다. 5.10.경 광주에서 시위 진압과정에서 80여명이 중경상을 입었고, 그후 한총련 출범식 이후 있었던 시위와 진압과정은 과거와 조금도 달라지지 않은 모습이었다.

이러한 상황이 초래된 원인은?

1)행정당국과 시위주최측의 상호불신
2)집시법의 조항 자체에 기인한 문제와, 정치적 의사 표시를 적극적으로 보장·보호해야 한다는 점 소홀

-행사처벌에 의해 신고가 강제되는 허가제의 채택
-5조 1항 2호, 공공의 안녕질서 개념 막연하고 추상적이며, 판단의 권한이 서장에게 일방적으로 귀속
-10조 11조의 집회·시위 시간대 및 장소제한과 12조의 교통소통을 이유로 주요도로 시위 제한

-서장의 금지통고에 대한 구제수단이 형식적이어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3)법률의 적용과정에서의 관료성, 편파성

4)진압과정에서의 폭력성

집시법의 개정방향

1)신고제도의 개선-신고사항 대폭 축소

2)경찰서장의 보완통고제도 폐지

3)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한 금지조항 폐지-사후규제로

4)옥외시위 금지시간 원칙적 폐지-일몰후 활동 보편화

5)금지 장소 대폭적 축소-주요청사 경제지점의 허용

6)금지통고에 대한 사전적예 수단으로 법원의 사전판단 도입

지금까지의 편파적 법집행이 대부분 일선 판서장의 판단에 의한 것은 아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전환이 요구되고, 집회·시위에 대한 전향적인 지침을 마련, 공포하여 시위 주최자들이 그 취지에 맞추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개혁작업의 지속을 위한 법령정비작업에 개정직후부터 논란이 되어온 집시법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이고, 새정부에 걸맞는 집시법으로 바뀌어야 할 것이다.

단체 동정

*천주교 인권위원회, 신임위원장 선출
천주교 인권위는 8월 9일 김형태 전 위원장의 후임으로 최병모 변호사를 선출하였다.

*정대협, 일본 정신대 관련 발표 항의집회
8월 11(수) 낮 12시 30분, 일본 대사관 앞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위안부’ 진상조사·배상 촉구 집회

정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강제종군위안부 진상조사와 배상을 촉구하는 집회’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대표 이효재) 주최로 11일 12시 30분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렸다.

100여명이 참가한 이날 집회에서 이효재 정대협 공동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일본정부의 책임회피성 진상조사를 규탄하고 과거 만행에 대한 배상을 촉구하였다. 이어 종군위안부로 끌려갔던 김순덕·심미자 할머니는 ‘국민학생을 강제로 끌고가서 고문하고 강간하여 나의 인생을 처참하게 짓밟았다’며 ‘이런 만행을 저지른 전쟁책임자들을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절규하였다.

정대협은 ‘48주년 8.15를 맞이하여 한일 양국에 고한다.’라는 성명서에서 “우

리는 한·일 과거사의 상징적 사건으로 대두되어 있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인식과 처리를 통해서 한·일간에 그리고 아시아에서 평화와 인권, 정의를 실현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양국 정부에 대해 일본 정부는 “강제종군위안부는 여성을 성노예로 만든 제도로서 여성의 인권과 존엄성을 짓밟은 명백한 전쟁범죄임을 시인하고 사죄 및 법적책임 이행할 것, 일본 국회에 ‘전쟁범죄 규명 및 배상특별위원회’ 설치 및 법적 해결, 종군위안부의 전체 규모와 명령자와 명령체계 등을 포함한 철저한 진상조사” 등을 요구하였으며, 한국 정부에 대해서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일본정부에게 촉구할 것,

우리 정부 내에서도 강제종군위안부·근로정신대에 대한 조사를 위한 예산과 행정조치 마련, 일본의 군사대국화 방지와 핵보유를 막기 위한 대책 마련 및 일본의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반대, 정부 차원의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정책 취소 및 민간 노력의 적극 지원”할 것을 촉구하였다.

한편 참가자들은 집회를 마치고 탑골공원까지 시위 행진을 하였다.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검찰(김영한 검사, 서울지검 공안1부)은 8월 11일 울산대 조국 교수를 ‘반국가단체인 사노맹 산하단체 사회주의과학원을 구성하여 그 운영위원으로서 활동했다는’ 혐의로 국가보안법상의 ‘반국가단체 구성죄’를 적용하여 기소하였다. 이것은 지난 6월 23일 장안동 대공분실로 진행된 후 50일만의 일이다.

이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합의23부(부장판사 김왕식, 배석판사 홍기태, 이상민)에 배당되어, 이미 6월 11일 구속되어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기소된 황주석씨와 병합되었다.

조국 교수의 변호인(천정배 변호사 등)들은 곧 보석신청을 낼 예정이다.

국보철 시민한마당 열려
12일 6시 연대 노천극장

범주본 국가보안법 철폐특별위원회가 주최하는 ‘국보법 철폐를 위한 시민한마당’이 12일(목) 오후 6시에 연세대학교 노천극장에서 열린다.

이 행사는 ‘장기수 선생님과 만남’ ‘류금신씨의 노래’ ‘상황극’ ‘춤’ ‘열림굿 ; 국보철 비나리’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진행된다.

여성단체 한 건물로 이사
‘여성 평화의 집’ 마련

대표적인 한국여성단체들이 3년동안의 준비 끝에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여성 평화의 집’을 마련하여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다. <한국여성단체연합> 등이 많은 여성단체들이 한 곳에 모이게 따라 연대운동 등을 전개하기가 더욱 쉬워질 전망이다.

▷주소 및 연락처 <우편번호 100-391 중구 장충동 1가 38-94 한국여성단체연합 279-6891 여성민우회 269-5763/6 여성의 전화 269-2962/4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275-8505 한국여성학자협의회 275-7754 기독교민회, 기독교 여성평화연구원, 한국여성사회교육원 등도 입주한다.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매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

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6공때 각종 시국사건으로 수배를 받은 학생 등 40여명은 지난 10일 연세대에서 ‘전국 정치수배자 총회’를 열어 ‘6공 정치수배 문제해결을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 89년 이철규 열사 사인진상규명 시위관 기자회견을 통해 6공 정치수배의 일괄해제 등을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검찰의 태도는 지조와 양심이 생명인 정치수배자를 개별화시켜 수배문제를 해결하려는 군사독재적 발상”이라고 규정하고, “청산돼야 할 군사독재 시절의 유산인 양심수의 전원석방, 국가보안법 등의 악법철폐, 정치수배자의 일괄해제”를 촉구하였다. 아울러 대책위는 6공

정치수배 문제를 풀기 위해 검찰총장과의 면담의사가 있음을 밝히고, 12일 오후에 면담요청서를 검찰총장에게 보냈다. 대책위에서 밝힌 농성투쟁 계획안은 다음과 같다.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요구하는 서명운동 전개 및 정기국회에 청원. -14일,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 촉구대회’(연세대) -17일, 명동성당이나 기독교회관에서 농성.

-20일, 청와대에 진정서 및 탄원서 제출. -8월말이나 9월초에 민가협 등과 공동으로 6공 정치수배 해제 지지집회. 대책위 대변인 권오중씨는 검찰의 입장변화가 없으면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작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농성에는 4년째 수배중인 정은철(임수경 방북사건 관련)·조정신씨 등을 비롯하여 40여명이 농성중이다. (2면 명단 참조)

‘사회주의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

황주석·조국씨 등 기소내용에서

‘사회주의과학원’ 사건으로 기소된 황주석·조국(울산대 교수)씨 등 관련자 전원이 병합심리된다(서울형사지법 합의 23부, 공소

담당검사 함커용). 이들에 대한 기소내용은 1)반국가단체(사파원) 구성 혐의 2)반국가단체와의 회합 통신(백태웅과 ‘회합통신’) 3)반국가단체 가입 반포(사파원의 기관지 ‘우리사상’을 편집) 등이다. 조국교수 대책위는 “검찰에서 ‘사파원’을 ‘반국가단체’인 사노맹의 하부조직으로 몰아가다가, 결국 사파원을 독립적인 ‘반국가단체’로 기소하는 것은 표적수사의 모순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조국교수는 ‘우리사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매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상’의 편집자문에 응한 사실은 시인하였으나 그밖의 기소내용은 모두 부인하고 있다.

손민아씨 사당의원에 입원

지난 6일 대전교도소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던 중 대전교도소 경비교도대의 폭행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은 손민아(손병선씨 딸)씨가 대전성심병원에서 9일 서울 사당의원 302실로 옮겨서 치료를 받고 있다. 같은 날 실신하여 입원치료를 받았던 정양엽씨(송갑석씨 어머니), 유정옥씨(백태웅씨 어머니)는 후유증으로 계속 통원 치료중이다.

종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지난 8월 9일부터 10일까지 도쿄에서 종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합동연구회’가 열렸다고 정대협은 12일 알려졌다. 정대협의 윤정옥 공동대표, 배금자 대한변협 일본 전후책임문제 위원 등과 일본의 ‘전쟁자료 책임센터’의 우에스끼 사토시 사무국장 등이 참가하였고, 10일 오후 3시에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연구회의 성과를 발표했다. ‘종군위안부에 대한 강제성, 지휘 명령 계통 문제에 대한 역사적 사실과 법적 이론적 측면의 양방향에서 활발한 토론’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내렸다.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범민족대회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범민련 사무실(기독교연합회관 913호)에 대한 압수수색이 12일(목)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50여분 동안 서울경찰청 육인동본실 보안수사대의 14명의 수사관에 의해 실시됐다. 서울지법 오준석 판사가 발부한 국가보안법 위반·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실시된 압수수색에서 범민련 회의록, 유인물, 디스켓 등 30명치를 압수해갔다. 그리고 조홍은행 연지동 지점

과 농협 동대문 지점 등 3곳에서 이창복 의장 명의의 입출금 관련서류를 압수했다. 한편 범민족대회 남측 추진본부는 12일 오후에 공동본부장단 회의를 열고 경찰의 대회불허 및 원천봉쇄에도 불구하고, 정부에 대하여 대화와 협의를 요청하고 비폭력 평화적 방법으로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13일 예정이던 범민족대회 개막식을 연기하여 14일 오전 10시에 열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조정신 : 89년 수배, 이철규열사 사인진상규명 관련.
- 권오중 : 90년 수배, 조국통일 촉진그룹 사건.
- 정영훈 : 91년 수배, 전대협 정척위원.
- 송인호 : 92년 수배, 범청학련 관련.
- 안영민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 정우식 : 91년 수배, 범민족대회 관련.
- 권용상 : 91년 수배, 6.3의대사건 관련.
- 임헌태 : 91년 수배, 강경대열사 시위 관련.
- 정은철 : 89년 수배, 임수경씨 방북관련.
- 정상용 : 91년 수배, 6.3의대 사건 관련.
- 정철 : 91년 수배, 6.3의대 사건 관련.
- 김영하 : 92년 수배, 범청학련 관련.
- 송옥 : 92년 수배, 대선 선거법 관련.
- 박홍근 : 92년 수배, 국보법·집시법 관련.
- 이철상 : 91년 수배, 집시법·국보법 관련.
- 최홍재 : 91년 수배, 국보법 관련.
- 송인배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관련.
- 손용의 : 89년 수배, 부울총협 프락치 사건.
- 최종해 : 91년 수배, 91년 5월 투쟁.
- 하정우 : 92년 수배, 특수공무집행 관련.
- 이상진 : 91년 수배, 91년 5월 수배.
- 이명곤 : 91년 수배, 박승희·성용승 방북관련.
- 윤종화 : 90년 수배, 90년 5월 투쟁.
- 김종철 : 90년 수배, 90년 5월 투쟁.
- 윤진호 : 90년 수배, 90년 5월 투쟁.
- 김억남 : 90년 수배, 90년 9월 집회.
- 윤영덕 : 91년 수배, 특수공무집행방해.
- 배수창 : 92년 수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정보성 : 92년 수배, 총선관련집회 및 시위주도.
- 박선택 : 92년 수배, 집시법·공무집행방해.
- 강찬선 : 92년 수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박용 : 92년 수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 손병호 : 92년 수배, 범청학련 건설.
- 송진환 : 92년 수배, 범청학련 결성.

기로 결정하였다. 대회를 원만히 마칠 수 있도록 대통령 결단을 요구하는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의 서한을 청와대에 보냈다.

국보법 한미당 장소 옮겨 진행

12일 오후 6시에 연세대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

김영삼 대통령 귀하
우리는 범민족대회가 남·북·해의 7천만 동포들이 모여 분단의 고통을 하루속히 종식하고 통일의 길을 열고자 하는 민간차원의 순수한 염원의 의지의 결집장인 만큼, 이번 대회를 준비함에 있어 그간 군사정권 하에 서와는 달리 민과 관이 합당한 대화와 협의하에 성공적으로 치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하였습니다.

이러한 기대는 "어떤 동맹국도 민족보다 소중한 수 없고 어떤 사상이나 이념도 민족보다 더 큰 행복을 가져다줄 수 없다"고 문민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자신이 취임사에서 밝힌 확신에 찬 민족애에 기인하였습니다. (중략) 그리고 대전엑스포 개막식에서 대통령께서 신한국 창조의 희망찬 내일을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범민족대회 개막식에 참석하여 분단된 남쪽의 대통령으로서가 아니라 새로운 통일의 시대를 여는 통일 대통령으로 우뚝 서주시기를 소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8월 4일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전국 각 지역에서 국토순례대행진을 비롯한 다양한 행사를 합법적이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평화적 방법으로 시민들의 통일여의와 함께 어우러지는 분위기 속에서 진행시켜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7월 24일 치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범민족대회의 불허방침을 발표하고 8월 4일에는 3자실무회담 불허, 8월 11일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회장소를 원천봉쇄하는 방침을 정하였습니다.(중략)

우리는 교착된 남북관계에 민간차원에서라도 작은 활로를 열기 위해 소모적인 정부와의 마찰과 대립을 피하고자 끝까지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3자실무회담을 불허한 상황에서 불행한 충돌을 피하기 위해 8월 9일 대표자회의를 통해 범민족적인 단결의 취지를 분명히 하면서도 범민족대회의 동시 분산개회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범민족적인 화해와 단결을 지향하는 우리로서는 뼈를 깎는 아픔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회장소로 예정된 연세대학교를 전투경찰로 완전 봉쇄하고 있는 불행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중략)

대통령의 통일여의에 반하는 일부 공안세력의 구시대적 발상과 행동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이를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13일로 예정된 범민족대회 개막식을 14일로 연기하면서라도 원만한 대회진행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기다리겠습니다.

1993년 8월 12일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씨 기소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씨 석방촉구

노태훈씨가 11일(수) 기소되었다. 그동안 검찰은 13일(금)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해왔으나, 일정을 바꿔 11일 기소한 것이다. 노태훈씨 사건은 서울형사지법 4단독(재판장 안경진)에 배당되었으며, 담당 검사인 함귀용검사는 조국교수와 황석영씨 사건을 담당하고 있다.

일본의 변호사들, 대통령 등에게 항의서한 보내

일본의 아즈사와 가즈유키 변호사를 비롯한 41명의 변호사들은 주일한국대사관에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장관, 김효은 경찰청장 앞으로 보내는 노태훈씨 구속에 항의하는 서한을 접수시켰다. 주일한국대사관 법무담당관 박영관검사는 11일 이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서한에서 변호사들은 "노태훈씨를 무조건적이고 즉각적으로 석방할 것"과, "연행시에 변호사들과 노태훈씨에 대한 폭행이 행해졌는지 여부를 조사하여 책임을 물을 것" "기소를 하지 말 것" 등을 요구하고 있다.

양심수서화전 운영위, '간첩 조작' 시도에 분노 표시

'한국양심수 서화전(92년 5월-93년 1월, 일본) 운영위원회'는 지난 11일(수)에 노태훈씨 구속에 대한 서화전 운영위원회의 입장을 밝혔다. 서화전 운영위는 성명에서 "우리들이 주최한 '서화전'은 조총련과는 아무런 연계도 없으며 한마디로 말해서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이다. 8명을 불법적으로 연행하고 1명(노태훈

씨)을 구속한 것도 큰 문제이거니와 무엇보다 한국의 민주인사들이 일본에 오기만 하면 조총련과 접촉했다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하는 낡은 수법을 여전히 쓰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서화전은 등 103명이 추진하고, 국제사면위원회 일본지부가 적극 협찬하여 열린 것"이라고 해명하였다. 이어 "터무니없는 조작사건을 가능하게 하는 국가보안법을 폐지할 것"과, "부당하게 구속된 노태훈씨를 비롯한 모든 양심수를 석방할 것"을 요구하였다.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

한총련에 따르면 지난 9

일 범추본 국토순례단이 대전교도소 앞에서 재소자 면회와 양심수석방을 요구하는 농성을 벌이던 중 경교대의 충돌로 송근석씨(부산대 무기재료공학 2) 등 6명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4명이 구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이날 오전 8시 30분에 대전교도소 앞에 도착한 600여명의 국토순례단은 9시에 소장과의 면담에서 송갑석씨, 강기훈씨 등에 대한 면회를 약속받았으나 이를 파기하자 농성에 들어갔다. 10명이 교도소 정문에 올라가 걸터앉은 등 농성을 계속하던 중 경교대가 갑자기 정문을 밀치고 나와 2명이 정문에서 땅으로 떨어져 부상을 입었다.

한편 농성단은 이날 오후 7시경까지 '연행자 석방'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이다가 최루탄을 쏘는 경찰에 밀려 해산되었다.

구속자 명단 : 박상진(경남대 사회 1), 구동우(울산대 철학 1), 유남호(산업공학 2), 김성규(철학 2), 김효성(서원대 중문 2).

안 내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사무실 이전 예정 일시 : 8월 18일 (수요일) 주소 : (137-079) 서초구 서초동 1592-2 센추리 2 오피스텔 704호 전화 : 522-7284, 팩스 : 522-7285 (이전과 동일함)

□ 황석영씨 1심 3회 공판 16일(월) 2시, 서울형사지방법원 311호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매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외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2면 전제)

엠네스티 본부(런던)는 93년 소식 97호(8월 13일자)에서 김영삼 정부 출범 후의 한국 인권상황을 "암울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평가에서는 "새정부가 들어선지 몇달 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몇건의 구속사건이 발생하였다"고 지적하였다. 그 예로 "노태훈씨가 당국이 친북한이라고 간주하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자를 소지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는 것,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해 온 조국교수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혐의로 기소"된 것, 그리고 "단지 정부의 허가없이 방북했다는 사실로 재판받고 있는" 황석영씨의 경우를 들었다.

황석영씨 3회 공판

황석영씨에 대한 1심 3회 공판이 16일 2시부터 서울 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황석영씨가 일본에서 접촉했다는 사람이 과연 친북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변호인(한승헌·김동현·박성기 변호사)의 반대신문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담당재판부는 합의 25부(재판장 양삼승 부장 판사)이고, 담당검사는 함커용 검사이다.

또한 "지난 6월 단병호씨를 비롯한 전노협 지도부 역시 노동자의 자주적 단결권을 가로막는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수배되어 있다"는 사실을 추가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또한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가로막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의 조항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러한 법률로 구속된 한국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촉구하였다.

성순희씨(손병선씨 부인) 투병 끝에 사망

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성순희씨가 15일 저녁 8시 30분에 세브란스병원에서 사망하였다. 남편인 손병선씨의 사건과 관련 수배를 받고 피신중 지병이 악화되어 지난 7월 7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여 담도암으로 판정받아 투병중이었다.

성순희씨 가족은 '남한조선노동당 사건'으로 손병선씨(전 민중당 조통위원장)와 둘째딸인 손민영씨는 구속되어 재판중이고, 셋째딸 손민아씨는 지난 6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 시위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부상을 당해 사당원에 입원중이었다.

김수환추기경 등 많은 사람들이 인도적 차원에서 남편과 딸의 석방을 탄원하였으나, 정부는 손민영씨를 단 하루만 석방하여 면회를 하였고, 손병선씨는 자신이 구속된 후 면회

협, 참교육 학부모회, 평화통일연구회 등이 "고 성순희 여사 장례위원회"를 구성하였다(집행위원장 김준기 신구전문대 교수). 발인은 19일이며,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배병성씨 변호인 보석신청

지난 7월 1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폭행치사' 혐의로 구속된 배병성(한국의국어대 경영정보학과 3년)씨의 변호인(이기욱, 백승현, 유선호 변호사)은 지난 13일(금) 보석을 청구하였다.

재판부는 서울형사지방법원 합의 24부(재판장 부장 판사 배동걸)이다.

*「인권하루소식」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각 단체의 사업, 행사, 동정 등을 알려주십시오.

주요공판 안내

- *17일(화) 10시, 김천태,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 *17일(화) 4시, 진선옥, 국가보안법 위반, 311호
- *17일(화) 10시, 김황영, 국가보안법 위반, 309호
- *17일(화) 2시, 이상옥, 국가보안법 위반, 423호
- *17일(화) 10시, 최은정, 집시법 위반, 321호
- *17일(화) 10시, 김중호 외, 특가법위반, 318호
- *17일(화) 2시, 김철우 외, 특가법위반, 318호
- *17일(화) 4시, 정덕진, 특가법위반, 318호
- *18일(수) 10시, 안영모 외, 특가법위반, 318호
- *19일(목) 박동수 외, 국가보안법 위반, 317호
- *19일(목) 4시, 김태홍 외, 국가보안법 위반, 414호

알림

□불교인권위 이전
불교인권위가 새 사무실로 이전을 하였다. 110-130 종로구 청진동 201-1 진학회관 806호
전화 : 720-4359 팩스 : 725-0452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관서 한국정치범 구원연락회」(장의균씨를 지원하는 모임 등 8개 단체)는 14일 '8.15 특사'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였다.

연락회는 성명에서 "한국에서 문민대통령이 탄생되면서 제일한국정치범을 감옥밖에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로 가슴이 설레었으나, "새정부 출범 후 세번에 걸친 특사에서 제일한국정치범이 한명도 석방되지 않은 사실"을 볼 때, "한국정부가 진정 민주화 실현의지를 갖고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분노를 표시했다.

또한 8월 11일에 기소된 노태훈씨 사건에 대해서는 "노태훈씨가 소지하였다는 책자는 누가나 입수하여 읽고 있는 것"으로, "이들 이유로 기소한 것은 명백히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이문옥 전 감사관에 대한 구형공판이 서울형사지법 424호실에서 김진일판사의 심리로 2시에 열렸다. 이날 이문옥 전 감사관에게는 징역 1년이 구형되었다. 선고공판은 9월 6일 2시이다. 이문옥씨는 재판후 선고공판에 대해 "상식과 양식이 있는 재판부라면 당연히 무죄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내창열사 4주기 추모식

89년 8월 15일 거문도에서 의문사를 당한 이내창열사의 4주기 추모식이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한양대에서 15일 오전 8시 중앙대 학생, 유가족 회원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8월 12일 한국정부는 광복절을 맞이하여 사면을 실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엠네스티는 대부분의 양심수가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한다. 신정부가 출범한지 몇달동안에 표현과 결사의 자유와 관련하여 여전히 투옥되는 일이 생기고 있다. 한국정부는 정치범을 구금하는데 자주 사용되는 국가보안법의 개정 요구를 목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저는 신한국 창조의 꿈을 가슴깊이 품고 있습니다. 신한국은 보다 자유롭고 성숙한 민주사회입니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입니다." 이 말은 2월 25일 김영삼 대통령의 취임사에 있는 말이다. 김영삼 정부의 개혁의 약속은 긴급하고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간과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 엠네스티는 상당히 실망스럽다.

최근에는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을 벌이는 인권활동가 등의 양심수가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구속되었다. 황석영씨는 4월 27일 구속되어 현재 재판중이다. 그는 단지 정부의 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는 사실로 오랜 기간의 형을 받을 운명에 처해있다. 또 다른 양심수인 인권운동가 노태훈씨는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 한국 대표단으로 참여하고 주수후에 체포되었다. 노태훈씨는 당국이 친북한이라고 간주하는 장기복역 출소자가 만든 책이나 유인물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었다. 조국교수는 6월 23일에 체포되어 금지되어 있는 사회주의 그룹과 관계가 있다고 의심받은 사회주의과학원을 이끌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있다. 조국교수는 형법학이나 사상의 자유에 관한 많은 저작을 가지고 있는 유명한 법학자이다. 그는 공공연히 국가보안법을 비판하고 있었다.

한국정부는 엠네스티나 기타 인권단체가 국가보안법 폐지를 촉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폐지 의향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엠네스티는 국가보안법이 정부반대자를 친북한적이며 국가안전에 대한 위협이라는 구실로 투옥하는데 자주 사용되어 왔다고 생각하고 있다. 1년전 유엔 인권위원회는 국가보안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론 지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 규정되어 있는 권리를 완전히 실현하는데 중요한 장애가 된다고 판단되는 국가보안법을 단계적으로 폐지시키기 위한 진지한 시도가 있어야 한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를 받은 수인은 지금도 장시간의 신문과 수면방해를 받는다. 1989년 이후 8명의 군출신자들이 '양심선언'후 군을 탈영했다는 이유로 7월 21일에 체포되었다. 그 중에 몇명의 양심선언 사건은 1989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양심선언'의 내용은 군과 한국사회의 정치적 인권적 상황의 개선에 관한 것이었다. 그들의 대부분은 전부경찰 부대에 배치되어 그들의 양심에 반하는 의무를 수행하도록 강요받았다. 양심적 병역거부는 한국에서 인정되고 있지 않으며 그에 대신하는 대체 업무에도 그들은 종사하지 못한다. 엠네스티는 그들을 양심수라고 생각하고 있다.

노동조합원과 노동자들은 결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법률에 의하여 계속 체포될 운명이다. 6월초 전노협의 여러 성원에 대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되었으며 그 중에는 전노협 의장 단병호씨가 포함되어 있다. 단병호씨에 대한 혐의는 노동쟁의에 제3자 개입을 금지하는 노동쟁의조정법 위반이다. 이 조항은 전노협이나 기타 연합체가 조합원들에게 그들의 권리나 임금교섭의 지도에 관하여 충고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는 조항이다. 3월에는 ILO가 한국정부에 대하여 제3자 개입 금지 조항은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기능에 대한 "심각한 억압"이라고 하면서 그 철폐를 요구했다.

한국정부는 또한 70년대부터 80년대의 과거 정부에 의해 장기간의 형을 선고받은 20여명이 넘는 양심수의 사건들을 조사하지 못했다. 그들은 고문을 받았으며 국제적 기준으로 볼 때 아주 짧은 재판을 거친 후 유죄판결을 받았다. 그들 중 일부는 지금도 무기징역형을 살고 있다. 그들의 일관된 주장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유죄판결을 받았고, 지금은 잊혀져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엠네스티는 한국정부에 한국의 양심수들을 전원석방하라고 촉구한다. 또한 표현 및 결사의 자유, 수인들을 부당하게 대우하게 하는 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등의 조항을 개정하도록 촉구한다. 또한 과거 정부에서 잘못 재판한 사실을 조사할 것을 긴급히 요구한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손병선씨 일시 석방 불투명”

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씨 48시간 일시 석방

9개월간의 수배중에 악화 된 건강으로 끝내 사망한 성순희씨의 임종을 지켜보지 못한 남편 손병선씨는 장례식 참석여부마저 불투명한 상태이다.

16일 손병선씨의 담당변호사인 한승헌 변호사가 대법원에 일시 구속집행정지 처분을 청구하였으나, 대법원은 담당재판부(재판장 김주원 대법관)가 늦게 정해져 기록검토 등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18일 오전 9시 20분경에 결정을 한다고 밝혔다.

손병선씨가 수감되어 있는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는 “만약 손병선씨가 석방되지 않는다면 강도높은 투쟁을 벌이겠다”고 하면서 “문민정부하에서의 이런 인륜을 무시하는 비인도적 처사에는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둘째딸 손민영씨에 대한 백승헌 변호사의 일시 구속집행정지처분 신청을 재판부가 받아들여 17일 저녁 48시간의 시한부로 일시 석방되었다. 「전교조 교사가족회 전국

부회장 고 성순희여사 장례위원회」가 고문에 문익환, 백기완, 박순경, 박형규, 위원장에 김준기, 정해숙 등 7인으로 구성되었다. 발인은 19일 7시에 하며, 장지는 마석 모란공원이다.

유가협, 범민족대회 기간 국회청원 서명운동 벌여
김용갑열사,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 추모비 건립 추진

유가협은 범민족대회 기간인 14-15일 양일간에 걸쳐 '의문사 전면 제조사 국회청원 서명운동'을 벌여 만명의 서명을 받았다.

5월 1일 노동자대회부터 시작한 서명운동은 전국 각지에서 많은 호응속에 진행되고 있다. 유가협은 각지의 서명용지를 취합하여 9월 정기국회에 의문사 전면 제조사를 청원할 예정이다.

한편 「동우전문대학 김용갑열사 추모사업회」는 김용갑열사 명예졸업장 수여와 추모비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도 추모비 건립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중앙대 안산캠퍼스에서 9월 1일 추모비 건립 기공식을 갖는다.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한교협 인권위원회 사무실에서 '한국군의 5·6공청산과 군의 민주개혁'을 촉구하며 58일간 농성을 벌이던 양심선언 군인·전경 8명이 지난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구하며 평화행진을 하던 중 전원 연행된 바 있다.

이들중 강태중 일경과 이동의 일병이 재판일정이 확정되었다.

강태중 일경(정주경찰서 대용감방 수감): 기소 7월 28일, 전주지방법원 정주지원 8월 19일 오전 10시, 변호인 광주 장광수변호사.

이동의 일병(대구 50사단 현병대 영창 수감): 8월 23일 군사법원, 변호인 대구 최동태 변호사.

91. 4. 15. 6공 녹화사업을 폭로하는 양심선언을 했던 최흥기 이병(93. 3. 25. 구속)이 지난 8월 10일 대전 고등군사법원에서 1심에서 마찬가지로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장호원 육군교도소에 수감중이다.

▶ 단체 소식 ◀

- 주한미군의 윤금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후원회 및 자원봉사자 모집(전화: 808-4181)
계좌번호: 국민 813-24-0127-031 이지영
- 전국연합 인권위원회 수련회
일시: 8월 21일(토) - 22일(일) 장소: 청평댐
- 천주교 정의구현전국연합 수련회
일시: 8월 21일 - 22일 장소: 전주 고산성당
-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새 실무간사 소개
박순환(29세), 성대 3년 제적, 부천에서 청년운동
- 박원순 변호사 귀국
2년여의 활발한 활동을 마치고 16일 귀국

알림 : 오늘도 참다운 인권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여러 단체와 개인에게 연대의 인사를 전합니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매일 발간하기로 하였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의 공유는 각 단체 및 개인들간의 연대의식을 높이고, 국내의 인권현실을 개선하는데 힘이 될 것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대법원 손병선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18일 오전 11시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원 대법관, “구속집행정지” 처분 기각결정

결정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간첩죄 주범혐의이기 때문에”라고 공보실 설명,

비인륜적 결정에 대하여 각계 분노, 법원의 개혁의지 상실

손병선씨의 담당재판부인 형사2부(재판장 김주원 대법관)는 18일(수) 오전 11시 변호인(백승헌 변호사)이 청구한 “구속집행정지”처분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내렸다.

결정문은 공개되지 않았으며, 공보실에 따르면 “손민영씨와 고 성순희씨는 간첩죄 혐의로 재판 및 수배중이었으나 종범이었고, 손병선씨는 주범혐의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허결정이 내린 것 같다”고 설명을 하고 있다.

이번 결정에 대하여 “고 성순희씨 장례위원회”나 서울구치소 “옥중투쟁위원회”에서는 분노를 표시하며, 이에 대한 강도높은 대응을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17일(화) 청와대 사문수석실에서는 석방에 대한 의견에 대하여 “석방될 것이 확실하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한편 안기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을 나타내듯 대법원에 “결과”에 대한 문의를 수차례 한 바 있다고 전해진다.

김주원 대법관 약력

37년 출생 59년 고시 11시 합격

60년 서울대 전기공학과 졸업

63년 춘천지검 검사 64년 서울지검 검사

73년 사업연수원 부원장

75년 법무부 법무과장

85년 서울고등검찰청 차장검사

86년 대검찰청 총무부장

87년 대검찰청 검찰부장

88년 대법관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씨, 부인 장례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대법원의 반인륜적 결정
구습 못 벗어나
대법원 형사2부(재판장
김주한 대법관)가 18일 오
전 11시 손병선(남한조선
노동당사건으로 대법원 상
고중)씨에 대한 “구속집행
금지”처분을 기각하여, 손
병선씨는 15일 사망한 고
성순희(손병선씨 부인)씨
의 장례식에 참석할 수 없
게 되었다. 같이 구속된 들
째 딸 민영씨는 17일 오후
에 2일간 석방되어 장례식
에 참석할 수 있게 되었다.
고 성순희씨는 손병선씨
에 대한 불고지죄 혐의로
9개월간 수배생활 중에 건
강이 악화되어 지난 7월 7
일 세브란스병원에 입원하
여 담도암으로 판정받았으
나 수술이나 방사선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지난
7월 14일 김수환 추기경은
남편과 딸 민영씨와 특별
면회를 관계당국에 요청하
였으며, 17일에 민영씨만
2일간의 ‘구속집행금지’로
어머니와 면회를 하였다.
이번 대법원 결정에 대하
여 ‘고 성순희씨 장례위원
회’는 “한 사람이 생을 마
감하는 시점에서 그것도
장례식에 가족이 함께 한
다는 것은 인간의 가장 기
본적인 도리이며, 오랜 수
배생활 과정에서 9개월이
넘도록 얼굴 한번 보지 못
한 남편이 부인의 장례식
에 참석한다는 것은 그 무

슨 정치적 이유로도 거부
될 수 없는 지극히 상식적
인 일”이라고 말하면서,
“더구나 독재시대도 아닌
‘문민시대’에 인륜이 거부
되고 상식이 부정당하는
일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
는가”라고 분노를 표시하
며 장례식이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조속한 석방을
촉구하였다.
손병선씨 가족은 본인과
들째 딸 민영씨가 구속되었
으며 부인은 수배중이었
고, 큰딸 민옥씨는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 셋째 딸 민
아씨는 옥바라지를 하던중
지난 8월 12일 대전교도소
앞에서 집회중 경교대의
폭력으로 머리에 부상을
입어 사당의원에 입원하는
등은 가족이 현 분단체제
의 비극을 겪고 있다.

새정부 출범 후 도청사건
처음으로 드러나

창원 현대정공 홍보차장
인 김재갑씨의 집에서 12
일 도청장치가 김영삼 정
부 출범후 처음으로 발견
되었다.
김영삼 대통령은 부산 기
관장 모임 도청사건 처리
에 대하여 단호히 엄벌하
라는 입장을 밝히며, “자
신도 과거 독재정권의 피
해자라고 말하며 도청은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

전노협에 따르면 김재갑
씨의 안방 장식장 밑에 작
은 성냥갑 크기의 안테나
가 달린 도청장치가 붙어
있다가 떨어져서 발견되었
다고 한다. 또한 이 도청장
치는 현재 현상금 500만원
으로 수배중인 황호남(창
원 현대정공 노조위원장)
씨를 붙잡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문가에 따르면
“이번에 발견된 일련번호
가 붙은 이 도청장치는 수
신할 수 있는 곳인 한 곳
밖에 없는 고성능기기로,
이를 이용하여 수신처를
역추적할 수 있다”고 말하
고 있다.

◆ 안내 ◆

- 고 성순희 여사 영결식
영결식 8월 19일 오전 9시, 영안실 광장
영결식 미사 8월 19일 오전 10시, 연희동 성당
장 지 마석 모란공원묘지(민주열사 묘역)
-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 도청사건에 대한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 8월 19일 11시 국회 본관 기자회견실
주 최 : 민주당 · 전국노동조합협의회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를 위한 월례세미나
“내가 보고 들은 해외인권운동” (박헌순 변호사)
일시 및 장소 : 8월 27일(금) 7시, 인권운동사랑방
- 바로잡습니다
11일 호외내용중 손병선씨 상고심 담당재판부 재판장
은 김주원이 아니라 김주한입니다.
“공보실에 따르면” 부분은 “대법원에 따르면”으로 바
로잡습니다.

시 제21차 국제대의원 총회
열려 보스턴, 8월 6-14일

제21차 엠네스티 국제대
의원 총회가 보스턴에서 8
월 6일부터 14일까지 열렸
다. 엠네스티 한국지부는
김현수(회사원) 부지부장,
오완호 사무국장, 고은태
(서울대 환경대학원 박사과
정)회원 등이 참석하였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대
의원총회에서는 임기 2년
의 국제집행위원장에 Ross
Daniel씨를 재선출하였다.
또한 총회는 엠네스티 수
임사항(mandate)의 변경문
제, 조직문제, 재정문제 등
을 논의하였다. AI의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수임사항
에 국적이 다르다는 이유
로 인권이 침해받는 것(예
를 들면 일본내 난민 및
북한국적자) 등을 추가하
였다. 그리고 아시아지역
AI총회를 내년 7월 한국에
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

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립 의원 · 전노협 밝혀

19일 오전 10시 민주당
국회 행정실에서 민주당
강수립 인권위원장과 전노
협은 도청장치를 발견한
현대정공 창원공장 노조
홍보부장 직무대리 김재갑
씨와 함께 도청사실을 고
발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김재갑씨는
지난 8월 12일 자신의 집
안방 문갑밑에 떨어진 도
청장치를 발견하였는데 문
갑밑에는 테이프로 부착시
켜 놓았던 흔적이 선명하
게 남아 있었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작은 성냥갑 크
기인 이 도청기는 무선안
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주
파수 46MH로 대형건물내
에서는 20-30미터까지, 소
형 또는 주택지에서는 50-
60미터까지 도청할 수 있
는 것이다.
전노협 측에서는 “창원공
장 노조위원장인 황호남씨
와 부위원장인 최종호씨를
검거하기 위해 경찰에서
현상금 500만원과 1계급
특진까지 내세우며 검거에
총력을 기울인 점” 등을
불 때, “두 노조간부를 붙
잡기 위해 도청장치를 설
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
하며, “회사측은 노사관계
가 악화될 것을 우려하여
애초부터 고소고발도 하지
않았고 경찰투입에도 반대
하였던 점”과, “구속수배자
들의 원상회복을 위해 탄
원서를 제출하는 등 후유

증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경찰
이 도청기를 설치한 것으
로 보인다고 추정하였다.
한편 이미 구속된 김성동
씨(7월 31일), 주한경 대의
원(8월 3일), 최현철 대의
원(8월 9일) 등이 구속된
경위에 대해서 김재갑씨는
“이들이 나와 전화통화 후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잡
혀감에 대한 테이프 부착시
켜 놓았던 흔적이 선명하
게 남아 있었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작은 성냥갑 크
기인 이 도청기는 무선안
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주
파수 46MH로 대형건물내
에서는 20-30미터까지, 소
형 또는 주택지에서는 50-
60미터까지 도청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김재갑씨의 증언
과 도청기 설치시점을 계
산할 때 이미 구속된 3인
이 도청에 의해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수립 민주당 인권위원
장은 “이번 도청사실 발견
은 김영삼 정권이 수차례
에 걸쳐 도청을 원천적으
로 방지하겠다고한 약속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당차
원의 ‘도청문제진상조사위
원회(위원장 오길록 민주
당 인권위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창원현지에 조사
단을 파견할 것”이며, “이

번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및 책임자 처벌, 도청방지
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전노협과 전국연합은 성
명을 통해 “도청은 헌법상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국민들의 기본적 권리로
보장된 통신비밀의 자유를
경위에 대해서 김재갑씨는
“이들이 나와 전화통화 후
약속장소로 가던 중에 잡
혀감에 대한 테이프 부착시
켜 놓았던 흔적이 선명하
게 남아 있었다며 사진을
제시했다. 작은 성냥갑 크
기인 이 도청기는 무선안
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주
파수 46MH로 대형건물내
에서는 20-30미터까지, 소
형 또는 주택지에서는 50-
60미터까지 도청할 수 있
는 것이다.
따라서 김재갑씨의 증언
과 도청기 설치시점을 계
산할 때 이미 구속된 3인
이 도청에 의해서 잡혔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강수립 민주당 인권위원
장은 “이번 도청사실 발견
은 김영삼 정권이 수차례
에 걸쳐 도청을 원천적으
로 방지하겠다고한 약속이
허구임을 입증하는 것”이
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민주당에서는 “당차
원의 ‘도청문제진상조사위
원회(위원장 오길록 민주
당 인권위 부위원장)”를
구성하여 창원현지에 조사
단을 파견할 것”이며, “이

◆ 안내 ◆

-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투쟁속보 제1호 발간
6공시절 수배되어 길게는 5년에 걸친 수배생활을 해왔
던 40여명은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을 벌이고 있다. 활동의 제약속에서도 각지역 순회서명
운동, 국회의원·출신학교 총장 등의 탄원서명을 받고
있다. 18일에는 이들의 친구들이 모여 ‘수배자의 자유
로운 삶을 위한 모임’을 결성했다. 대책위는 19일 투쟁
속보 1호를 발간한데 이어 이틀에 1회씩 낼 예정이다.
(후원계좌 한일 126-370176-12-001 손인호)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활동가를 위한 월간세미나 일정변경
“내가 보고 들은 해외인권운동” (박헌순 변호사)
일시 및 장소 : 8월 31일(화) 7시, 인권운동사랑방

손병선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지난 15일 사망한 부인
성순희씨의 임종을 지키지
못하고, 대법원의 구속집
행금지 신청 불허로 장례
식에도 참석하지 못한 손
병선씨가 서울구치소에서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안양교도
소에서도 민족해방에국전
선의 관련자인 최호경, 조
덕원, 이철우씨 등이 사망
소식을 듣고 16일부터 19
일까지 4일동안 단식농성
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19일 고인의 남편
손병선씨가 참석하지 못한
체 성순희씨의 장례식은
가족과 민가협 회원 등 100
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오
전 9시 영결식, 10시 영결
미사순으로 진행되었다. 고
성순희 여사의 유해는 오
후 3시에 마석 모란공원 민
주열사 묘역에 안장되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정부, "직업병 외면, 땅투기 부추켜"

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업 결정에 이어 파산결정이 확실시됨에 따라 '직업병 대책 및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원진비대위)와 '원진문제 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원진대책위) 등은 다음 주에 명동성당에서 '원진문제 설명회', '원진문제 해결을 위한 결의대회' 등을 열고, 원진문제

에 대한 종합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할 계획이다. 지난 88년 이래 공식적으로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만 해도 265명이나 된다. 이들 중 이미 퇴직한 만여명 중에서 176명이나 되어 전체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의 66%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퇴직후 23년이 지난 후에도 발병하고 있어,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

이 발병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원진출신 노동자들은 잠재적인 직업병 환자로 인식되어 사실상 취업의 길이 가로막히는 등 이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 원진대책위를 비롯한 노동자들은 "김영삼정부 출범후 원진레이온에 대한 폐쇄 결정에 이어 파산신청까지 하면서 원진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외면"하고 있다며, '원진직업병 특별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양심선언 전경에 징역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첫 재판에서

지난 7월 21일 연행된 8명의 양심선언 군인·전경 중 한명인 강태중 일경이 8월 19일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첫 공판에서 징역 2년을 구형받았다. 강태중 일경은 전북 정읍에서 전투경찰대에 근무하다 92년 1월 15일 기독교회관에서 양심선언을 하였다. 전투경찰대 설치법 9조 1항의 '군무이탈' 혐의로 7월 28일 기소된 강 일경의 첫 공판은 30분만에 검사의 구형까지 끝났다. 강 일경은 최후진술에서, "구타와 기합이 성행하여 차라리 시위진입에 나가는 것이 더 속편했다"며, "이때마다 자기는 인간이기를 부정당하는 자신을 발견"하였고, 부모님의 고향인

정읍에서 농민시위 진압에 나섰을 때 "한 농민이 '너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말을 듣고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양심선언을 결심하였다고 밝혔다. 이어 "나는 정권의 안보를 위해 동원되는 등 군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전투경찰의 역할을 거부한 것"이고, "양심선언은 군무를 보다 잘 수행하기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었다"였다고 하며, "현 정부가 양심선언의 정당성을 인정하면서도 실정법을 이유로 기소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강 일경의 선고공판은 9월 2일 9시 30분에 열린다.

등의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산업은행에서 의정부지원에 원진레이온의 파산을 공식신청하였고, 당국은 원진레이온의 미금·용인 부지 16만여평에 대하여 주택지로 용도변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건설회사들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파산결정에 대비, 원진부지를 싼값에 구입하여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건설할 것으로 보인다.

손병선씨 단식 마쳐

부인 고 성순희씨의 사망 소식을 듣고 차마 곡기를 들 수 없다며 단식을 해온 손병선씨가 20일 오전 면회로 권오현(민가협 양심수 후원회장)씨 등에게 단식을 끝냈다고 밝혔다. 손씨에 의하면 자신의 단식은 부인의 죽음을 애도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정한 요구를 내진 것이 아니었던 만큼 다른 사태가 확대되지 않기 위해서도 복식하기로 결심했다는 것이다.

◆ 안내 ◆

- 황석영씨 1심 4회, 23(월)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이번 공판은 3회에 이어 변호사 신문이 계속된다.
- 김형태 변호사(전 천주교 인권위원장) 20일 출국 김형태 변호사가 1년 예정으로 미국 버클리대 유학차 출국하였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원진, 대책없는 파산 결정 거부 농성 돌입

명동성당, 24일부터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수, 홍성우 등 6명)와 원진노동자 등은 24일(화) 명동성당에서 정부의 대책없는 폐업결정을 촉구하며 농성에 돌입한다. 28일(토)까지 계속될 농성에서 원진대책위와 원진노동자들은 현직 원진노동자의 고용대책을 마련할 것과 원진 직업병 문제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요구한다. 이번 명동성당 농성은 이원주 중에 산업은행에서 수원지법 의정부지원에 낸 파산신청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이번의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한다고 대책위 관계자는

밝혔다. 24일 오후의 농성돌입에 이어, 25일에는 원진대책위 대표자 연석회의를 열어 이후의 투쟁계획과 결의를 다지며, 28일(토)에는 원진문제를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갖는다. 지난 18일(수) '원진비상대책위원회'와 산업은행측과의 만남이 있었다. 여기에서 앞으로 발생할 직업병에 대한 대책에 대해 산업은행 측은 앞으로 5월 현 재까지 278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은 것을 볼때 매년 9명씩 직업병환자가 발생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대책을 세우고 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원진대책위'는 직업병 판정 숫자는 직업병이 발생한 81년 이후부터 기준을 삼아야 되고, 해마다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람들이 증가하는 추세이고, 진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연평균 발병 환자 수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1년 6개월 전에 아무런 질환이 없다고 판정받은 사람중 자각증세를 느낀 12명중 금년 5월의 재검진 결과 6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은 바 있어 언제든지 직업병이 발병할 가능성을 띄고 있다. 88년부터 직업병 판정을 받은 환자와 가족들을 중심으로 보상 등을 요구하는 투쟁을 벌이다가, 직업병 판정을 받은 환자 중에는 91년 1월 김봉환씨가 최초로 사망하자 직업병 인정 기준 완화와 퇴사후 발병에 대한 대책 등을 요구하는 강도높은 투쟁을 벌여 왔다.

케네디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한국의 예로 노태후씨 들어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여러 나라의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부당성에 대해서 인권규약의 규정에 따라 조사할 것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유엔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에 보냈다(2면 참조). 이 의견서에서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의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

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고 주장하였다. 여러 나라의 예를 들면서 한국의 경우에는 노태후씨의 사건을 들고 있다. 한편 미국 하원의 인권을 위한 모임에서 김영삼 대통령에게 노태후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서한을 8월 18일 보냈고, 이보다 앞서 8월 6일에는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이 석방을 촉구하는 서한을 한승수 주미대사에게 보냈다.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0여명 서명 받아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가 11일 연대에서 농성을 시작한 이래 13일째를 맞고 있다. 대책위는 150여명의 각 대학 총장 및 교수들의 탄원서명을 받았으며 앞으로도 계속 서명운

동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대책위는 23일 '지명수배'라는 제목의 자료집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은 '수배자 대책위 결성경과 보고, 수배해제 투쟁의 정당성, 대책위 참가자 신상명세, 국가보안법이 철폐되어야 하는 이유, 임원태(91년 연대 총학생회장)·정은철(89년 임수경씨 방북)씨의 수기' 등이 실려 있다.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23일 오전 10시에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대환 부장판사, 특별검사 김창국 변호사) 303호 법정에서 지난 85년 김근태(당시 민청련 의장)씨를 고문한 전 처안본부 대공수사단의 김수현 전 경감을 비롯한 4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원심에서 징역 5년, 자격정지 5년을 선고받았던 김수현(57 전 경감) 피고인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불법체포, 감금)위반 및 독직, 폭행죄 등으로 징역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또한 원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에서 2년의 형을 선고받았던 김영두(54 전 경위), 백남은(57 전 경정), 최상남(45 전 경위)피고인은 징역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구속되지 않는 않았다. 이날 재판은 88년 12월 법원에 의해 재정신청이 받아들여진 4년 9개월여만의 일이다.

유엔 차별방지와 소수자 보호에 관한 인권소위원회 귀하

45회기 10항

발신 : 이사 Kerry Kennedy Cuomo

의장,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에서는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의 권위 아래 이루어지는 광범위한 인권침해 문제에 소위원회가 관심을 갖기를 기대한다. 두 달전 비엔나 세계인권대회에서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 중동, 유럽 그리고 미국에서 온 85개 이상의 민간단체들이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서 이루어지는 인권침해에 항의하는 결의문에 서명을 하였다. 이 문제는 전세계 많은 나라들의 집요한 권리남용 문제의 핵심적 사안이다. 이들 민간단체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국가안보와 공공질서의 유지를 요구하고 있는 입법은 고문과 자의적이며 무한적인 구금을 포함한 정치적 탄압과 인권침해의 주요도구가 되어 왔다.

세계인권선언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같은 국제적 인권 보호장치는 특히 평화시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 하에 자행되는 인권유린으로부터 개인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러한 인권 보호장치는 다음과 같은 조건없이 정부들의 인권에 대한 제약이 계속된다. 그 조건은 국가안보를 위한 도구의 내용과 적법한 범위를 규정할 것, 즉 이와 같은 인권의 제약을 적용하기 위한 여러 조건을 명백히 할 것 등이다. 우리가 이미 이 회기에서 보아왔듯이 많은 정부들은 그들의 인권침해를 공공질서와 국가안보라는 말로 계속 위장해 왔다. 보통 냉전기 동안에 만들어진 이러한 법률을 옹호하는, 때로 억지스럽기까지 한 이데올로기적 정당화는 이제는 그럴 듯하게 들리지 않는다.

의장,
우리는 국가비상시에 발생하는 권력남용을 소위원회가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선동, 국가안보, 그리고 공공질서에 관련된 상시적 법률을 사용하는 나라가 이와같은 특수상황을 반드시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사실, 많은 신생민주국가들은 그리

한 구시대적 법의 권위하에서 기본적인 권리를 계속 탄압하고 있다. (케냐의 경우 생략)

한국에서는, 세계인권회의에서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에 반대하는 운동을 주도했던 저명한 인권운동가가 이제는 그 자신이 자기나라의 억압적인 국가보안법의 희생자가 되었다. 비엔나대회에 참가한지 몇주 후에 공안경찰들이 그를 그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강제로 연행하였다. 변호사가 경찰이 적절한 영장을 소지하지 않았음을 항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했던 것이다.

그는 결국 대한민국의 국가보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 기소이유는 출소장기수들이 만든 책이나 소책자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것이었다. 그가 체포된 후, 이 출판물의 저자들은 당국으로부터 신문을 받은 후 석방되었고, 압수된 책자들을 돌려받았다. 그것은 노태우씨의 체포와 구금이 자의적인 성격의 것이었음을 더욱 더 증명한다. (티베트의 경우 생략)

의장,
이러한 상황은 이른바 국가안보와 공공질서를 보호한다는 법률이, 그것이 책에 대해 적용되는 한에서는, 사람들의 권리 (특히 의견을 자유롭게 발표할 자유, 모든 종류의 사상과 정보를 구하고 받고 지지하는 자유, 개인의 자유, 신체의 자유)를 탄압하고 자의적으로 구금하는데 이용될 것임을 명확히 보여준다. 나아가서 이러한 법률 아래서 사람들은 종종 장기간 구금당하고 억압적 상황

하에서 심문당하고 가족과의 만남이나 변호사 접견을 거부당한다. 이러한 법률은 다양한 형태와 이름을 취할 수 있지만 그것의 억압적 기능은 동일하다.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을 때조차도 그 자체는 위협적이고 따라서 오싹하고 억압적이다. 그것은 자유로운 토론과 모든 시민의 자유와 권리를 존중하는 사회에 필수적인 정치적, 경제적 활동을 금지하는 것이다.

기본적 권리와 자유의 향유에 광범위한 장애가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국제인권규약에서 명확하게 표명되었듯이 Working Group on Detention을 통해 소위원회가 공공질서와 국가안보 사안의 의미를 좀더 분명하게 해석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로버트 케네디 인권센터는 소위원회가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과 이와 연관된 법률의 문제점을 환기시키고, 기본권과 자유의 향유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기 위하여 이러한 법률을 구실로 한 인권침해에 대한 연구에 착수하기를 요구한다. 감사합니다. 의장

♥ 공판안내 ♥

- 이공순 24일(화) 10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선고공판
- 황경로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유상부 24일(화) 2시, 특가법, 311호
- 신호승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318호
- 박철언 24일(화) 2시, 특가법, 417호
- 문순덕외 24일(화) 2시, 국가보안법, 서울고법 300호, 2심
- 이상훈 26일(목) 10시, 특가법, 319호
- 손원기 26일(목) 10시, 국가보안법, 320호
- 전재순 26일(목) 4시, 국가보안법, 418호
- 김부경 27일(금) 10시, 국가보안법, 318호, 2심
- 김천태 27일(금) 10시, 국가보안법, 423호
- 황석영 30일(월) 10시, 국가보안법, 311호, 5회
- 이동익 30일(월) 10시-오후 2시, 대구 50사단 군사재판, 첫 공판(선고까지 함)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원진' 35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

24일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원진백서'도 간행

원진레이온 노동자와 원진직업병 환자 350여명 등 '원진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동환)는 24일 오후 1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원진노동자에 대한 아무런 대책없이 이루어지는 원진레이온의 파산에 반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지난 18일 원진레이온의 법정관리인인 산업은행 측이 '원진비대위'에 밝힌 잠정안은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 전원에게 검진비용으로 20만원씩 지급하고, 폐업수당으로 통상임금의 6개월치를 지불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원진비대위'의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88년 이래 원진직업병 발병추세가 계속증가하고 있고, 올해 8월에 만도 13명이 직업병 판정을 받은 사실을 강조하면서, "20만원의 검진비용과 6개월치의 통상임금으로 원진문제를 해결하려 한다면 그야말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것"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서 그는 "진실로 원진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수많은 사람의 목숨이 걸린 원진문제를 이렇게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라면서 성실한 태도를 보일 것을 촉구하였다.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밝힌 연도별 직업병 발생 현황은 81년 1명, 87년 4

명, 88년 25명, 89년 11명, 90년 29명, 91년 45명, 92년 92명, 93년 8월 현재 73명 등 270여명이고, 이중 퇴직자가 180여명으로 66%를 차지하고 있다. 이로 볼때 원진직업병은 퇴직자 중에서 더욱 많이 발생하는 진행성 질환으로서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지난 7월 20일, 21개 노동관련단체가 모여 결성한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원진레이온 문제가 해결과정에서 문민정부가 진실로 노동자의 고통을 함께하려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원진문제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산업화의 과정에서 생긴 어두운 그림자"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언제 직업병이 발병할 줄 몰라 불안과 초조에 떨며, 취업이 가로막혀 먹고 살길이 막연한 원진노동자들의 목소리를 원진정부가 외면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농성기간중 청와대, 노동부, 재무부, 민자당 등 정부기관 항의방문이 이루어지는 한편, 25일(수) 9시에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대표자 연석회의가 개최되며, 28일(토) 3시에는 '원진직업병 대책과 재취업 보장을 촉구하는 산재직업

병 추방결의대회'가 명동성당에서 있을 예정이다.

백서발간
한편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이 농성투쟁에 발맞춰 <어제는 산업역군, 오늘은 산업폐기물>이라는 제목의 약80쪽에 이르는 원진직업병 백서를 펴내어 오늘부터 배포에 들어간다. 이 백서는 원진레이온 회사의 역사소개, 직업병 환자와 작업환경, 직업병 환자 발생현황, 직업병 인정과정, 원진레이온의 폐업에서 파산신청까지의 경과, 원진노동자들이 요구하는 '원진직업병 특별법(안)'의 내용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원진레이온 투쟁의 생생한 역사를 담고 있다.(천원: 0346-67-3010)

속초 동우전문대 분규예고 김용갑열사 추모비건립등 요구 단식농성

24일, 속초 동우전문대학 '동우전문대 학원사랑협의회', 회원 정영석씨등 7명이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90년 3월에 재단비리를 날카롭게 비판하다가 의문사한 당시 총학생회장 김용갑 열사의 추모비 건립과 명예졸업장 수여, 그리고 91년 학교측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의 횡포에 항의하여 분신을

김국혜씨 폭행미군, 30일 선고

지난 5월 29일 서울 역삼동에서 레벤호프 주인 김국혜씨를 폭행해 뇌졸중상을 입힌 미2사단 존 로저 병장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8월 30일(월) 11시 서울형사지법 321호에서 열린다.

징역 7년을 구형받은 로저 병장은 한미행정협정의 본문 22조 5항에 따라 미국측의 요청으로 한국경찰로부터 신변이 인도되어 현재 미군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민가협' 수련회, '유가협' 호남지부 총회

'민가협'은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수련회를 30일-31일에 충북 영동군에 있는 월유봉에서 갖는다. 또한 '민가협' 산하 '양심수 후회회'도 28일-29일에 대성리에서 수련회를 갖는다.

한편 '유가협' 호남지부는 지난 22일 광주 망월동 묘역에서 5차 정기총회를 가졌다.

준 조

'양심수의 대모' 김한림여사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

가평군 군청직원·경찰이 장애인 무차별 구타

지난 8월 10일 오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대한콘도앞 대로변에서 가평군청 직원과 전투경찰 등 250여명이 '대한성인장애인자립복지협의회'(회장 이규달, 이하 '성장협', 974-5248) 소속 장애인 20여명을 집단폭행해 물의를 빚고 있다.

군청측의 집단폭행 사실은 폐로 유아야유편한이 사건은 지난 23일 군청 직원이 몰대포를 쓰고 쓰러진 장애인을 주먹과 발길질 등으로 무차별 구타하는 장면이 텔레비전 뉴스에 공개되면서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으로까지

비유될만큼 커다란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10일 폭행을 당한 성장협 장애인들은 "지난 8월 7일 회원 김대연씨가 장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서울 워생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수술비 등 기금조성을 위해 가평유원지에 야시장을 열고자 군청을 방문해 협조를 요청했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행사를 치르지 못하게 해 이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서울로 철수하려

사건 직후 성장협 장애인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이규달, 이하 '비대위')는 24일 11시부터 100여명의 장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동성당에서 '폭력행위 책임자 처벌, 구속된 김충겸 석방, 생존권 보장, 정부·여당의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를 벌였다.

비대위 측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사회, 문민정부를 외치면서 출범한 김영삼 정부에서 집단적 폭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장애인을 탄압하는 작태"에 대해 분노를 표시하고, "40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김충겸의 석방을 위해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2면 참조).

한편 김영삼 대통령이 직접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문책'을 지시할 정도로 파장이 커지자 경찰청은 24일 정수훈(31)씨 등 청원경찰 4명을 형사입건하고 편파수사에 대한 감찰을 지시했으며, 경기도는 연중훈 가평군수에 경고조치를 취하는 등 뒤늦게 부산을 떨기도 했다.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장애)씨는 이날 의정부 구치소에 구속, 수감됐다. 성장협의 이훈우 정책실장은 "아무리 장애인들이 불법행위를 한다고 해도 폭행이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하며 불법을 행하지 않도록 선도해야 할 공무원들이 목발조차 빼앗긴 장애인에게 4-5명씩 달려들어 집단폭행을 한 사실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군 부모 수배 중인 폭행혐의(1주일 진단),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경찰은 25일 김춘도순경 사망사건과 관련하여 지난 7월 29일 증인에 대한 증거보전재판에서 검찰측 증인으로 나온 목격자에 대하여 폭행을 가했다며 안옥희 민가협 공동의장과 배병성(외국어대)씨의 부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으로 수배조치를 내렸다.

갑자기 열린 재판에는 부모와 안옥희 의장 3명만이 참석하였으며, 민가협에 따르면 "안 의장은 증인의 옷자락을 붙잡고 울부짖는 배군의 어머니를 위로한 사실밖에 없다"고 밝히면서, "배병성 사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애써온 민가협에 대한 탄압"이며, "배병성군을 김순경사건의 범인으로 만들기 어려워진 검찰이 당사자 부모와 민가협의 발목을 묶으면서까지 배군을 제2의 강기훈으로 몰고가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수배조치를 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수배조치 철회 및 민가협에 대한 탄압공작을 중단하라고 주장하였다.

김찰이 폭행행위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증인은 1주일의 진단이 나왔다. 한편 배군의 부모는 26일 백승현 변호사와 서울지검 강력부에 출두할 예정이다.

민가협은 25일 즉각 이번 수배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이 사건은 김순경 사망사건과 관련 배병성군이 구속되어 배군의 재판이 열리기 전에 갑자기 검찰의 증거보전을 위한 심리가 열렸던 것이고 자식을 살인범으로 모는 증인에 분노한 어머니가 증인신문이 끝나 퇴정하는 증인을 향해 순간적으로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부모를 수배까지 한 것은 인륜에 어긋나는 처사"라고 주장하였다.

속초 동우전문대 파행적 운영 학내신문 사전검열, 전재욱이사장 금품제공

'동우전문대 학원사랑협의회' 회원들은 25일에도 '학내 신문기사 사전검열 폐지', 91년 학내측의 사주를 받은 폭력배들의 횡포에 항의하여 분신을 한 '정연석군의 치료비 보장', 90년 의문사한 정연석군의 '명예졸업장 수여 및 추모비 전립' 등을 내걸고 25일 이틀째 단식농성을 벌였다.

1년에 6번 발행하는 학내신문에 대해 사전검열을 실시하고 있으며, '신문방송비'라는 명목으로 4160명 전원에게 학기당 2,500원을 거두어들이면서 내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장과 졸업확인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등 다른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재욱 이사장(전국 전문대학협의회 회장)은 금품

수주적 등으로 미국에도 피종인 모영기 전 대학평가원장에게 8,0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였으며, 이 돈은 94년 3월 개교 예정인 속초 4년제 동우공과대학 허가과 관련한 청탁비라고 학생들은 밝히고 있다. 또 전 이사장은 포천경성전문대 학장(이사장 전재욱 모)도 맡고 있다.

한편 24일 이정실 교수(식품영양학과, 여)는 농성 중인 학생의 부모에게 "아들이 데모를 하니 데려가 송비"라는 명목으로 4160명 전원에게 학기당 2,500원을 거두어들이면서 내지 않은 학생들은 졸업장과 졸업확인서 등을 발급하지 않는 등 다른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전재욱 이사장(전국 전문대학협의회 회장)은 금품

성명서

문민정부 출범으로 소외 계층이나 차별받는 많은 사람들이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라 외치면서 공무원들의 집단폭행 웬말이나!

이땅 400만 장애인들은 누굴 믿고 살아가야 한단 말인가!

민주사회 문민정부 출범을 외치면서 출범한 김영삼정부하에서 이러한 집단적 폭력이 난무하고, 힘없는 장애인을 탄압하는 작태가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는 분노한다.

지난 8월 10일 경기도 가평군 현리 도로상에서 군청직원들 200여명과 전투경찰관 40여명은 보장구없이 걷어다니지도 못하는 10명의 중증장애인들을 전치 4주와 2주 이상의 진단이 나오는 집단적 구타를 행하였다.

우리는 이러한 작태를 400만 장애인들에게, 4천만 국민 앞에 우리의 억울한 입장을 알리고자 한다.

우리 회원중에 김대연씨가 장수술로 인한 합병증으로 서울워생병원에 입원중에 있어 병원비 마련을 위한 행사로서 야시장을 경기도 가평군 상면 덕현리에서 개최하고자 했으나 불법이라는 이유로 허가가 나지 않아 철수하는 장애인들을 가평군청 직원들이 군수와 경찰서장의 지휘하에 무차별 폭력을 가해왔던 것이다.

과연 정부에서는 장애인들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주는 것없이 집단 폭행이 웬말이나!

또한 정책위원장 김충겸씨는 장애인을 구타하지 못하게 나섰는데 터무니없는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구속까지 한 작태는 무엇이란 말인가, 400만 장애인과 4천만 국민들에게 정부의 반장애인적인 행태를 고발하며 힘을 주기를 간절히 부탁한다.

이번 기회로 우리 400만 장애인의 이름으로 장애인들의 생존권을 되찾기 위해, 김충겸 석방을 위해, 군수와 서장의 처벌을 위해 투쟁을 전개해 나갈 것이다.

우리의 주장

- 1. 생존권을 보장하라.
2. 김충겸을 석방하라.
3. 군수와 서장을 처벌하라.
4. 400만 장애인들이여 단결하라, 투쟁하라.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

「인권하루소식」 제호 모집

8월 4일 「인권하루소식」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에 힘입어 26일 현재 준비 17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서툰고 어설플 내용과 편집상의 실수도 있었습니

다. 9월 초순 창간 목표로 편집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권실현을 염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소식지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커 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보내 주시고, 사전에 목차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12명 새로 합류 28일 '가족 상봉의 날' 행사도 갖기로

연세대에서 16일째 농성 중인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전국대책위'는 28일(토) 오후 3시 연대 학생회관 4층에서 수배로 인해 만나지 못했던 가족과 상봉하는 날로 정했다. 이들은 많게는 5년 이상을 가

족과 떨어져 수배생활을 해오는 중이다(361-3664). 11일 기자회견을 갖고 농성동기를 밝히며 35명이 농성을 시작한 이래(「인권하루소식」 8월 13일자 명단 참조) 12명의 수배자들이 합류하였다.

새로 합류한 수배자 명단 (숫자는 수배연도) 이수찬, 한대, 91, 민자당사 집거, 특수공무집행방해죄 김정택, 고대, 92, 범청학원 관련 국보법 이관표, 홍대, 91, 국보법 박동섭, 창원대, 92, 집시법 김형욱, 전북대, 91, 집시법 정진웅, 군산대, 91, 집시법 이태규, 전북대, 91, 집시법 김상준, 외대, 89, 집시법 김기석, 외대, 90, 자민통, 국보법 장용우, 인천대, 91, 집시법 남재현, 대구대, 91, 집시법 유봉식, 전남대, 91, 집시법

알림

조국고수 대책위원회 기자회견 일시: 93년 8월 26일(목) 오전 10시 장소: 세실레스토랑

근 조

'양심수의 폐모' 김한림여사
영전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

- 인권운동 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

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지난 8월 2일부터 27일까
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
고 있는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를 위한 소위원회'(이하 유
엔 차별소위)는 25일 오후
(한국시간 26일 새벽) 투표
를 통해 '결의안'을 채택하
고,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린다 차베즈
(Ms. Linda Chavez, 미국)
를 임명'하여 전쟁중에 일
어나는 조직적 강간 등의
행위를 조사·보고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결정으로 정신대
문제에 대해 유엔 차원에서
처음으로 공식적인 조사가
행해지게 되었다. 이에 따
라 일본에 의한 성노예 범
죄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것이며,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문제에도 영향을 미치

게 될 것이다.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유엔 인권위 차별소위 제
45차 회의 의제 15)에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
권유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강제입신
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
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
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
삼아 특별보고자를 임명하
고, 1차 보고서를 1994년 제
46차 인권소위원회에 제출
할 것 등을 결의하였다. (결
의안 전문 2면 참조)

유엔 인권위원회 등에 정
신대 문제를 끊임없이 제
기해왔던 한국정신대문제
대책협의회('정대협'), 공동
대표 이효재·윤정옥·김희
원)는 이번 회의에 신혜수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 연행

영장제시 없어, 연행 사유 및 장소 안 알려

8월 26일 오전 6시경 민
중정치연합(민정련) 원주
지부 지재근 지부장 및 회
원 등 9명이 신원이 확인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영
장제시 없이 자택과 회사
출근 동안에 동시다발로
연행되었다. 26일 오후 7
시 현재 연행 이유 및 연
행 사실조차 통보되지 않
았고, 연행한 기관조차 확
인되지 않고 있다. 목격자
에 의하면 서울 5383 르망

등의 차량을 이용했다고
한다.
연행자의 인적사항
지재근(민정련 원주지부
지부장, 28세)
이충희(민정련 원주지부
사무장, 27세)
성낙운(회원, 29세)
권상만(회원, 28세)
박용희(회원, 여, 26세)
전훈(회원), 서울에서 연행
공인표·이수진 행방 확인
되지 않은 상태.

원진실상 바로 알리기 행진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

8월 24일부터 명동성당에
서 농성중인 원진레이온
산업재해 환자들은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탑
골공원까지 작업복 차림으
로 '원진레이온 실상 바로
알리기' 운동으로 행진을
하였다. 이와같은 행진은
오늘도 계속된다.

양심선언 군인·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58일간 한국기독교교회관에
서 농성을 하던 8명의 양
심선언 군인·전경들이 7월
21일 청와대 면담을 요청
하기 위해 행진하던 중 전
원 연행된 후 이들에 대한
군사재판이 속속 열리고
있다.

군인·전경 재판일정 안내
이종수, 8월 27일 10시, 동
부지원 1호법정
고대성, 8월 31일 1시, 11
사단 보통군사법원,
임성호, 8월 31일 10시, 춘
천지법

❀ 「인권하루소식」 제호 모집 ❀

8월 4일 「인권하루소식」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에 힘입어 27일 현재 준비 18호를 받
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서툴
고 어설픈 내용과 편집상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9월 초순 창간 목표로 편집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권실현을 염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소식지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커 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등의 간행물을 보
내주시고, 사전에 목차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
습니다.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진보적 법학도인 조국 교
수(울산대 법학과)에 대한
기소를 비판하는 「조국 교
수 석방과 학문·사상의 자
유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
원회」의 기자회견이 8월
26일 오전 10시 세실레스

토랑에서 열렸다.
조국 교수는 지난 6월 23
일 서울시경에 연행되어 8
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혐의
내용은 91년 12월부터 92
년 4월까지 이른바 '반국

가단체'인 사노맹 산하
'남한 사회주의 과학원'의
운영위원으로 가입회원이
로 가입하여 반국가적 이
적활동을 하였다는 것이
다. 조국 교수는 이에 대
해 90년 배태웅을 만나
'과학원' 가입을 권유받은
적은 있으나 이를 거절하
였다고 반박하고 있다.

또한 '대책위'는 "조국
교수를 강제연행한 것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현직 교수를 구속 수사한

것은 중대한 인권침해 행
위이자 공권력 남용"이라
며 지난 시기의 악습을 우
려하면서 "자유로울 수 없
는 다른 관계자의 상황에
서 이루어진 진술 외에 경
찰이 객관적인 물적 증거
가 없는데도 부당하게 기
소한 것" 것은 진보적이고
양심적인 학문사상 활동을
조직 연루로 몰고 가 탄압
하려는 공안세력의 비민주
적·수구적 행태로 규정"한
다고 밝혔다.

유엔 경제사회이사회 유엔 인권위원회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
제45차 회의 의제 15
1993년 8월 25일

현대형 노예제

Ms. Attah, Mr. Bossuyt, Mr. Boutkevitch, Mrs. Daes, Mr. Eide, Mr. Hatano, Ms. Ksentini, Mrs. Palley,
Ms. Warzazi and Mr. Yimer.

결 의 안

1993 /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

차별방지 및 소수자 보호 소위원회는,
비엔나선언과 행동계획, 특히 제2부 B항의 문단 38에서, 무장충돌의 상황에서 여성에게 가해지는 모든 인권유
린, 특히 살해,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강제입신 등은 특별히 효과적인 대응을 필요로 한다고 세계인권대회가
강조한 것을 지침삼고,

여성과 어린이의 강간, 학대 등 가중된 행동을 강력히 비난한 인권위원회의 1993년 2월 23일의 결의안 1993/8
과, 전투상황을 포함한 모든 상황에서 특히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과 인권유린을 비난한 동 위원회의 1993년 3
월 8일의 결의안 1993/46을 기억하며,

동 소위원회가 1992년 8월 14일의 결의안 1992/2 문단 18에서 전쟁중에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들의 상황에 대
한 정보에 관해 사무총장에게 요청한 것을 상기하고,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 제18차 회의의 보고서 (E/DN.4/ Sub.2/1993/30)를 환영하며,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가, 전쟁중의 여성의 성적 착취 및 타 형태의 강제노동에 관해 소위원회에 넘긴 정보에
유의하면서,

1.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Special Rapporteur)로 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에 일어나는 조직적 강간, 성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 등의 상황에 대해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도록 맡길 것을 결정한다.
2. 이 특별보고자가 1차 보고서를 제46차 인권소위원회(1994년)에, 그리고 최종보고서를 제47차 인권소위원회(1995년)에 제출할 것을 요청한다.
3. 이 특별보고자가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심각한 침해의 희생자를 위한 원상회복, 배상 및 자활의 권리에 관 한 특별보고자'가 접수한 문서를 참고하여, 관련된 사실들, 법률적 분석, 결론, 요망사항등을 연구에 포함시 키도록 초대한다.
4.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한 행위에 대한 특별보고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1994년)에 제출하도록 요청한다.
5. 인권위원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인권위원회는 차별방지 및 소수자보호 소위원회의 1993년 8월 ...의 결의안 1993/...에 유의해서, Ms. Linda Chavez를 특별보고자로 임명하여, 내전을 포함한 전쟁중의 조직적 강간, 성 노예 및 노예제와 유사 한 행위의 상황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를 수행하여 그 연구의 결과를 제19차 현대형 노예제 실무회의에 제 출하기로 결정한 것을 승인한다."
6. 경제사회이사회가 다음의 결의문 초안을 채택해 주기를 건의한다.
"경제사회이사회는 인권위원회의 1994년 ...의 결의안 1994/...에 유의하면서, Ms.Linda Chavez를 전쟁중의 현대형노예제 및 노예제 행위, 특히 내전을 포함하여 전쟁중에 자행되는 조직적 강간, 성적 노예 및 노예제 와 같은 행위에 관한 특별보고관으로 2년간 임명하기로 한 인권위원회의 결정을 승인하고, 이 특별보고관이 연구를 완수하는데 필요한 모든 도움을 제공할 것을 사무총장에게 요청한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장의군·김성만등 '자의적 구금'

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유엔인권위원회 산하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는 1993. 4. 30. 국가보안법 위헌결의로 현재 형을 살고 있는 장의군, 황대권, 김성만씨 등에 대한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제5조, 제9조, 제19조, 제21조, 그리고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7조, 제9조, 제14조, 제19조, 제21조에 위반한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결정번호 28/1993 Republic of Korea).

이 결정에 따라 한국정부는 이 사건들을 재조사하여 이들의 인권을 침해하고 자의적 구금을 통하여 사건을 조작한 진상을 밝혀야 할 국제적인 책임을 부담하게 되었다.

이번 장의군, 황대권, 김성만씨의 사건은 그동안 국제인권단체들에 의하여 자의적인 구금과 그로부터 비롯된 강요된 자백에 의하여 이루어진 재판으로 많은 비판을 받았고 국내의 인권단체들의 석방요구가 계속되어 왔다.

실무위원회의 결정은 엠네스티를 비롯한 국제인권단체들의 문제제기와 한국정부가 제출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된 것이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는 1991. 3. 5 유엔인권위원회 결의(1991/42)에

의하여 설치되었다. 실무위원회는 인권위원회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선임하는 5명의 전문가로 구성되며, 자의적이거나 세계인권선언 또는 국제규약에 정해진 국제기준에 위반하는 구금사건을 조사한다.

실무위원회는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정부, 정부간기구 또는 비정부단체, 개인 또는 그들의 친지나 대리인으로부터 정보를 입수하며 객관적으로, 독립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한다. 그리고 그 보고서는 인권위원회에 제출하게 된다.

현재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Louie Joinet이며 위원은 Roberto Garreton, Laity Kama, K.Sibal, P.Uhl이다. 그동안 정부는 실무위원회의 결정내용을 공개하지 않다가, 엠네스티 측에서 이런 사실을 알려줌에 따라 국내에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는 정부가 실무위원회의 결정 사항을 공개하지 않는데 대해 '실망과 분노'를 표시하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장의군, 황대권, 김성만씨를 포함하여 국가보안법에 의한 장기수감의 사건을 전면 재조사"할 것과 "사건을 조작한 책임자들을 처벌하고 피해자들을

구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였다.

이어 "정부가 현재 부당하게 수감되어 있는 피해자들을 석방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유엔을 비롯한 관련 국제기구에 인권침해 사건을 통보하여 고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영장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등 13명 강제연행

울산대 조국교수를 지난 6월 23일 강제연행해 6월 25일 구속시키고, 7월 13일 노태훈·권낙기씨등 8명 을 강제연행하여 조사하다가 연행자를 모두 석방한 뒤 7월 15일 변호사에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노태훈씨를 강제연행·구속시킨데 이어 또다시 적법한 인신구속 절차를 무시한 채 연행하는 일이 벌어져 '문민적 정부'가 아니라 또다시 독재시대로 회귀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27일 새벽 강원도 원주와 서울에서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장 지재근(28세)씨를 비롯한 간부·회원등 11명과 현역사병 등 모두 13명을 '남한사회주의 노동자 동맹' 관련혐의로 연행 경찰은 이들을 영장도 없이

장의군씨는 87년 7월에 일본에 유학중 커국,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 관련일을 하다가 '정치권에 침투한 간첩'으로, 김성만·황대권씨는 미국 유학중 조국의 통일문제를 논의하다가 커국, 반미문제를 실천 하다가 85년 9월 구속된 바 있다. 이는 87년의 민주화운동의 열기를 잠재우기 위해서, 85년 미국문화원 농성 등의 반미운동이 일어날때 이를 차단하기 위한 인신구속이었다는 당시의 의구심은 여전히 남아있다. (사건개요 2면 참조).

강제연행하였으며, 27일 저녁까지도 막연히 강원도경과 서울경찰청에서 조사중이라는 말만하며 소재지를 통보하지 않고 있다.

경찰청 보안국 관계자는 "지난 5월 사노맹 재건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가 사노맹과 관련되어 있다는 혐의를 잡아 이들을 연행하였다."고 발표하였다.

27일 오후 4시 '민중정치연합' 회원 100여명은 서울경찰청을 향의방문해 "경찰이 영장도 제시하지 않은채 '민중정치연합' 간부·회원들을 불법연행해 강제구금하고 있다."며 연행자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경찰은 5시 30경에 향의방문단을 경찰차에 강제로 태워 미사리동 경기도 각지로 떨구어 놓았다.

장의군, 황대권·김성만씨 사건의 개요

장의군

1951년 3월 12일생(43세). 서강대학교 신방과 졸업. 연행 당시 개마서원(출판사) 경영. 1987년 7월 5일 보안사 송파분실로 연행되어 영장없이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다가 1987년 7월 13일 구속됨. 가족으로는 부인과 2남1녀가 있다. 현재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이며 7년형을 선고받았다.

장의군씨는 서강대 재학시절 민족사상의 원류를 찾기 위해서는 한국고대사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80년 2월 졸업후 동년 5월 개마서원을 설립하여 고대사 관련자료를 출판하는 일을 하던중 1985년 3월경 한국고대사 관계 자료수집과 고대사 연구를 위하여 일본유학을 결심하고 1985년 4월 일본 교토대학 인문학부 한일 고대사 연수생으로 등록하여 유학하던 중 김일우(전 조선일보 기자)와 교류하게 되었고 그의 소개로 만난 박사장(신원미상)이라는 사람의 주선으로 조선상고사에 관한 자료가 풍부한 조선대학(조총련계 인민동포가 주로 다니기는 하지만 민한계 동포도 상당수가 다니고 있음)을 방문하여 상고사에 대한 북한자료를 보고 통일문제에 대하여 교수들과 토론하였다.

장의군씨는 민주화운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87년 3월 커국하여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에 관여하는등 활동을 하니까 6·29선언 직후인 87년 7월 5일 영장없이 보안사 서빙고 분실로 불법연행되었다.

1987년 9월 4일 안기부와 보안사는 "정치권 침투 간첩장의군입당 사건"이라는 제목하에 대대적으로 발표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국통일을 위하여 활동한 것이지 적국을 이롭게 하거나 간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의 활동이 북한과 연계되어 있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이 사건이 난 1987년 7월은 6월항쟁으로 독재정권이 극도의 위기에 처해 있었고 대중운동이 급격히 고조되어 있어서 이를 탄압할 명분을 찾고 있었다.

김성만·황대권

김성만 1956년 10월 10일생. 1981년 연세대학교 물리학과 졸업. 82년 6월 도미후 동년 8월 16일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 대학원 정치학 석사과정. 1984년 11월 10일 독일 괴테어학원 기초독일어과정 수료후 커국하여 어학원 강사로 재직중 1985년 6월 6일 안기부에 강제연행되어 8월 5일까지 불법강제구금(60일) 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음. 현재 광주교도소 수감중이며 1988년 사형에서 무기로 감형되었다.

황대권 1953년 7월 7일생. 1982년 2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졸업. 동년 8월 미국 웨스턴일리노이대학 어학과정 수료. 83년 뉴욕 리서치대학원 정치학과 재학중 1985년 6월 초 방학중 일시 커국. 커국한 날 자택에서 안기부 요원에게 강제연행되어 8월 5일까지 불법구금상태에서 고문수사를 받음. 현재 안동교도소 수감중이며 무기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었다.

이종수 일경 재판연기

8월 27일 서울형사지법 동부지원 1호 법정에서 오전 10시에 열린 첫공판이 연기되었다. 하루전인 26일야야 통보를 받은 이 일경은 이날 모두진술에서 하루전에 공판기일이 지정된 것을 지적하면서 재판장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재판장은 모두진술을 제지시키고, 다음 공판을 9월 10일 1시 동부지원에서 열기로 하였다.

유엔세계인권대회 평가회 열려

'유엔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상임대표 홍성우)는 26일 오후 7시 '전국민주화운동 유족협의회'(회장 박정기) 사무실에서 비엔나 세계인권대회를 평가하고, 이후의 인권운동의 진로 문제를 둘러싸고 진지한 논의가 있었다.

원진레이온 결의대회 오늘 3시 열려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는 각 노동단체 회원과 직업병 환자 환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원진직업병 대책과 재취업 보장 및 산재지업법 추방대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명동성당 입구에서 열린다. "결의대회"는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에서 주최하고, '원진비상대책위원회'에서 주관한다.

명동성당 원진레이온 대책을 촉구하는 농성단은 27일 12시 부터 1시 30분정도온몸에 띠를 두르고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 원진실상 바로 알리기 운동을 전개하였다.

'인권하루소식' 제호 모집

8월 4일 '인권하루소식'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많은 분들의 도움과 지지에 힘입어 27일 현재 준비 18호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처음 시작하는 일이라 서툰고 어설픈 내용과 편집상의 실수도 있었습니다. 9월 초순 창간 목표로 편집상의 문제점 등을 보완하고 있습니다. 참된 인권실현을 염원하는 여러분과 함께 할 소식지의 이름을 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귀 단체에서 발행되는 소식지 등의 강행물을 보내주시고, 사전에 목차를 알려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중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무더기 구속·짜맞추기 수사 여전

민정권 '원주지부 사건',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중'

지난 8월 26일 새벽에 민중정치연합 원주지부장 지재근씨등 10명을 영장없이 연행하여 지난 27일 오후 8명 구속하였다. 또 조원길씨를 비롯한 민정권 원주지부 회원 5명을 수배중이다. 또한 현역군인 안준용, 문성호씨등 5명을 연행하여 안준용씨를 비롯한 4명은 30일 밤 9시 현재까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고, 문성호씨는 28일 구속되어 현재 용산기부 부대에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재근·이충희씨의 자택과 민정권 원주지부 문예분회 풍물고습소인 '한올타리'에 대해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수색을 실시하면서 압수목록도 작성해주지 않았다. 민정권에 따르면 구속된 이수진·이충희·박홍렬·전훈씨는 강원도 홍천경찰서에, 지재근·성낙윤·공인표·이은영씨는 강원도 경원주 대공분실에서 수사받고 있다고 한다. 한편 26일 연행되었던 권상만·박용희씨는 27일 오후 7시경에 석방되었다. 권상만씨는 "경찰은 먼저 연행된 것으로 보이는 안준용씨의 진술서를 내보이며, 92년 여름 '사노맹 강원도위' 예비모임에 내가 참석한 사실을 시인하라"고 강요하였지만, "사노맹 강원도위 예비모임을 가졌다는 92년 여름에 나는 수감중이었다"며 안준용씨의

진술서가 기무부대의 강압에 의해 작성되었을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 권상만씨는 "초기에 연락이 막힌 상태에서 모두가 수사를 받았고, 잡도 재우지 않는 등 강압적인 수사를 통해 사건을 과대 포장하거나 조작할 가능성이 아주 많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민중정치연합'은 30일 3시경에 "무차별연행·구속에 대한 진상발표 긴급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를 통해, "문민정부 아래에서 영장없는 강제연행·압수수색 등의 심각한 인권유린 사태가 발생했다"고 지적하고, '불법·폭력연행 책임자

의 처벌', '경찰청장의 공개사과' 그리고 '인위적인 사건 조작의 중단'을 촉구하였다. 이날 민정권의 기자회견과 규탄대회는 오후 2시에 경찰청 기자실에서 할 예정이었으나 경찰의 제지로 오후 2시 40분경에 근처 음식점에서 기자회견을 하였으며, 3시에 경찰청 정문 앞에서 전경에게 둘러싸인 채 규탄대회를 열었다. 것으로 '신문사건 검열 철폐, 신문방송비 재단 부담, 학생회관의 학생들의 사용보장 및 동아리방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1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합동서명식에는 재단측과 학장, 총학생회, 대의원회, 이번 농성을 이끈 학원사랑협의회의 대표가 참석하기로 하였다.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 단식농성 풀여 재단측에서 요구사항 대부분 받아들여

8월 24일부터 본관 앞에서 7일째 단식농성을 벌이던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은 30일 오후에 학교측과 '정연석군 치료비 보장' 등을 내용으로 한 합의서 초안을 작성하고 단식농성을 풀었다. 학장직무대리와 학생대표들이 마련한 합의서 초안에는 그동안 학생들이 요구사항을 대부분 받아들인

것으로 '신문사건 검열 철폐, 신문방송비 재단 부담, 학생회관의 학생들의 사용보장 및 동아리방 설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31일 오전 10시에 이루어진 합동서명식에는 재단측과 학장, 총학생회, 대의원회, 이번 농성을 이끈 학원사랑협의회의 대표가 참석하기로 하였다.

■ 인권운동 사랑방 광고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4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8월 31일(오늘) 오후 7시

내가 보고 들은 해외 인권운동 / 박원순 변호사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8월 31일(화) 바로 오늘 월간인권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지난 두해 동안 유럽과 미국 등지에서 인권문제에 관심을 가지고 전문을 넓혀온 박원순 변호사의 풍부한 해외경험에 귀를 기울이고 대화를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장 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진행계획

6시-7시 : 저녁식사(6시 30분 이전에 도착하는 분에게 간단한 저녁식사를 제공)
7시-8시 : 박원순 변호사 발제
8시-10시 : 발제에 대한 질의·응답, 토론

학생 수배자들, 가족들과 상봉 28일(토) 연세대에서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위원장 조정신 89년 전남대 총학생회장)는 지난 28일(토) 오후 3시 연세대에서 수배자 가족과 만남은 '가족 상봉의 날'을 가졌다. 학생회관 4층 농성장에서 열린 상봉의 날에는 수배자 가족 40여명과 민가협·유가협 회원 10여명이 참가하였다. 수배자 대부분이 가족을 보지 못하고 길게는 5년 이상 도피생활을 해야했던 수배자들은 "군사정권 아래서 부모님의 상에도 가지 못하는 등 최소한의 인권적 도리마저 유린당해왔다"며, "정치수배는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마땅히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날 오랫동안 수배자들을 만난 가족들은 "수배자 가족들이 앉아서서 군사정권 시절의 정치수배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가족대책위를 만들 것을 결의하였다.

황석영씨 4회 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이

*편집자 주: 아래 글은 지난 4월 30일 채택된 유엔 인권위원회 산하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이다. 자세한 기사는 '인권하루소식', 19호에 실렸다.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

결정사항 번호 28/1993 (대한민국)

1992년 11월 6일 대한민국정부에게 통보된 사항.
대상 : 장의군, 황대권, 김성만과 대한민국

3. 사건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목적을 위하여, 본 실무위원회는 문제의 사건이 다음 3가지 범주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지를 고찰한다.

- 1) 해당 자유의 박탈이 아무런 법적 근거에 기초하지 않음이 분명한 자의적 행위인 건 (사면령에 반한 구금 또는 선고형량을 넘어선 구금과 같은 행위); 또는
- 2) 기소와 선고를 야기한 사실이, 세계인권선언 7, 13, 14, 18, 19, 20,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12, 18, 19, 21, 22, 25, 26, 27조에 의해 보장되는 권리와 자유에 상반되는 경우의 자유박탈의 건; 또는
- 3)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에 관계된 모든 국제적 규정 혹은 그 일부를 준수하지 않은 행위 있고 그것이 어떤 종류의 자의적 성격으로 자유박탈을 야기한 건.

12. 위와 같은 취지로 본 실무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장의군, 황대권, 김성만의 구금이, 세계인권선언 5, 9, 19, 21조와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 9, 14, 19조에 위반되며, 본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을 심의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중 위 2)와 3)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선포한다.

1993. 4. 30. 채택.

8월 30일 10시에 서울형사지법 합의 25부에서 열렸다. 이날로 3회에 걸친 변호인 반대신문이 모두 끝났다. 변호인 반대신문에서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과정에서의 북한의 지령 수수 여부, 다섯 차례의 방북 동기, '동아시아문화연구소 결성시 북한의 지시와 금품수수 여부, 북한에 서 황석영씨의 '장길산' 등의 작품을 출판하면서 받은 판권료가 금품수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이 다루어졌다.

♥ 공판안내 ♥

- 8월 31일(화)
 - * 09:30, 임성호 일경, 군무이탈, 춘천지법.
 - * 09:30, 고대성 일경, 군무이탈, 11사단 군사법원.
 - * 10, 이인섭, 특가법, 318호, 2회.
 - * 10, 박창용,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319호, 3회.
 - * 10, 안영선의 2인, 배임수재 등, 321호, 선고.
 - * 10:30, 김남석의 3인, 폭력행위처벌법, 424호, 3회.
- 9월 1일(수)
 - * 09:30, 강태중 일경, 군무이탈, 정주지법, 선고.
 - * 10, 김봉호의 1인, 정치자금 법률, 317호, 선고.
 - * 10, 이커영, 업무방해, 317호, 선고.
 - * 10, 천기호의 1인, 특가법, 318호, 4회.
 - * 10, 박관순의 1인, 업무방해 등, 320호, 1회.
 - * 14, 안영모의 1인, 특경법, 318호, 3회.
- * 14, 정의승의 1인, 특가법(뇌물공여), 311호, 5회.
- * 14, 박민홍의 2인, 업무방해 등, 421호, 5회.
- * 16, 정덕진, 특가법, 311호, 4회.
- 9월 2일(목)
 - * 10, 박동수의 1인, 국보법, 317호, 1회.
 - * 10, 최경자, 업무방해, 421호, 선고.
 - * 10, 이문옥, 공무상비밀누설, 424호, 선고.
 - * 10, 고석중, 업무방해, 424호, 선고.
 - * 15, 김문찬, 특경가법, 319호, 1회.
- 9월 3일(금)
 - * 10, 김낙운의 21인, 업무방해, 421호, 1회.
 - * 14, 이진개, 특가법(뇌물), 319호, 4회.
- 9월 6일(월)
 - * 10, 황석영, 국보법, 311호, 5회.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수배·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

복직·수배해제·구속노동자 석방 요구 민주당사에서

31일 현재 마포 민주당 사에서는 해고 노동자 40여명이 지하 콘크리트 바닥에서 해고자의 전원 복직을 요구하며 94일째 무기한 철야 농성을 벌이고 있다. '전국 구속 수배 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 위원회'(이하 전해투)는 과거 군사정권 아래서 부당하게 구속, 수배, 해고되었던 전국의 5200여 해고 노동자의 원직복직과 구속자 석방, 수배해제를 요구하며 투쟁하고 있다.

92년 전국노동자대회를 기점으로 시작되었던 이 투쟁은 올해 4월 7일부터 기독교회관에서 전국 해고 노동자들이 18일간의 단식투쟁을 한데 이어 지난 5월 31일 과천 정부청사 앞에서 '제 1차 해고 노동자 대회'를 치르고 그날로 민주당사에서 장기농성을 시작, 오늘 현재까지 계속하고 있다. 지난 3월 10일 이인제 노동부장관은 "정부는 정부출연기관의 해고 근로자를 우선 복직시킬 것이며 각 사업장에 복직을 적극 권유할 계획"이라며 "구시대 노사갈등을 해소하고 해고근로자들이 사회불만세력으로 남아 산업민주화의 걸림돌이 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 사회 전체가 이들을 포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런 방침을 정했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전해투에 따르면 현재까지 기업은 물론 정

부출연기관은 해고된 노동자들의 복직을 아직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전해투의 한 관계자는 "진정 우리가 '사회불만세력'이 되기를 원하는 것은 소위 '문민정부' 당사자"라며 "김영삼 정부는 기업주의 편에 서서 그들의 이윤을 보장해주는 데 관심이 있을 뿐, 노동자의 생존권은 철저히 외면하고 있고 문민정부는 기업주의 세상일 뿐, 우리 사회의 대다수인 노동자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기대할 것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그동안 정부가 약속한 "경제 5단체 장과의 면담 및 공동선언"의 실천을 촉구하는 방문과, 다량 해고자를 양산한 대우, 기아, 대림, 한진, 현대 등의 방문투쟁에서 아무런 성과 없이 오히려 10여명의 구속자만을 냈을 뿐이라고 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 이르러 되었음에도 정부와 김영삼 대통령은 "해고 노동자는 원칙적으로 노동부에서 복직시키기로 결정했으나 구체적인 실시여부는 기업 판단에 맡길 것이다"라고 말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해투는 이후 각 노동단체들과 연대를 강화하며 9월 11일 그동안의 100일 농성투쟁 기념 집회를 가지면서 하반기 투쟁과 결합한 노동악법 개혁, 수배해제 해고자복직 100일 투쟁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

다. 또한 가을 정기국회때 '복직문제 특별법'을 제정하는 청원투쟁을 벌여나갈 계획도 가지고 있다. 전해투 관계자는 "이번 가을에는 정말 목숨을 건 단식투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등익 일병 공판에서

91년 5월 24일 '기무사 해체'와 '군의 민주화'를 주장하며 연세대에서 양심선언을 했던 이등익 일병에 대한 선고공판이 지난 8월 30일 오전 9시 육군 50사단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이등익 일병은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심리는 오전의 검사, 변호인, 군판사의 신문과 검찰측의 구형이 있었고, 자만을 냈을 뿐이라고 한다.

이날 검찰, 변호인, 재판부의 신문에서는 양심선언의 동기와 '군무이탈'의 실정법 위반 등이 주로 다루어졌다.

이등익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5개월의 군생활동안 느낀 것은 쿠데타와 학살, 폭력으로 더럽혀진 군의 모습"이었고, "군사독재 정권에 빼앗긴 병사들의 진정한 국방의 의무를 되찾아야 한다"는 생각에서 양심선언을 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의 양심선언은 치졸하고 헛된 영웅심에서

쟁과 구속을 불사하는 투쟁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농성의 분위기를 전하며, 이러한 노동자들의 생존권 투쟁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언론의 이중성'에 대해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사랑하는 가족과 떨어져서 오랜 기간 질박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해고 노동자들에 대한 시민·학생들의 연대와 지지가 절실히 필요하다"를 강조하였다.

가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군대의 군인이고자 강요된 비양심을 벗어 던지는 순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영삼대통령이 양심선언의 정당성과 민주화에 기여한 점을 인정하면서도 소위 군무이탈이라는 실정법을 적용하는 것은 이를 배반"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등익 일병은 다른 양심선언 군인·전경 7명과 지난 7월 21일 58일간의 기독교회관 농성을 마치고 청와대로 행진도중에 연행되었다.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성황

'인권운동 사랑방'은 31일 저녁 7시 '내가 보고 들은 해외의 인권운동(발제 박원순 변호사)'라는 제목으로 4회 월례세미나를 열었다. 이 세미나에는 천주교 인권위원회등 인권단체 활동가 17명이 참가하였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정부, '정신대' 문제 골육적 태도 '배상·보상 요구 않기로' 재천명

외무부, 정대협 질의에 대한 답신에서 재차 밝혀 외무부는 9월 1일 '정신대' 문제에 대하여 "일본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고, "일본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여부를 주시할 예정"이라고 정부 입장을 밝혔다. 또한 "민간차원에서 일본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 규명활동에 대하여는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천명은 '정신대 문제'가 "더이

상 외교현안이 아니다"는 외무부 실무자의 입장에 대하여 정대협이 8월 6일 정부의 공식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낸 데 대한 답신형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대협은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일본정부의 노력을 계속 주시할 예정이라는 태도를 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 규명활동에 대하여는 협조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으나,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임을 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입장천명은 '정신대 문제'가 "더이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군사법원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8월 31일 홍천에 있는 육군 제11사단 보통군사법원(재판장 안주순 중령)에서 열린 고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에서 재판부, 검찰, 변호인의 신문에 이어 선고까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91년 8월 15일 범민족대회가 열리는 경희대에서 '정훈교육 폐지' '남북 상호감관' 등을 주장하며 양심선언을 한 고 일병은 지난 7월 21일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의 농성을 마치고 청와대 평화행진 중 연

행되었다. 고 일병은 최후진술을 통하여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대의 작전지휘권이 미국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위협을 내세워 자주국방을 운운하는데 대해 서글픔을 느꼈다"며, "민족자주군대의 진정한 국방의무를 수행하는 길을 고민하다가 양심선언을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한 것"이라며 양심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또 군의 명예를 더럽힌 정지군인에 대한 엄중한 단죄와 더불어 양심선언 군인·전경에 대한 명예회복을 요구하였다.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드디어 창간

김영삼정권 출범 후에도 인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였습니다. 8월 4일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9월 7일 드디어 창간하기에 이른 것은 첫번째로 그동안 독자들이 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왔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편집 및 팩스 송신 등의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며, 세번째로는 팩스통신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를 성금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창간하게 될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아울러 따듯한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빋낼 여러분의 격려문을 기다립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호' 한편을 여러분의 격려문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원고지 1매 이내, 또는 단 한마디의 격려문이라도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31일로 예정되었던 임성호 일경에 대한 공판은 9월 2일 2시 춘천지법에서 열린다.

강압수사 항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씨

지난 8월 26일 영장없이 연행되어 27일 구속된 공인표씨가 강원도경에서 수사를 받던중 8월 29일부터 강압수사에 대한 항의단식

을 벌이다가 31일 탈진, 병원으로 실려간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표씨의 아버지는 공씨가 "경찰이 사노맹 예비모임을 가졌다고 주장하는 92년 여름 강촌 모임에는 참석했지만, 그 모임은 사노맹 결성준비 모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의 강압수사에 항의하며 단식한 것이라고 전하였다.

외무부 문서번호 아임 22220-422 수신 정대협

제목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

군대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 등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해 온 귀 협의회에 대하여 경의를 표하면서 8.9. 정부에 제출한 질의서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보합니다.

1.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에 관한 정부입장 -금번 일정부 조사결과 발표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봄. 다만 일정부가 과거와는 달리 위안부의 모집, 이송, 관리 등에 있어 강제성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의 뜻과 이를 역사의 교훈으로 직시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표명한 데 대해서는 이를 평가하는 한편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부가 계속적인 관심을 기울임으로써 앞으로는 계속 밝혀져야 한다는 입장임.

2. 금후 정부의 대응방향 -일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주시해 나갈 예정임.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함. 93. 8. 제네바 개최 '유엔 인권 소위'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보좌관 임명을 지지하도록 공판에 혼령 하달. -민간차원에서 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 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함.

3. 배상, 보상에 관한 정부입장 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일정부에 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불행했던 과거의 상처를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함으로써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일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임. -일정부가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됨. -정부는 금후에도 정부차원의 배상, 보상은 요구하지 않을 방침이나, 민간차원에서 진행중인 배상청구소송 등에 대하여는 깊은 관심과 필요한 지원을 행하고자 함. 끝.

외무부 장관 (아주국장 전결)

부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전쟁중에 저질러질 수 있는 군인들에 의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느냐? 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인류역사에 다 시 없는 아주 잔악한 전쟁범죄로 보고 있고 또한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간사건도 매춘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전쟁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과 아울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으로써 당연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정부의 물질적 배상, 배상 포기요구로 일본에게 도덕적 책임을 느끼게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아직도 그들 자신의 전쟁범죄에 대해 인정조차도 안하고 있는 일본에게 면죄부를 스스로 주는 처사라고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본정부가 국가차원에서 도덕적 책임을 느끼고 말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책임이 도덕적인 것이 아니라 국제사회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함이 천명될 수 있도록 공식적이고 법적인 것으로 나타나야 합니다(후략).

공동대표 이효재, 윤정옥, 김희원

외무부 답신에 대한 본 협의회의 입장

1. 기본적으로 본 회 질의서의 주요 내용이었던 유병우 아주국장 발언에 대한 김영삼 대통령의 입장전과 유병우 아주국장 해임진, 외무부장관 사과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는 것, 그러나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의 진상규명 노력을 지지하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하고 민간차원에서 일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및 진상규명활동에 대하여는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필요한 협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내용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2. 외무부 회신 내용 중 2항의 '금후 정부의 대응방향'에서 일 정부가 미진한 부분에 대해 성의있는 노력을 계속하는지 주시해 나갈 예정이라는 답변은 1번항에서 군대위안부 문제의 완전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고 보면서도 여전히 2차 보고서 발표이후 후속조치를 한국정부측에서 어떻게 요구해 나가고, 또 진상규명 작업을 적극적으로 해나간다는 입장보다는 일본정부가 하는대로 맡기겠다는 아주 수동적이고, 굴욕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3항의 배상, 보상에 관한 정부입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1)정부가 군대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물질적 배상 또는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은 우리 스스로 치유하는 노력을 함으로 국민적, 국가적 자긍심을 고양하는 한편, 일정부에 대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려는 취지에서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본 회가 지금까지 누누히 주장해 온 것이지만 금번에 취해지는 '일제하 군위안부들을 위한 생활구호법안'이 66년 한일협정을 인정하는 것인지 그리고 한국정부의 일본정부에 대한 물질적 배상포기 이후 이루어지는 배상에 대신하는 조치인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회는 한국정부가 준비해 온 위 특별법에 대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고, 정진대 할머니들께도 이것은 보상에 대신하는 한국정부의 조치가 아니다, 정부로서 정진대 할머니들께 위로차원에서 시행하는 임시조치임을 설득해 왔습니다.

일본이 범법행위에 대한 물질적 배상, 보상 요구는 당연히 한국정부가 위로차원에서 시행하는 생활구호조치법안과 구별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본회의 입장입니다. 2)일정부가 금전적 배상 또는 보상을 해야만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우리 정부가 명확한 진상이 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전적 해결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연한 자세를 보일 경우 일본이 느끼는 도덕적 책임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에 대해서 본 회의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일본정부가 저지른 강제종군위안부 문제가 전쟁범죄라는 것을 인정하느냐? 아니면 단순히 전쟁중에 저질러질 수 있는 군인들에 의한 비도덕적인 행위로 보느냐? 에 대한 중요한 시각을 드러내 주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는 강제종군위안부 문제를 인류역사에 다 시 없는 아주 잔악한 전쟁범죄로 보고 있고 또한 그렇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강간사건도 매춘사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국가에 의해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진 심각한 전쟁범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책임자 처벌과 아울러 일본정부의 법적 책임으로써 당연한 물질적, 정신적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중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 '군무이탈' 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9월 2일 오후 2시에 춘천 지방법원(재판장 곽현수 부장판사)에서 열린 임성호 일병에 대한 첫회 공판이 이장역 3년이 구형되었다.

임성호 일병은 89년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에서 경비를 서다가 그해 2월 18일 휴가중 기독교 회관에서 '전두환 이순자 구속', '전경 근무조건 개선' 등의 요구를 내걸고 양심선언을 하고 지난 7월 21일 구 불잡힐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변호인은 신문에서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를 경비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대성 일병이 근무한 백담사는 전경의 근무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성호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전두환씨 부처가 대청봉에 등산을 갈때에는 눈길을 쓸어야 했고, 청와대 경호원이 전경들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근무를 독박로 서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전두환씨는 때때로 술에 취해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는 망발을 하는등 회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전두환씨 부처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여 내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며 양심

선언의 동기를 밝혔다. 임성호 일병과 함께 청와대 행진도중 붙잡힌 8명중 4인에 대한 1심 공판이 이미 끝났거나 진행중이다.

특히 이동익, 고대성 일병에 대한 군사재판에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게 똑바로 앉을 것을 지시하는등 고압적인 자세로 보이는 등의 군사재판 진행관행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드러냈다. 그리고 오전에 구 불잡힐때까지 4년 6개월 동안 수배생활을 하였다.

변호인은 신문에서 "전두환 이순자씨가 있던 백담사를 경비하는 것이 국방의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전제하고, 고대성 일병이 근무한 백담사는 전경의 근무지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임성호 일병은 최후진술에서 "전두환씨 부처가 대청봉에 등산을 갈때에는 눈길을 쓸어야 했고, 청와대 경호원이 전경들에게 권총을 들이대며 근무를 독박로 서라는 위협을 받았으며, 전두환씨는 때때로 술에 취해 '나는 아직도 힘이 있다'는 망발을 하는등 회개하려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며 전두환씨 부처가 전혀 회개하지 않았음을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할 사람이 반성도 하지 않고 거들먹거리는 태도를 보여 내가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회의"가 들었다며 양심

“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드디어 창간 ”

김영삼정권 출범 후에도 인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였습니다.

8월 4일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9월 7일 드디어 창간하기에 이른 것은 첫번째로 그동안 독자들이 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왔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편집 및 팩스 송신 등의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며, 세번째로는 팩스통신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를 성금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창간하게 될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아울러 따듯한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빛낼 여러분의 격려문을 기다립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호' 한면을 여러분의 격려문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원고지 1매 이내, 또는 단 한마디의 격려문이라도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등 요구

연세대에서 '국가보안법 철폐'와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촉구하며 24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는 '6공 정치수배문제 대책위'는 9월 7일 오후 4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촉구대

을 비롯한 각종 악법을 폐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대책위는 4일의 촉구대회를 기점으로 정치수배자 문제를 광범위하게 여론화 시키나갈 '6공 정치수배자 사회대책위'를 꾸려 국회에 청원서명 운동과 '수배자의 밤' 등의 국민의 공감대를 넓힐 수 있는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바로 잡는 일"이라며, "수배해제는 물론 국가보안법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출감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제차 영장 청구

탄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89년 10월 12일 의경에 입대하여 인천시경 제5기동대에서 근무하던중 시위진압을 거부하며 두차례에 걸쳐 근무지를 이탈하여 총 2년 5개월간의 수형생활을 마치고 올해 5월 28일 출소했던 김대영 의경에 대한 구속영장이 9월 3일 인천지검 김상일 검사에 의해 청구되었다.

"부대생활중 교감들의 구타에 의해 허리중추에 이상이 생겨 지난 5월 28일 출소후 병원에서 6주 진단을 받아 부대에 휴가를 요청, 치료중 부대에서 '탈영처리'하여 검찰에 고발함으로써 다시 구속될 처지에 있다"고 김 의경은 9월 3일 밝혔다.

김대영 의경은 또 "본인은 국방의 의무라고 볼 수 없는 시위진압을 강요받아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고통을 감수해야만 했으며 이의 일차적인 책임은 경찰 당국에 있다"며 지난 8월 25일 인천시 경찰청에 의경으로 재복무할 수 없다는 탄원서를 제출한 상태였다.

탄원서에서 김 의경은 "의경으로 복무하면서 포장마차 철거 등에 동원되어 '진압명령'에 의해 무차별적인 폭력을 행사하는 동료들을 보면 양심상 방패로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렸고, 또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로 고참들에게 무수한 구타와 기합을 당하면서 수없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했다"며, "나의 행동이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음과 나에게 주어진 역할이 의경의

임무와는 전혀 동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또 자신의 두 차례에 걸친 부대이탈은 "나와 동료들이 겪는 의경생활을 모두에게 알려 전경대와 의경대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한 최소한의 몸부림"이라고 주장했다.(탄원서 2면 발췌)

한편 기독교회관에서 58일간의 농성중 청와대 행정중 불잡힌 고대성씨를 비롯한 8명의 가족 등이 지난 7월 30일 국방부 법무관리관과의 면담에서 "군대생활과 수형생활을 합쳐 24개월이 넘으면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재대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김대영 의경은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은 자신의 탄원서가 '의경 시위진압 동원의 부당성'과 '전투경찰(전, 의경) 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복 성격이 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경은 90년 8월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에 반대하며 부대를 이탈, 그 해 10월 구속되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91년 3월 양심선언을 결심하고 다시 부대를 이탈하다 체포되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지난 5월 28일 출소후에 부대에서 아무연락이 없다가 8월 중순에 연락이 와서 9월 1일 부대에 복귀, 전역문제를 협의하던중 3일 오후 부평경찰서에 수감되었다.

9월 7일 '인권하루소식' 드디어 창간

김영삼정권 출범 후에도 인권 문제가 여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인식 아래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였습니다.

8월 4일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9월 7일 드디어 창간하기에 이른 것은 첫번째로 그동안 독자들이 소식지의 유용성에 대한 많은 격려를 해왔고, 둘째로는 무엇보다도 편집 및 팩스 송신 등의 기술적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며, 세번째로는 팩스통신에 따른 재정상의 문제를 성금 모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제 정식으로 창간하게 될 '인권하루소식'은 여러분의 지속적인 성원을 바라면서, 아울러 따끔한 충고도 겸허하게 받아들일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빛낼 여러분의 격려문을 기다립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호' 한면을 여러분의 격려문으로 채우고자 합니다. 원고지 1매 이내, 또는 단 한마디의 격려문이라도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안내 ♥

- 장기출소자 광주 사랑의 집 기금마련 음악회
- 주최:광주 사랑의 집 건립 추진본부(062-524-6507)
- 주관:광주 NCC 인권위(062-529-7373)
- 장소:전남대 강당 ·일시:4일 오후 4시~7시
- 후원:기독교 광주방송, 무등일보, 광주매일, 주간 동서남북
- 심광보(충주교) 3주기, 9월 4일오후 4시, 장소-건국대 충주분교
- 최우혁(서울대 군의문사) 6주기, 9월 5일 10시 장소-서울대

탄원서

수신 : 인천시 경찰청장
참조 : 인천시경 제 5 기동대장
내용 : 재복무 불가에 대한 건

가. 탄원 요지(전략)

나. 탄원 내용

1. (전략)

2. 의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기 시작한 것은 전경으로만 구성되어있던 시위진압 기동대가 의경으로 대체되면서 부터이다. 88년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당시 이춘구 내무부장관, 조종석 치안본부장, 89년 김우현 치안본부장, 91년 이상언 내무부장관 등이 '대간첩 임무의 수행을 위한 전경을 시위진압에 동원하는것이 불법'임을 공식 시인한 이래 전경의 시위진압 기동대는 대부분 의경으로 대체되어져 왔다. 그러나 이러한 의경의 시위진압 동원은 사실상 의장의 고유업무였던 '치안업무 보조'와는 거리가 먼것으로 그동안 시위진압 동원에 대한 의경 내부의 불만고조와 지원자가 급격히 줄어들게되는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있다.

3. 그러나 의경의 시위진압동원은 의경의 임무로 되어 있는 순수한 의미의 치안업무보조가 아니다. 의경의 '치안업무 보조'는 말그대로 군병력의 일부가 합법적인 경찰구조의 틀내에 드러와 경찰의 임무를 '보조'하는 준 군사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즉 의경의 치안업무 보조는 그 자체의 규정 에 의하면 '국가시설의 방호 및 경비업무, 그리고 기타 긴급사태에 대한 명령지시 사항준수'로서 단순한 경찰의 업무나 시위진압의 작전개념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의경의 업무는 중요한 국가시설의 일반적인 상황의 경계, 경비와 전시, 사변, 천재지변등 특수상황에서의 업무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4. 따라서 88년이후 의경을 시위진압에 적극 동원하고 있는것 또한 불법이며 이러한 사실은 전투경찰 제도가 그 출범 초기부터 특정 정권의 필요에 따라 자의적으로, 불법적으로 대국민 단압의 도구로 이용되고 있음을 단적으로 입증해 주고 있는 것이다.

5. 6.(전략)

7. 국가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상의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해야만 하는 젊은이들을 국방의 의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전투경찰로 전입시켜 시위진압에 동원하는 것은 명백히 헌법(제10조의 행복 추구권,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 제19조가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제39조 제2항에 의하여 보장되는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할 권리 등등)에 어긋나는 행위이다.

8. 이상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투경찰(전, 의경)은 국방의 의무가 아니다. 그 출생에서부터 기형아로 태어나 불법적으로 생명을 유지해온 전투경찰을 국민들의 민주적 요구와 권리를 폭력으로 탄압하고 있는 독재정권의 사병조직일 뿐이다. 즉 전투경찰은 대국민 전투를 일상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기형아적인 국가조직인 것이다.

문민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보안법 못지 않게 이땅의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가로막고 있는 전투경찰(전, 의경)은 하루빨리 해체되어야 한다.

9. 본인은 의경으로서 복무하던 당시 포장마차 철거령에 의해 시위진압에 동원된적이 있다. 이 과정에서 철거를 반대하는 시위는 없었다. 단지 생존을 위한 철거민들의 몸부림만이 있었을 뿐인데도 우리는 진압명령에 의해 그들을 무차별적으로 진압했다. 본인은 기독교인으로서 이러한 비인간적인 상황과 어찌할 수 없는 본인의 형편상 그 자리에서 방패를 든채 얼굴을 가리고 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나의 최소한의 양심적 눈물마저도 용납되지 않았다. 상황이 끝나고 부대로 복귀했을때 본인은 눈물을 흘렸다는 이유만으로 고참들로 부터 무수한 구타와 기합을 받아야했다.

10. 학생들이나 노동자들의 시위를 진압하기 위해 출동 하였을때에도 그들의 정당한 요구를 명령에 의해 진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은 수많은 갈등과 양심의 고통을 느껴야만 했다. 본인에게 주어진 이러한 임무에 대해 회의를 할 수밖에 없었으며 본인의 행동 또한 어떠한 이유에서 간에 정당화될 수 없었다.

11. (전략)

12. 이러한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우리나라가 진정한 민주주의 국가인가'라고 수없이 반문해 보았으며 지금까지 본인이 알고 있는 민주주의와는 너무나도 동떨어져 있는 현실이 실로 안타까웠다. 이에 본인은 더 이상의 의경 생활을 참고 견딜 수가 없었으며 이러한 사실을 모두에게 알리고 싶었다. 본인의 일 이차 부대이탈은 이 잘못된 현실을 향한 최소한의 몸부림이었다.

13. 본인은 두번에 걸친, 도합 2년 5개월간의 수형생활에서 의경생활에 비유할 수 없는 양심의 자유와 정신적 안정을 얻을 수 있었다. 힘든 과정이었지만 본인의 행동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전투경찰의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절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많은 젊은이들이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의경에 자원입대하고 있다. 본인의 고통을 이들이 다시 되풀이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의경의 시위진압과 부대내에서의 비인간적인 행위들이 사라지기를 기독교인의 양심으로 기도한다.

14. 이상의 이유에서 본인은 전투경찰로서 재복무할 수가 없다. 잘못된 현실에서 본인이 피해받은 고통에 대한 보상은 차차하더라도 본인에게 다시 재복무를 강요한다든지, 복귀하지 않을 경우 다시 탈영처리하여 법의 처벌을 또 받게하겠다는 발상을 본인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다. 본인은 과거 잘못되었던 군사정권의 피해자로서 현재 남아 있다. 본인의 상처가 다 치유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본인은 다시 그러한 상처를 강요받을 수가 없다.

1993년 8월 25일
탄원인 김대영
소속 인천시경 제5기동대

인권하루소식

93년 9월

(창간호 - 제16호)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인권하루소식」 창간사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다

광주학살의 진상이 '역사의 심판'에 맡겨지는 가운데 고문후유증으로 아직도 치떨리는 과거를 잊지 못한 많은 사람들과 그들의 수많은 가족들이 겪어야 하는 고통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거짓과 진실의 문제가 도마 위에 올려져 현 시대의 본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었던 '유서대필사건'을 우리는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을 시대의 치욕으로 여겨야 한다는 무서운 주장을 펼치던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에 갇힌 한 젊은 학자가 지금 우리의 눈앞에 있다.

그러나 삶의 존엄을 위협받음이 어찌 정치범과 정치투쟁을 하는 이들뿐이겠는가?

인간의 존엄을 위협함으로써만 지탱되는 사회는 항상 알맞은 희생양을 만들어내게 마련이다. '심령술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회한한 결합으로써 무고한 시민을 정신착란과 마침내는 죽음의 문턱까지 내몰며 무참하게 인권을 유린했던 "화성사건의 진상"은 유아무야 잊혀져가고 있다. 제대로 거동도 못하는 장애인을 목발까지 빼앗으며 집단폭행했던 "가평 한국관 '로드니 킹 사건'"은 그저 우연히 발견된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말해야 한다.

법이란 누구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가? 아니 제도와 국가는 누구의 것이며, 누구에 의해 만들어져야 하는가?라는 괴로운 질문에 우리는 날마다 맞닥뜨리며 살아야 한다. '안보'와 '질서'의 이름 아래 인권이 광범위하게 유린되고 있는 사회, 우리는 감히 말하건대 소위 '문민정부'의 현실을 이렇게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인권은 정치적 목적에 의해 '거래'될 수 없다. 그것은 다시 말하자면 인류가 지금까지 이룩해온 고귀한 가치이며 민중에 의한 기본적 '통치이념'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고관 나으리들이 재산자랑을 하던 다음 날, 역설적이게도 「인권하루소식」은 가진 것 없이 초라하게 출발한다. 그리고 「인권하루소식」은 그들중 누가 인간의 권리를 앞장 서 부정했으며, 법과 제도를 주물러가며 그들만의 세상을 만들고자 했는지를 기억한다.

"가마 타는 즐거움은 아나, 가마 매는 괴로움은 모르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인권하루소식」은 슬퍼한다.

우리는 참다운 자유세상을 만들기 위해 진실을 전달하는데 주저함이 없으며, 진실을 찾기 위해 본질을 파헤침에도 두려움이 없다. 뜨거운 연대와 애정은 우리의 용기를 북돋울 것이며, 날카로운 비판은 우리의 필봉을 더욱 날선 칼날로 만들 것이다. 우리는 그 '시린 칼날'로 인권유린의 현장을 가차없이 내리칠 것이다.

여러분의 변함없는 성원을 기대한다.

1993년 9월 7일

인권운동 사랑방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1달만에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합니다.

그동안 편집기술상의 문제점, 기사취재 방법상의 문제점, 발송작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드디어 일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인권하루소식」,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성금을 보내주시길 분은
계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 서준식)
(작은 정성도 필요합니다)

'문민적' 시대에 인권과수꾼

'인권하루소식' 창간 / 400여 독자에게 배달

'인권하루소식'이 9월 7일(오늘) 창간 1호를 냈으로써 정식 창간되었다. 일간신문에 인권기사가 "가슴에 콩 나듯"한 요즘 인권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인권하루소식'은 약 1달간 24회에 걸쳐 준비호를 내는 과정에서 각계 독자로부터 '참신하다'는 평을 받아왔다.

팩스필리를 통해 창간호부터 매일 400곳에 배달되는 방식은 우리나라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해외에서도 그 유행이 극히 드문 일로써 앞으로 이 '하루소식'이 우리의 인권개선에 기여하는 몫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사랑방 대표 서준식(46)씨는, 문민적 정부가 들어선 후 경찰에 의한 조작 혹은 어거지수사혐의가 짙은 국가보안법 사건이 벌써 4건이나 일어나고 있으며 국가보안법 개폐전망이 전혀 없음을 강조하는 한

수배해제 촉구대회

오늘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지난 달 11일 연세대에서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등을 주장하며, 농성에 돌입한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는 오늘(9월 7일) 오후 4시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촉구대회'를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갖는다.

지난 달 28일 '가족 상봉의 날'에 결성한 '6공 정치수배자 가족대책위'는 4일 대검찰청에 검찰총장 '면담요청서'를 제출하였으며, 오늘 오후 3시에 대검찰청으로 가 검찰총장과 면담을 요구하기로 하였다.

번 "노동자, 장애자, 어린이, 노인, 여성 등에 대한 구조적 인권유린이 조금도 변함없이 상존하고 있음에도 사람들이 마치 인권상황이 크게 개선된 것 같이 착각하는 것은 일간신문이 인권기사를 게재하는데 몫시 인색한 탓"이라며 '인권하루소식'의 의의를 강조하였다.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앞으로 이 소식지에서 이제까지 등한시되어 왔던

인권분야도 폭넓게 다루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인권, 인권운동 그리고 그 역할을 정립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이 소식지의 애독자라는 채만수(45세)씨는 '인권하루소식' 발전 전망과 관련 "하루소식"을 모든 사람들이 정보교환의 장으로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곧 '하루소식'의 발전을 보장하는 길"이라고 진단했다.

이문옥 감사관 무죄 판결

양심선언자보호입법 활성화 될 듯

90년 5월 23개 제벌그룹 계열사의 비업무용 부동산 보유실태와 업제로비에 의한 감사중단 사실을 공개해 직무상 비밀누설죄 혐의로 징역 1년이 구형된 이문옥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당시 부동산투기 문제가 심각했던 상황에서 국민의 알권리 등에 비추어볼 때, 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정부나 국민에게 이익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따라서 이 피고인이 공개한 감사자료는 직무상 얻은 비밀로 볼 수 없으므로 검찰의 공무상 비밀누설죄 적용은 잘못된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 전 감사관은 이날 법원이 무죄판결을 내리자 '공직자가 임명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이익 편에 서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새로운 시대변화에 부응한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따라 현재 서울 고법에 계류중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도 이 전 감사관의 승소가 확실

어서 정부가 추진중인 행정정보 공개법 제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한준수 전 군수, 윤석양 이병, 이지문 중위등 과거 정권아래서 양심선언을 한 공무원·군인들의 행동과 관련해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양심선언자 보호법'의 입법화 운동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연극 '완전한 만남' 공연

학전소극장/9월 7일-22일

부산에서 활동중인 <극단 열린무대>가 마련한 '완전한 만남'(김하기 원작, 이창복 연출)이 9월 7일부터 22일까지 동송동 대학로에 있는 학전소극장에서 열린다. 평일에는 7시 30분, 금요일은 4시 30분·7시 30분, 주말은 3시·6시 공연이다.

'완전한 만남'은 93년 제 11회 부산연극제에서 작품상·연출상 등을 수상하였다(문의: 763-8233)

공판안내

- 9월 7일(화)
 - 황경로·유상부, 특가법, 311호, 10시, 4회.
 - 백성기의 2인, 국보법, 318호, 10시, 3회
- 9월 8일(수)
 - 이공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424호, 10시, 25회
 - 로저병장, 폭행치사(김국혜씨), 321호, 2시, 선고.
- 9월 9일(목)
 - 유창민, 국보법, 321호, 10시, 1회.
 - 이상달의 4인, 특가법, 311호, 12시, 3회.
 - 이상훈, 특가법(뇌물), 319호, 2시, 2회.
 - 정덕일, 특가법, 319호, 4시, 1회.
- 9월 10일(금)
 - 김부경, 국보법, 318호, 10시, 속행.
 - 손원기, 국보법, 320호, 10시, 선고.
 - 이완기의, 업무방해등, 303호, 10시, 2심
 - 이종수, 군무이탈, 서울형사지법 동부지원, 1호, 10시.
 - 황주석·조국의 5인, 국보법, 311호, 2시, 1회.
 - 주영민, 뇌물수수, 418호, 2시.
- 9월 13일(월)
 - 황석영, 국보법, 311호, 10시, 6회.

창간 격려문

(도착순)

새로운 인권운동의 장을 힘차게 열어준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이제 '인권하루소식'의 세찬 바람이 인권의 사각지대인 '군'에도 불어 병사들의 인권신장에도 도움이 될 것을 기대하며, 함께 해 나갈 것을 다짐합니다. <윤석양 후원사업회,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위대책위원회>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발행인 서준식 선생의 전투를 바랍니다. <AI 서울그룹 승무동>

모든 사람은 날 때부터 자유롭고 동등한 존엄성과 권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은 천부적으로 이성과 양심을 가지고 있으며 서로 형제애의 정신으로 행동하여야 한다.(세계인권선언 1조)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인권을 확립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인권하루소식'지의 역사적 창간을 맞이하여 위의를 우리 모두 한번 써 보도록 하는 게 어떨까요?

'인권하루소식'은 대한민국 인권보호의 거목!! <의명의 독자>

분단때문에 영어의 몸이 된 모든 분들은 석방되어야 합니다. 엑스포가 우리나라의 자랑일지는 모르지만 세계 최장기 장기수는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더불어 사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대구 새로운 청년회 회원 일동>

씩어가는 사회에 소금이 되고 참새상 여는 빛이 되어라. 고생하며 만들어 전해주시는 동지 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격려를 보냅니다. <심병호(한겨레신문 증화지국)>

응달에 따스한 빛을! 인간은 어느 누구나 다른 사람에 의해서 조정되거나 어떤 강압적 힘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발휘하지 못할 때 불행한 것이다. 한 사회의 그늘에서 멍든 숨을 빨아내는 사람들이 있는 한 그 사회는 결코 정의로운 사회가 아니다. 이제는 나설 때이다. 어둠에 묻혀 끝나버릴 사람의 가치와 사건들을 그들 편에서 드러내는 지원공동체가 일어셔야 한다. 이것이 응달에서 꽃을 피워내는 따스한 봄빛이다. <이해학 목사>

'인권하루소식'이 4백만 장애우, 4천만 국민과 함께 인권이 보장되는 '참 좋은 세상'을 일컫는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장애우 권익문제연구소>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우선'은 축하합니다. 제가 '우선'이란 단어를 쓴 것은, 이런 소식지가 나올 수밖에 없는 우리의 현실이 한없이 안타깝고, 이 소식지 한자 한자에 실린 분노와 슬픔과, 그리고 수고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루 빨리 이런 소식지가 없어져야 하는 세상, "인권이 존중되는 세상이 되어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쫓겨질" 그날을 간절히 소망하며, 이 일을 위해 애쓰시는 분들의 전투와 결실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국회의원 이우정>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에 위로를 받습니다. 더불어 그 안에 실린 분노와 슬픔에 함께 합니다. <전 MCC 인권위원회 간사 윤수경>

사람은 하늘입니다. 고통받는 이웃의 아픔을 몸으로 함께 하는 '인권하루소식'은 우리의 커다란 힘입니다. 사랑합니다. <서노협 문화부장 이준웅>

인권운동 사랑방 식구들에게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전합니다. <박정우>

나날이 발전하는 '인권하루소식'이 되길 바랍니다. <전노협 여성국장 최정은>

국가보안법 철폐! 모든 양심수 즉각 석방! '인권하루소식' 창간을 축하합니다. <서노협 수석부위원장 이순형>

우리의 인권현실은 아직도 낙후하고 개선되지 않으면 안될 여러 부분이 업존하여 있고, 이러한 각 부분들로부터 계속적으로 인권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언론체제는 이러한 인권분야의 국민적 관심사를 즉시적으로 반영하여 주는 것으로부터 너무 동떨어져 있으며 여러 인권단체들도 각계 약진하듯 산재되어 있어 인권상황에 대하여 효율적으로 대처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은 참으로 시의적절한 기획으로서 기존의 부족한 인권운동의 공간을 메꾸어 줄 수 있는 청량제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민변은 '인권하루소식'이 우리 인권운동 역사의 한 부분을 장식할 수 있도록 기꺼이 최대의 지원을 다하고자 합니다. '인권하루소식'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대표간사 증성우)>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이렇듯 절실한 사업을 시작한 사랑방 식구들의 헌신에 뜨거운 박수를 보냅니다. 이 시대의 어두움을 밝히고, 소외되고 고난받는 이들의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갈 새로운 인권운동을 기원합니다. <해마루합동법률사무소>

김영삼 정부 출범 이후 잊혀질 뻔했던 인권문제를, 완전 파헤칠 '인권하루소식' 창간에 찬사를 보내며 인권운동 사랑방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김종원 의원 비서관 윤종간>

반갑다, '하루'야. 늘 남이 안하는 일과 못하는 일, 그리고 꺼려하는 일을 묵묵히 해온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이제 '인권하루소식'을 발행한다니 내 일처럼 반갑습니다. 많은 관심과 애정 그리고 참여가 함께하는 '하루'가 되길 고대합니다. <시사저널 사회부 김담 기자>

'인권하루소식'은 민주단체의 신속한 대응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인권운동 사랑방 실무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불교인권위원회 합장>

'인권하루소식'의 한장 한장이 남한 사회 인권운동의 튼튼한 기반이 될 것을 바라고 믿는 마음을 '인권하루소식'의 첫칼에 전합니다. <고대 법학연구소 김한균>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합니다. <영화통일 연대회의>

'인권하루소식'의 창간, 그것은 정녕 축하할만한 일입니까? '문민정부'가 시작되었지만 우리는 여전히 인권의 문제를 고민해야 합니다. 수많은 양심수들이 여전히 '양심의 죄'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

고 정치적 수배자들은 그리운 가족조차 만날 수 없는 고통스런 도피생활을 해야합니다. 양심수들과 수배자들은 '문민정부' 상황속에서 무슨 인권문제가 있겠냐는 편견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자칫 인권은 문민정부의 '맹점'의 위치에 놓여지지는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러한 맹점을 찾아내고 인권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되었다는 일은 정말로 축하할 일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가 인권문제로 고민하고 안타까와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을 하면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이 정녕 축하해야만 할 일인가 하는 서글픈 마음도 듭니다. '인권하루소식'이 '인권문제'가 없는 세상을 만들어내는 데 자그마한 가치있는 역할을 다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월간 사회평론 '길'>

불마차! '인권하루소식' 창간을 기대. 축하하면서. 그래왔던 것처럼 아직도 우리는 시들은 생존적 인권에 빛과 온기를 줄 불마차가 절실합니다. 공공업무라는 미명 아래 생존을 유린당하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에게도 광열이 있기를... '인권하루소식' 그대 온전지를 휘젓는 불마차가 되리라! <서울시 의료보험조합 해고노동자 김동중>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해외 각지에 사는 동포들로서 두고 온 남부조국의 양심수들이 자유를 되찾고 국가보안법이 완전 철폐되어 진정한 인권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조국이 되기를 갈망하는 우리들은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매우 다행으로 여기며 기쁘게 생각합니다. 해빙의 분위기 속에, 문민의 탈 쫓겨 가리워져 더욱 인권의 수치국으로 퇴보하고 있는 현실을 지켜보며, '인권하루소식'이 어두운 인권유린 소식에서 기쁜 해방의 선포를 알리는 지면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국가보안법 철폐 및 양심수 석방을 위한 미국운동본부 / 캐나다운동본부 / 호주운동본부>

창간을 축하하며 늘린 자를 쳐들고 굵은 것 퍼기에 더 한층 분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인권하루소식' 창간을 맞아 <국회의원 박계동>

김영삼 대통령께 300여명이 넘는 양심수들이 옥중에

창간 격려문

(도작순)

간혀 있는데 그 어찌 감히 문민시대·문민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부디 분단악법 "국가보안법"을 철폐하시고, 양심수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하여 역사에 길이 남는 대통령이 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나날이 아픈 소식들로 꼭 채워진 '인권하루소식'이 마침내, 자진 폐간되게 하소서. <투목작가 황석영, 박노해, 장의근, 박영희 씨를 회원으로 두고 있는 '민족문학작가회의' 일동>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인권하루소식'을 통해서 사람의 깃발인 권리를 폭로한다는 것을, 그런 노동을 매일매일 하리라는 것을 그것도 축하한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그저 손쉽게 비극이라 불려야 하는가?

한민족이 같은 민족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 바로 그 상식위에 가장 무거운 중형이 떨어지는 나라에서!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

소외된 사람의 인권을 위해서 '증단 없는' 노력을 바랍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간사 신승민>

93년 9월 7일부터는 인권담당기자 노릇하기가 한결 쉬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인권하루소식'이 창간되기 때문에 <월간 '말', 인권담당기자 신준영>

인권운동의 독립성, 중립성, 공정성에 근거하여 전 세계에서 자행되고 있는 인권유린 사태를 고발하고 이에 대항하는 소식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또한 수감자의 최소 기본조건, 난민, 사형, 어린이 문제, 인권교육프로그램 등 다양한 인권문제를 다룰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며, 진심으로 창간을 축하합니다. <국제 엠네스티 한국 지부 사무국장 오원호>

고발! '인권하루소식' 편집진이 24시간 내내 일하느라 일주일에 한번 퇴근이 힘들 정도로 격투에 시달린다는데, 인권보장을 외치는 인권단체에서 인권활동가의 인권유린이 웬말입니까!

"'인권소식', 몰아내어 활동가인권 지켜하자!"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민주회실천가족운동협의회 사무국>

달라진 게 없는 열악한 인권현실을 꿰고 달리는 인권 새벽 기관차의 힘찬 전진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인권이 보장되지 못하는 한국에서 참된 인권을 실현하고자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조그마한 땀과 정성은 아픈 과거를 던고 일어서는 작은 햇불로 타오를 것입니다. 한국인권운동의 기수 인권운동 사랑방 만세!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조정신, 권오중, 정은철, 정영훈, 유병식, 이수찬, 김정택, 이병철, 윤영덕, 임헌대, 권응상, 정철, 이대규, 정사용)>

우리의 인권이 밝은 햇살 아래서 걸어다닐 수 있을 때까지 힘찬 앞걸음을 기대합니다. <김제 요촌성당 문규현>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는 이 시대에 힘없는 자들의 권리를 찾게 해주는 것, 이것은 꼭 필요한 일이며, 모든 이가 참여해야 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최이레네 수녀>

인권을 향해 내어딛는 그대들 작은 걸음 앞에 힘찬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뜻깊은 용기로 함께 전진합니다. <김글라라 수녀>

억울하게만 당한 일은 없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뿐입니다. 365일 베스트셀러 '인권하루소식'이 그것을 알려줄 것입니다. <연대 대학원 생 류은숙>

'인권하루소식',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인권을 유린당한 채 어둠속에서 허덕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고난 받는 그분들의 팔다리가 될 수 있는 참 인권을 찾을 수 있도록 애써 힘쓰기 바랍니다.

인권운동 사랑방의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신근(주부)>

아빠! 힘내세요 <보슬·혜민>

과학으로서의 인권을 개척해주시 바랍니다 <채만수>

인권하루소식 준비호 총목차(준비 1호-24호, 8월 4일-9월 4일)

- 준비 1호(8월 4일, 수)
- 1면 : ·국보법 철폐와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연대농성 돌입 -민가협·법추본 공동주최 명동성당 전국 옥중 양심수 단식농성 참여
 - 유가협 박정기 회장 국순단 부단장 말아
 -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 8월 5일 결성
 - '유서사건 총자료집', 한정 200질 판매중
 - 2면 : ·노태훈씨에 대한 구속적부심 청구-천정배·이오영 변호사 3일 접수
 - 가톨릭 정보센터 국제연대활동 워크샵 개최
 - 윤금이 공대위 소식

- 준비 2호(8월 5일, 목)
- 1면 : ·민가협·법추본 명동성당 농성 속도-가두선전 및 장기수 한마당 가져 한총련 단식단 농성 참여
 - 한총련 구국대단식 돌입 8월 4일부터 13일까지
 - 노태훈씨 구속적부심 8월 5일 오전 11시
 - 천정배 장기수 후원회 지리산 3박 3일 수련회 가져
 - '민주법학' 6호 발간 민주주의 법학연구회에서
 - 엠네스티 한국지부 소식
 - 2면 : ·조국교수 구속 대처 공대위 결성-민교협·학단협 등 5개 단체

- 준비 3호(8월 6일, 금)
- 1면 : ·대전교도소 앞 밤샘농성 벌여-5일밤 11시 30분 현재 옥중단식대표자 면담요청 소속거부에 항의
 - '황석영 대책위', 결성 8월 5일 민예총 강당
 - 노태훈씨 불법체포 고소·고발인 조사 조용환·백승원 변호사 출두
 - 전전한 시위문화 어떻게? 민변·한교협인권위 공청회
 - 2면 : ·노태훈씨 구속적부심 기각-사법부, 국보법에 대한 태도 여전
 - 미군범죄 근절대책 촉구 미 대통령에게 열서보내기
 - '작가 황석영 석방 대책위원회', 성명서

- 준비 4호(8월 7일, 토)
- 1면 : ·대전교도소, 농성단에 폭력행사-손병선씨 팔 방패에 머리 찌려 부상 6일 오후 접견 후 해산
 - 양심선언 군인전경 대책위 결성-8월 9일(월) 종로구 효제빌딩 유후사에서

- 준비 5호(8월 10일, 화)
- 1면 : ·양심선언 군인전경 석방 요구-'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 9일 오후 발족 파고다 공원까지 행진도
 - 대전교도소장 폭력행위 인정-8월 6일(금), 부상자 치료 책 임지기로
 - 조국교수 석방 AI요구
 - 국제연대 워크샵 마쳐
 - 2면 :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 발족선언문(일부 게재)
 - 국제 엠네스티의 조국교수에 대한 긴급구명활동 촉구문
 - 한교협 인권위·민변 공청회 (공고)/주요공판 안내

- 준비 6호(8월 11일, 수)
- 1면 : ·'위안부'문제 정부입장 표명 요구 점대협, 대통령에 질의서 전달

- 시위문화 정착 정부 의지에 달려 사실상 허가제인 집시법 개정되어야
- 노태훈 석방요구 잇따라
- 2면 : ·일본정부의 강제 중군위안부 문제 2차 진상조사 발표에 대한 점대협의 입장(요약)
- '전전한 시위문화 정착, 어떻게 가능한가?', 백승원 변호사의 기초발제문(발제)

- 준비 7호(8월 12일, 목)
- 1면 : ·'위안부' 진상조사 배상 촉구 집회 점대협, 일본대사관 앞에서
 - 조국 교수 50일만에 기소 '반국가단체 구성' 혐의로
 - 국보법 시민한마당 열려 12일 6시 연대 노천극장
 - 여성단체 한 건물로 이사 '여성 평화의 집' 마련

- 준비 8호(8월 13일, 금)
- 1면 : ·'6공 정치수배 일괄 해제하라'-학생 등 6공 시국사건 수배자 대책위 구성 뒤 무기한 농성 돌입
 - '사회주의 과학원' 반국가단체로 규정-황주석·조국씨 등 기소내용에서
 - 손민아씨 사당의원에 입원
 - 중군위안부 문제 한일합동연구회 일본에서 열려
 - 2면 : ·국보법 등 혐의로 범민련 압수수색
 - 범민족대의 개막식 하루 연기하기로, 대통령 결단 요구
 - 국보법 한마당 장소 옮겨 진행
 - 범민족대회 대회장인 문익환 목사가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일부 게재)
 - 6공 정치수배자 농성자 명단

- 준비 9호(8월 14일, 토)
- 1면 : ·이적표현물 소지로 노태훈씨 기소
 - 일본변호사 41명·양심수 서화전 운영위 노태훈씨 석방 촉구
 - 9일, 국순단 대전교도소 시위로 6명 구속

- 준비 10호(8월 17일, 화)
- 1면 : ·엠네스티, 한국 인권상황 "암울하다"-국가보안법과 노동쟁의조정법 개정, 양심수 전원석방 요구
 - 성순회씨(손병선씨 부인) 투병끝에 사망-수배 중 지병 악화로, 19일 장례식
 - 황석영씨 3회 공판 / 배병성씨 변호인 보석신청
 - 주요공판 안내, 불교인권위 이전
 - 2면 : ·'8-15 특사'에 분노 일본 한국관련 인권단체
 - 이문옥 감사관 구형공판
 - 이내창열사 4주기 추모식
 - 엠네스티 뉴스 97호(93. 8. 13) 한국:개혁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인권상황은 여전히 암울

- 준비 11호(8월 18일, 수)
- 1면 : ·'손병선씨 일시 석방 불투명'-18일(수) 9시 20분 담당재판부 결정, 딸 손민영씨 48시간 일시 석방
 - 유가협, 범민족대회 기간 국회청원 서명운동 벌여
 - 김용갑열사, 이내창열사 추모사업회 추모비 건립 추진
 - 양심선언 구속 전경·군인 재판 연달아 열려

- 회의(8월 18일, 수)
- "대법원, 손병선씨 부인의 장례식 참석 끝내 가로막아"

인권하루소식 준비호 총목차(준비 1호-24호, 8월 4일-9월 4일)

준비 12호(8월 19일, 목)

1면 : 김 정권의 인권개선 의지 곳곳에서 구멍, "문민적 정부" 한계 드러내 손병선씨, 부인 장혜식 참석 불허 노조 간부집 도청
·AI 제21차 국제대의원 총회열려 보스턴, 8월 6-14일
·안내란(고 성순씨 여사 영결식, 도청사건 기자회견,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마로잡음 등)

준비 13호(8월 20일, 금)

1면 : '비이성적 반인륜적 도청행위 고발'-창원 현대정공 노조간부 집에 설치 강수법 의원·전노협 밝혀
·손병선씨, 대법원 결정 항의 단식농성
·안내란(수배자 대책위 투쟁속보 발간,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일정변경 등)

준비 14호(8월 21일, 토)

1면 : 정부, "직업병 의원, 담뭍기 부추켜"-원진레이온 터 용도변경 노동자들 '원진직업병 특별법' 마련 요구
·양심선언 전경에 징역 2년 구형 강태중 일경 첫 재판에서
·손병선씨 단식마쳐

준비 15호(8월 24일, 화)

1면 : 원진, 대책없는 파산 결정 거부 농성 돌입-명동성당, 24일부터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케네디 인권센터, 유엔 '차별소위'에 국가안보에 관한 법률조사 요청
·정치수배자 대책위, 총장 등 15여명 서명받아
·김근태씨 고문경찰들 4년 9개월만에 법정구속
2면 : 유엔 차별방지과 소수자 보호에 관한 소위원회 쿼하(케네디 인권센터의 서한)
·공판안내

준비 16호(8월 25일, 수)

1면 : '원진' 350명 명동성당 농성 돌입-24일 고용보장·직업병 대책 마련요구 '원진백서'도 간행
·속초 동우전문대 분규예고-김용갑열사 추모비전립등 요구 단식농성
·김국혜씨 폭행미군, 30일 선고
·민가협, 수련회, '유가협', 호남지부 총회

준비 17호(8월 26일, 목)

1면 : 한국판 '로드니 킹' 사건-가평군 군청지원·경찰이 장애인 무차별 구타
·민가협 공동의장, 배병성군 부모 수배
·중인 폭행혐의(1주일 진단), 26일 배군 부모 출두키로
2면 : 속초 동우전문대 파행적 운영-학내신문 사전검열, 전 재육 이사장 금품제공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 12명 새로 합류-28일 '가족 상봉의 날' 행사도 갖기로
·조국대책위 기자회견 공고
·'장애인 폭행 비상대책위원회'의 성명서

준비 18호(8월 27일, 금)

1면 : 정신대문제 유엔 차원 조사-26일 유엔 차별소위, 결의안 채택 특별보고자 임명 결정
·민정련 원주지부 회원 9명 연행-영장제시 없어, 연행사유

및 장소 안 알려

·원진실상 바로알리기 행진 명동성당에서 탑골공원까지
·양심선언 군인·전경 재판 잇달아 열려
2면 : 조국 교수 대책위, 공소 취하 요구 기자회견, 문민정부의 사실상의 독재 회귀
·(유엔 인권소위) '전쟁중의 노예제 및 유사 노예제 행위'라는 결의안

준비 19호(8월 28일, 토)

1면 : 장의군·김성만 등 '자의적 구금'-유엔 구금 실무위 규정, 정부 결정사실 숨겨와
·영장없는 잇따른 강제연행, 인권상황 6공 회귀-민정련 원주지부 회원등 13명 강제연행
2면 : 장의군, 황대권·김성만씨 사건의 개요
·이종수 일경 재판연기
·유엔세계인권대회 평가회 열려/원진레이온 결의대회 오늘 3시 열려

준비 20호(8월 31일, 화)

1면 : 부더기 구속·짜맞추기 수사 여전-민정련 '원주지부 사진', '예비모임 참석했다고 하나 당시 수감중'
·속초 동우전문대 학생들, 단식농성 풀어-재단측에서 요구 사항 대부분 받아들여
2면 : 학생 수배자들, 가족들과 상봉 28일(토) 연세대에서
·황석영씨 4회공판, 변호인 반대신문 마쳐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 결정문(발체)
·공판안내

준비 21호(9월 1일, 수)

1면 : 수배·해고 노동자 94일째 농성중-복직·수배해제·구속노동자 석방 요구 민주당사에서
·'양심선언'에 징역 2년 선고 30일, 이동익 일병 공판에서
·인권운동 사랑방 월례세미나 성황(강사:박원순 변호사)

준비 22호(9월 2일, 목)

1면 : 정부, '정신대' 문제 굴욕적 태도-'배상·보상 요구 압기로' 재천명
·양심선언 고대성 일병 유죄판결 3년 선고, 11사단 보통 군사법원
·강압수사 합의 단식중 탈진 민정련 회원 공인표씨
2면 : (외무부의 정대협) 질의사항에 대한 회신(전문)
·외무부 답신에 대한 정대협의 입장

준비 23호(9월 3일, 금)

1면 : '양심선언'에 잇단 유죄선고-'군무이탈' 이유로 명예회복 길 막아
·'6공 정치수배 해제는 과거청산의 문제' 수배자 대책위, 악법철폐등 요구

준비 24호(9월 4일, 토)

1면 : 출감후 의경재복무 거부에 제차 영장 청구-단원서 제출, 의경전경 시위진압 동원 부당
2면 : (김대영 의경) 단원서(발체)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과거 잔재청산 및 국민화합 차원 수배해제 필요

7일 연세대 민주광장, 수배해제 촉구대회 500여명 참가

'6공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는 7일 오후 4시 연세대 민주광장에서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촉구대회'를 갖고 정치수배자의 일괄 수배해제를 요구하였다.

수배자 40여명, 수배자의 가족, 민가협 회원, 수배자의 출신학교의 친구, 선후배 등 500여명이 참가한 촉구대회는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 등의 연대사, 수배자 정은철(임수경씨 방북관련 수배)씨의 수배생활과 수배자 임현태(91년 연대 총학생회장)씨의 어머니의 고통과 바람, 김석영상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을 발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전국연합 황인성 집행위원장은 연대사를 통해 "국민의 공복이어야 할 고위공직자들이 누구보다도 더 치부에 합당한 사실이 재산 공개를 통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며, "누구보다도 더 민주화를 위해 애쓴 이들이 신한국건설 과정에서 여전히 수배자라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전국연합은 수배해제, 양심수 전원석방 그리고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위해 노력할 것을 다짐하였다. 안옥희(김종식 5기 전대협 의장 어머니) 민가협 의장은 수배자 자식을 둔 부모의 고통을 이야기하며 "우리의 아들딸인 수배자 모두가 이번 추석을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자"고 호소하였다.

이어 지난 89년 임수경씨의 평양 학생축전 참가 관련자로 수배된 정은철씨가 수배자의 삶과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였고, 임현태(91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씨의 어머니가 아들이 수배되어 겪은 고통을 토로하며 아들의 수배해제를 요구하였다.

수배자 대책위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에서 "군사정권에 의해 유린된 인권을 회복하고, 과거의 잔재를 청산"하는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민적 화합과 신한국 건설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부여 차

2년 구형받은 강태중 일경 합의부로 이송 공판재개

9월 8일 선고재판이 열릴 예정이던 강태중 일경에 대한 공판이 10시 전주지원 정주지법에서 합의부로 이송되어 재개된다. 이미 지난 8월 19일 2년 구형을 받은 강태중 일경은 3년 이상의 형을 받는 죄를 범한 경우 합의부에서 재판한다는 법원조직법 32조의 규정에 따라 이송된 것이다.

강태중 일경에 대한 혐의 내용은 근무지 이탈죄로, 이 죄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원에서도 정치수배는 해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촉구문', 2면 참조)

한편 촉구대회에 앞서 정치수배자 가족과 친구 등 8명은 오후 3시 대검찰청을 방문, 검찰총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다가 정상용 공안 3과장을 만나 수배해제 탄원서를 제출하였다.

검찰은 이날 면담을 통해 입장은 지난 4월 20일에 발표한 '자수하면 최대관용'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1달만에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합니다. 그동안 편집기술상의 문제점, 기사취재 방법상의 문제점, 발송작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드디어 일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인권하루소식',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성금을 보내주시실 분은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작은 정성도 필요합니다)

법원, 김국혜씨 폭행범 존 로저 공판 재개하기로

지난 5월 29일 강남구 서초동 매주집 주인 김국혜(51세)씨를 폭행, 기소되어 재판을 받아온 존 로저 병장에 대한 선고공판이 9월 8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검찰의 공판재개신청이 받아들여져, 2시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어 8월 30일 이어 2번째 선고공판이 열기되었다.

살로이 존 로저(20세)는 미국에서 제2사단으로 배속되어온 날 김국혜씨를 뇌수술까지 받을 정도로 무자비하게 폭행하였었다. 7년형을 구형받은 존 로저는 한미행정협정 본문 22조 5항에 따라 미군 영내에 구금되어 있다.

「정신대 진상규명위원회」 발족

8월 25일, 강만길 교수 등 학계 중심으로

정대협은 한국민간인 차원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정신대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강만길 교수, 고려대)를 8월 25일 구성하여 활동에 들어갔다.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은 국내 민간단체에서 정신대 문제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는 데에 의의가 있다.

정대협 관계자에 의하면 “문서 등의 거의 모든 자료를 일본측에만 의지하면 서 일본의 반응을 지켜본다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며, “정신대 진상규명 문제의 심화를 위해 한국 민간측에서 자료를 연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밝혔다.

위원으로는 강만길 교수와 윤정옥(전 이화여대, 정대협 공동대표), 이만열(숙

명여대, 한국사), 강창일(배재대, 일본학), 정진성(덕성여대, 사회학), 조동걸(국민대, 한국사), 강덕상(일본히도쓰바시대학, 한국사) 교수와 방선주씨(재미사학자) 등이다.

진상규명위원회는 새 자료의 발굴, 군위안부 백서 발간, 군위안부 관계자 조수집 등을 연구목표로 하고 있다.

정대협 내의 특별기구로 법률가들을 중심으로 한 법률전문위원회(위원장 김찬국 교수, 경희대 법학)가 3월 29일 이미 구성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중이다.

한편 매주 벌어지는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는 이번 주에는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국(745-4943) 주관하에 12시에 열린다.

◆ 안 내 ◆

□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

- 장애인 교육권 확보, 어떻게 할 것인가

일시 : 93. 9. 9. 수. 오후 2시
장소 : 기독교회관 대강당(종로 5가)
토론자 : 이원욱(교육부 보통교육국장), 김인영(민자당 국회의원), 박범신(민자당 국회의원), 박석무(민주당 국회의원), 김성재(한신대 교수)

이번 토론회는 교육부에서 입법예고한 장애인 교육법률안과 특수교사·교수 등이 마련한 법률안을 중심으로 비교토론하는 자리이다.

□ 「윤금이 공대위」 활동평가회(9월 8일 오후 2시)

「주한 미군의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9월 8일 오후 2시 그 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갖는다. 공대위 활동의 성과를 계승할 방안이 모색될 이번 평가회에서는 「윤금이 공대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 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구성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내는 촉구문

문민정부 출범!

이것은 인간의 기본 인권과 상식이 통하지 않는 긴 독재의 하늘을 살아왔던 국민들에게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선 변화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독재치하에서 너무도 많은 상처와 슬픈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환한 미소로 우리 곁에 있던 사람들이 독재의 칼날에 스러졌으며, 동료의 죽음앞에 정의의 두 주먹을 움켜쥔 자 감옥으로 끌려갔고, 뒤를 이어 민주와 통일의 깃발 지켜내려는 사람들 수백에 쫓겨 불안과 공포의 나날을 살아야 했습니다. 때문에 과거의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부조리를 청산하며 비인간적 독재적 요소의 청산을 주장하는 문민정부의 출범은 국민 모두에게 커다란 기대와 희망을 갖게 했습니다. 더구나 6공시절 독재정권과 맞서 싸우다 수배되어 수년동안 기관의 집요한 추적에 쫓겨 도피생활을 해온 정치수배자들에게 있어서는 이러한 문민정부의 구호가 너무도 절실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4월 20일 6공 정치수배에 관한 정부의 발표는 실망 그 자체였습니다. ‘자수하면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는 요지의 검찰발표는 실낱같은 희망을 찾아 어둠의 세월을 살아온 정치수배자들에게 가혹하기 이룰 데 없는 것입니다. 독재정권 시절에 발생한 아픈 상처를 치료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자는 정부가 정치수배자들에게 민주와 통일에 대한 활동을 부정하고 반성하는 차원에서 자수하라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정치수배자들은 신한국 건설을 주장하는 대통령과 검찰에 촉구합니다.

첫째, 6공 정치수배 문제는 비민주적이고 반동일적인 독재정권과 맞서는 국민 모두의 투쟁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이며 상처입니다. 과거를 청산하고 민주와 회복과 통일을 주장하는 문민시대에 더이상 이들을 추적할 필요가 없으며, 오히려 그들과 함께 민주와 통일을 노래해야 합니다.

둘째, 지난 시절 정권안보를 위한 인권유린과 탄압을 극복하고, 파괴된 인권을 회복하며 국민 모두가 자신의 의사를 마음놓고 자유로이 내놓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정치수배자들은 부당한 권력의 수배조치에 의해 수년동안 가족과 친지, 친구들과의 인간적 관계를 단절당한 채 거리를 헤매야 했습니다. 또한 모든 공민권을 박탈당하고, 어느 한 곳에서도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할 수 없었습니다. 문민시대를 이야기하는 지금 더이상 이러한 인권유린이 계속되어서는 안됩니다.

셋째, 지역분열과 계급계층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범국민적 화합에 기초한 새시대 신한국 건설을 주장하는 현 정부는 이러한 시대정신에 맞게 범국민적 화합의 차원에서 그리고 새시대에 함께할 기회마저 박탈당한 정치수배의 강요를 철폐하고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의 결단을 하루빨리 내려야 합니다.(후략)

1993년 9월 7일

6공 정치수배 일괄해제를 위한 전국 정치수배자 대책위원회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사 철폐’ 주장하며 분신

8일 광주교대 이경동씨, 전신 85% 3도 화상 위독

광주교대 이경동(25세, 윤리학과 4학년)씨가 8일 12시 50분경에 ‘교원 임용고사 철폐’ 등을 주장하는 유서를 남기고 분신, 전신 85% 3도 화상의 중태에 빠져 9일 오전 4시 현재 전남대 병원에 입원, 치료 중이다.

이경동씨는 12시 50분경 광주교대 학생회관 옆에 있는 음악관 뒷편에서 분신하며, 학생과 직원들에 의해 조산대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광주교대 음악관 3층 난간에서 분신장면을 처음으로 목격한 이상진씨(음악과 2학년)는 “음악관 뒷쪽에서 사람이 걸어나오면서 평하는 소리와 함께 온몸에 불이 붙고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분신 당시의 정황을 밝혔다.

이씨는 광주교대 학생들, 아버지·어머니, 교수들과 국민에게 보내는 유서 등 5종의 유서를 남겼다. ‘국민 여러분들께’라는 유서를 통해 “우수교원 확보라는 명분으로 실시되는 임용고사는 대학을 입시학원으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임용고사 철폐’와 ‘주한미군 철수’ 등을 주장하였다. (유서 2면 참조).

분신 소식을 들은 남총련과 광주 전남연합을 비롯한 시민단체들은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시민대책기구’(집행위원장 진관 스

님, 062-225-8117)를 결성하고 이경동씨가 유서에서 중점을 둔 사형인 교육문제 중심으로 활동을 전개하기로 하였다. 시민대책기구는 오늘 오후 4시에 기자회견을 열어 앞으로의

대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날 분신한 이경동씨는 89년 광주교대에 입학하여 92년 대의원 활동을 했고, 교육 동아리인 ‘아해사랑’에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삼석씨와 여동생 불법 연행당해

8일 낮, 영장도 없고, 연행장소도 밝히지 않음

9월 8일 오후 1시 30분경 김삼석씨(30세, 범주본 일본문제대책위, 태평양유가족회 활동)가 봉고차 2대와 검은색 승용차를 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정대협 간사)씨에 의하면 컴퓨터와 컴퓨터 디스켓, 책, 비디오테이프 등이 없어졌고, 이웃 사람들에게 의해 연행 장면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오후 8시경 김삼석씨는 “2-3일 정도 걸릴 것 같다. 적정하지 말아라”는 전화를 해왔으며, 어디에 있는냐는 윤씨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을 안했다고 한다.

한편 김삼석씨의 여동생인 김은주(26세)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1시 30분 사이에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김은주씨가 일을 도와 주고 있는 이모에게 오전 10시에 전화한 후 연락이 없었다고 한다. 오후 8시에 경찰 6명이

김은주씨 집(김삼석씨는 분가)에 와서 압수수색영본문제대책위, 태평양유가족회 활동)가 봉고차 2대와 검은색 승용차를 탄 경찰에 의해 연행되었다.

「인권하루소식」을 지켜주십시오

후원금을 받습니다

준비 1호를 발간한 이래 1달만에 「인권하루소식」을 창간합니다. 그동안 편집기술상의 문제점, 기사취재 방법상의 문제점, 발송작업의 문제점 등에 대한 점검을 거쳐 드디어 일정한 자신감을 가지고 오늘에 이른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인권하루소식」, 여러분의 힘으로 지켜주십시오.

성금을 보내주실 분은 아래의 구좌로 보내주십시오. 제일은행 128-10-131017 (예금주: 서준식) (작은 정성도 필요합니다)

김은주씨가 일본에서 공부하며 찍은 사진과 책 등을 압수해갔다. 경찰은 “머칠 전부터 김은주씨 뒤를 밟았다”는 말도 했다고 한다. 오후 9시 30분경에는 형사 2명이 다시 찾아와 빠뜨리고 간 책이 있다며 1권을 압수해갔다.

오후 10시에 김은주씨는 집에 전화를 하여 김삼석씨와 동일한 내용을 이야기하였다.

경찰, 안기부 직원 중인 신창이공순 기자 25차 공판에서

한겨레신문 이공순 기자에 대한 25차 공판에서 검찰은 안기부 직원 도연주씨 등 3명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였다. 다음 공판은 10월 6일 2시에 열린다.

주한미군 범죄근절 위한 상설기구 결성하기로

「윤금이씨 살해사건 공동대책위원회」(공동대표 박순금씨등 4명)는 9월 7일 오후 2시 기독교회관 신관에서 20여 단체가 모여 그동안의 활동에 대한 평가회를 갖고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상설기구'를 결성하기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였다.

평가회에서는 무수히 많았던 주한미군의 범죄중에서 처음으로 각 단체 공동으로 미군을 법정에서 세워 엄벌에 처하였고, 많은 단체가 연대하여 미군범죄의 심각성을 알리는데 일조하였다고 그동안의 활동 성과를 정리하였다. 공대위는 또 주한미군의 범죄가 한미간의 구조적인 문제에서 발생하는 것이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상설기구가 필요하다는 평가를 하였다.

평가회가 끝난 직후 '주한미군 범죄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미군범죄와 미군기지 실태 조사위원회', '기지촌여성 실태 조사위원회'와 '한미행정협정 개정위원회' 등을 설치할 계획이다.

한편 준비위원회는 상설기구에 윤금이씨 공대위 참가단체는 물론 여러 민주단체, 그리고 개인 자격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 김국혜씨 증언들기로

김국혜씨에 대한 폭행 혐의로 기소된 존 로저 병장에 대한 공판이 9월 8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21호 법정에서 재개되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재판장, 하광호 판사)는 성폭행 여부를 가리기 위해 피해자 김국혜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10월 6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직권으로 결정하였다.

<이경동씨 유서 5통중 하나>

국민 여러분들께 한 교대생이 호소합니다

우리는 처음으로 군사독재가 아닌 우리의 손으로 뽑은 문민정부를 탄생 시켰습니다. 문민정부에 대하여 우리는 역대 어느 정권보다도 높은 지지를 보내며 김영삼 정권의 개혁을 지켜 보았습니다. 하지만 김영삼 정권은 문민 정부의 허울을 쓴 미국에 예측된 정권임을 들어내고 말았습니다. 일회적이고, 순간적인 발상으로 국민의 눈을 현혹만 시켜 왔습니다. 재산공개를 통한 사정관과는 자신의 정적만을 없애고 군인사 개혁에서는 자신의 반대파를 제거하고 자기의 구미에 맞는 사람을 동용하고, 물론 지난 시기에 비하여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난 시기에 우리들은 아무것도 갖지 못하다가 아주 작은 부분만을 던져 주는 것을 대단한 것 같이 현혹되어 있습니다. 문민정부라고 이야기하는 정권에 국민이 피부로 느끼는 개혁은 하나도 없습니다. 5·18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이 그랬습니다. 전 국민적으로 요구를 했지만 그들은 5·18의 실질적인 책임 당사자이자 문민정부라 이야기하는 정권의 가장 든든한 기둥이기에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5·18 문제가 돈으로 해결될 문제임이 아닌 데도, 돈으로 넘어가려는 수작입니다. 미국의 농산물 때문에 죽어갔던 우리들의 고향인 농촌이 죽어가도 그들은 대책을 세울 능력조차 없는 정권입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오로지 농약으로 오염된 수입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고통분담이라는 미명하에 없는 사람들의 목만 더 조여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얼마나 고통을 당하며 살아왔는데 또 다시 고통을 나누어 갖자니 그것이 말이냐 되는 소리입니까. 가진 자들은 발전하도록 도와 주면서 문민정부라 하는 정부가 지금은 발전이 필요한 시기이니 고통을 분담하자니 이것이 언론의 추앙을 받는 문민정부입니다. 반세기 가까이와 오는 분단의 현실을 무시한 채 그렇게 또 하나의 조국인 우리의 반쪽이 얼마나 위험한 존재이기에 그토록 호통들을 떨면서 야단인지, 옛날의 침략자인 일본은 엄청난 양의 핵원료를 보유해도 아무런 대처도 못하면서 우리의 핏줄을 가지고는 확인도 않된 일을 가지고 대단하게 떠돌고 있는지, 그리고 같이 통일을 하자고 하는데 왜 그렇게 단압을 하는지. 전 세계가 민족중심으로 가는데 아직도 한반도는 구식 체계로는 냉전 이데올로기가 작용을 하고 있고 한 나라의 수도에 외국군이 든 한판도 내지 않고 도리어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갈수록 더 많이 내고 있는 나라입니다. 자기 땅은 외국군대가 요청만 하면 어느 곳에 내 주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욱더 기가막히는 일은 외국군을 위해서는 주라는데로 다 주면서 나라의 백년지대계인 교육비조차 늘리지 못할 망정 고통분담으로 삭감조치하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하여 존재하는 정부인지 궁금합니다. 이런 대통령께 묻고 싶습니다.

특히나 우수교원 확보라는 이름으로 실시되는 사범대, 교대생들의 임용고시는 대학자체를 입시학원화 시켜 버리고 있습니다. 단지 지식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우수한 교사인 양, 어찌 지식 판매자가 우수 교원일 수 있겠습니까. 우수교원은 지식이 많고 적응이 아니라 얼마나 인간을 위한 교육을 가르칠 수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원활하게 진행된 양성고 수급의 문제가 불균형 상태가 되고 교육대학의 학사운영이 파행적으로 치달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 교대생들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학교보다는 학원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발령이 나면 우리의 아들 딸은 지식판매자로부터 지식만을 돈주고 배워가는 형태가 될 것입니다. 외롭게 싸우고 있는 교대생들에 대한 지지는 곧 우리들의 아들 딸을 올바르게 키우는 조건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것이 극단적인 생각이라고 하실지 모르지만 저의 한몸 희생이 국민들이 눈을 뜨고 교대생들이 합있게 싸우게 되는 계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는 외세에 예측되지 않고 분단의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일한 만큼 벌고 우리들의 아이들은 마음껏 동심을, 꿈을 키우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하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미국없이 더 잘산다 미국놈들 몰아내자 / 칠천만이 하나되어 조국통일 완수하자
문민정부 기만이다 김영삼 정권 반대한다 / 우수교원 허울 속에 예비교사 죽어간다
임용고시 철폐하라 / 임용고시 철폐하고 참교육을 생취하자 / 전교조 합법화, 해직 교사 복직은 시대의 요구이다

하나되기 49년 9월 4일 교대의 한 학우가

정대협, 사회당 위원장에 게 '진상규명' 노력 요구

정대협은 지난 9월 6일

야마하나 사다오 일본 사회당 위원장에게 군위안부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

한 배상"과 "일본 의회 내에 진상규명 및 배상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알림

*조국 교수, 황주석씨 등 7인에 대한 첫 공판이 오늘(1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석형씨 등 출소장기수들이 생활하고 있는 '봉천동 만남의 집' 전화번호가 876-0945로 바뀌었다.

"김영삼 정부 왜 이러나", 불법연행 횡행

8일 김삼석씨 남매 연행, 10일 오전 2시 현재 소재 파악도 안돼

지난 9월 8일(수)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서 김삼석(30세, 93 범민족대회 일 본대책위원회 책임간사)씨와 그의 누이동생 김은주(26세)씨가 소속을 알 수 없는 기관원들에게 연행되어 10일 새벽 현재까지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인권하루소식', 9월 9일자 참조).

김씨의 동생 김은주의 물품을 압수하면서 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았으며, 신분도 밝히지 않은 채 두 차례나 수색을 한 사실을 볼 때,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연행과정 자체도 구속영장 등의 제시없는 불법 연행이 확실시된다. 더욱이 이들은 구금장소마저도 가족들에게 알리지 않는 독재시대의 구악을 재현하고 있다.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29세, 한국정신대대책협의회

간사)씨와 김씨 남매의 어머니는 경찰청, 남영동·홍제동 보안분실 등에 찾아가다니며 두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했으나 어디에서도 소재지를 확인하지 못했다.

김영삼 정부 하에서 연이어 발생하는 이러한 불법 연행에 대하여 민가협(상임의장 안옥희), KNCC 인권위(위원장 김찬국), 전국연합 인권위(위원장 서준식) 등은 9일 오후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우리는 김씨 남매에 대한 연행과 그 이후 지금 이 시각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이 3, 4, 5, 6공화국 정보기관원들의 폭력적이고 음습한 인권침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대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서', 2면 참조).

성명서에서는 이어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김씨남매의

소지품을 즉각 반환할 것", "김씨남매의 불법강제연행 관련자에 대한 책임자를 파면·구속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격려문 (추가분)

사각지대에 방치될 인권회복을 위해 더욱 애써 주십시오. 좀더 다양하고 풍부한 인권소식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물론 이런 소식지가 발행되지 않는 좋은 세상이 돼야겠지만) <월간 우리교육 서은경 기자>

'인권하루소식'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인권운동의 큰 기반이 되리라 믿으며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노동인권회관 김문수>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축하드립니다. "파사현정"의 불꽃으로 사람이기를 거부하는 자들의 차가운 가슴을 후끈 지펴 더운 피가 흐르는 가슴이 되도록 용맹진전하십시오. <동국대학교 노동조합>

열악한 여건속에서도 이땅의 인권현장을 지키기 위해 태어난 인권하루소식의 힘찬 발걸음을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억눌리고 갇힌자, 가난하고 소외당한자들의 소식을 전하는 희망의 참언론으로 우뚝 서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 국회의원 정상용>

이땅의 어두운 곳을 밝히는 '인권하루소식'이 되어, 오늘의 '인권'을 하루하루가 갈수록 향상시키는 커한 소식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시대는 변하였다고 해도 인권의 사각지대는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별로 변한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에 '인권하루소식'은 인권의 사각지대를 비추는 햇불이 될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의 창간을 충심으로 축하하며 무궁한 발전을 빕니다. <대한변호사협회 인권위원장 변호사 최영도>

분신한 광주교대 이경동씨 끝내 사망

9일 아침 전남대 병원에서, 13일 장례식

지난 8일 낮 12시 50분에 광주교대 교정에서 '주한미군 철수', '임용고시 철폐' 등을 주장하며 분신, "민족자주 교육개혁 깃발"고 이경동 열사 민주국민당"으로 치르기로 하였다. 장지는 망월동 민주열사 묘역이다.

이경동씨의 부모, 광주전남연합 등은 장례위원회(위원장 오종렬 광주전남연합 의장)를 구성, 13일에 전남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오던 이경동(25세, 윤리학과 4학년)씨가 9일 아침 7시 15분에 전남대 병원에서 끝내 사망하였다.

“장애인’ 무상의무교육 절실하다”

9일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에서 주장

문교부가 지난 7월 2일 입법예고한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안과 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위원장 김성재 한신대 교수, 521-5364, 이하 공대위)의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을 비교하는 ‘장애인

교육관련 법안 토론회’가 장애인, 부모, 특수교사 등 2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9일 오후 2시 기독교 회관 강당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이철자 한 국제활재단 부장의 사회로 교육부 김원경 사무관(의

무교육과), 민주당의 박석 무 의원, 김성재 공대위원장 등이 토론자로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민자당은 안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불참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의무(무상)교육의 실시여부, 조기교육기관 양성화 방안, 장애의 유형과 정도에 따라 교육기관에 배치하는 ‘판별위원회’의 권한 등이 쟁점

이었다.

교육부는 형평성과 예산의 제약으로 의무무상교육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공대위는 이에 대해 특수교육 및 치료를 보장하는 의무무상교육뿐만 아니라 인력양성 방안 등에 대한 법제화를 주장하였다. 민주당은 공대위 주장을 상당수 받아들인 거의 비슷한 주장을 하였다.

성명서

김삼석씨와 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불법연행을 규탄한다

지난 9월 8일(수요일) 오후 1시 30분을 전후해서 93법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일본대책위원회 책임간사를 지냈던 김삼석씨(30세)와 그의 누이동생 김은주씨(26세)가 정체를 알 수 없는 기관원들에 의해 연행당했다.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29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씨에 의하면 저녁에 퇴근을 하여 집에 와보니 컴퓨터, 디스크, 책 등을 포함하여 심지어는 결혼식을 촬영한 비디오 테이프까지 없어져 있다고 한다. 김씨가 사는 동네의 주민들에 의하면 오후 1시 30분경에 봉고차 두대와 검은색 승용차를 동원한 신원미상의 사람들이 김씨를 연행하였다는 것이다.

또한 이날 저녁 김은주씨의 집에는 “치안본부에서 나왔다”(치안본부는 경찰청으로 바뀜)고 하는 6명의 피한들이 찾아와 압수수색영장도 제시하지 않은 채 김은주씨의 책, 사진 등을 가져갔다.

그리고 이날 밤에는 김씨 남매로부터 가족에게 각각 전화가 걸려와 매우 힘든 목소리로 어디에 있다는 말도 하지 못하고 “2, 3일 후에 갈테니 걱정마라”는 말만 남겼다.

9월 8일 밤을 뜬눈으로 지새운 김삼석씨의 부인과 김씨 남매의 부모들은 하루종일 각 경찰 및 정보기관을 찾아다니며 두 사람의 행방을 수소문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모른다”, 또는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김씨 남매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는 김씨 남매에 대한 연행과 그 이후 지금 이 시가지까지 진행되고 있는 모든 과정이 3, 4, 5, 6 공화국 정보기관원들의 그 폭력적이고 음습한 인권침해를 그대로 재현하고 있는데 대해 전율하지 않을 수 없다.

압수수색영장도 없이 집안에 침입해서 물건을 가져가는 문민경찰이 어디 있다는 말인가. 가족들에게 행방조차도 알려주지 않고 뜬눈으로 애태우게 하는 수사가 과거와 다른 점이 무엇이란 말인가.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씨는 현재 임신 8개월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정대협이 바쁜 업무도 거의 보지 못한 채 남편의 행방을 애타게 찾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황으로 보아서는 이 불법무도한 기관원들이 김씨 남매를 연행하는 과정에서 합법적인 과정을 거쳤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김삼석씨는 최근까지 사단법인 태평양전쟁희생자유족회의 사무장, 그리고 93법민족대회 남측추진본부 산하의 일본문제대책위원회의 책임간사로 일하면서 태평양전쟁 당시의 조선인 피해문제에 대한 완전한 진후처리와 일본의 정적군사대국화 저지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활동해온 사람이다. 김은주씨도 그간 천주교 청년단체 활동을 통해 민주화운동을 해오면서 국제세계에 대한 보다 넓은 시각을 얻기 위해서 일본유학을 준비하면서 공부해 온 사람이다.

이 김씨 남매는 우리 민족의 시대적 과업, 특히 일본의 민족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젊음을 바쳐오고 있는 훌륭한 젊은이들이다.

이번과 같은 불법연행은 지난 시기 좌경과 국가보안법의 굴레를 씌워 갖은 방법으로 탄압해 온 과거 군사독재정권의 망령이 또다시 이 김삼석씨 남매에 드리워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할 수 없다.

현재 은 국민의 관심속에 진행되고 있는 부분적인 과거청산 작업속에서도 공안 수구세력이, 두 젊은이가 일본과의 민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일본을 몇차례 왕래하는 과정에서 생긴 작은 문제를 꼬투리삼아 새로운 공안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강하게 가진다.

우리는 김씨 남매를 연행하고 가택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관계기관이 즉시 김씨 남매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고 후시라도 조사할 것이 있다면 변호사의 접견이 허용된 자유로운 공간에서 공정한 법 절차를 지키면서 조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

1. 정부는 불법연행당한 김삼석씨와 김은주씨 남매를 즉각 석방하라.
2. 정부는 불법적으로 강탈해간 김씨 남매의 소지품을 즉각 반환하라.
3. 정부는 김씨남매의 불법강제연행을 책임지고 관계기관의 책임자와 담당자들을 즉각 파면하고 구속수사하라.
4. 공안 수구세력은 반민족악법인 국가보안법을 이용해서 다시 공안사건을 조작하려는 의도가 있다면 이를 즉시 철회하라.

1993년 9월 9일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인권위원회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안기부, 문민시대에 과거 불법수사관행 여전

김삼석씨 남매 8일 대낮 연행, 잠안제우기·가혹수사 여전

10일 오후 3시 영장 발부 영장없이 체포와 가택수색을 실시하고, 가족에게 소재지와 연행이유, 자신들의 신분을 거짓으로 밝혀 3일 동안이나 행방이 묘연했던 김삼석·김은주씨의 남매의 강제연행은 안기부의 소행으로 밝혀졌다.

이들 남매의 행방은 10일 오후 1시경에 안기부의 요청으로 김철에서 서울형사지법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사실이 확인됨으로써 알려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에도 가족에게는 이들의 소재와 연행이유를 알리지 않았다. 서울형사지방법원은 3시경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였다.

10일 오후 7시 30분에 김씨 남매를 접견한 윤미향(29세, 김삼석씨의 부인, 정신대대책협의회 간사)씨에 의하면 “면회실에 들어오는 데 넋이 나간 사람 같았다. 이야기 자체를 하려 하지 않았다. ‘잠을 재우지 않았고, 방금 전에 조금 잤다’는 말을 했으며, 부인인 나와 시선을 맞추지도 않고 멍하니 한 곳만을 응시하고 있었다”며 꼭 마약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고 한다. 또한 여동생인 김은주씨는 면회장에 들어올 때부터 계속 울기만 하였다고 한다.

면회실에는 안기부 직원 4명이 함께 있었고, 한 명이 대화내용을 적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실도 모르고 있었으며, 자술서를 강요하면 쓰지 마라고 하자 김은주씨는 “이미 자술서를 쓴 것을 반복할 수 없잖아”라는 말을 하며 울먹였다. 조사내용이 무엇이나는 물음에는 대답을 하지 못했다고 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불법연행에 대해 서울법원의 당직상황실에 신고를 하여 도건출 변호사가 4시경에 김삼석씨를, 민가협이 부

탁으로 김제완 변호사가 김은주씨를 접견하려고 하였으나 준비 등의 이유로 11일 오전에 가능하다고 하였으며, 가족들의 면회를 약속하여 면회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번 안기부의 불법수사는 과거의 수사관행을 그대로 재연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개혁시대’에도 안기부의 위상이 과거와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을 드러내고 있다.

“연구원에 반국가단체 적용은 억지”

황주석·조국씨 등 모두진술에서 검찰 주장 반박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황주석(‘사과원’ 운영위원)·조국(울산대 교수)씨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재판장 김황식 부장판사, 담당검사 함커용, 변호사 박연철·천정배 등)이 10일 오후 2시 서울형사지법 311호 법정에서 가족, 민가협 회원 등 1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피고인들은 모두진술을 통하여 ‘사과원’ 활동의 기본자인 측은 우리나라 사회의 대안으로 사회주의를 연구한 것이었다고 주장하고, 이런 연구활동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진보적인 대안을 제출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이라고 주장하였

다. 또한 진술에서 ‘사과원’이라는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그 적용의 자의성을 보여주는 한 징표라고 역설하였다. (구속자 일등의 이 사건에 대한 입장 2면 참조).

황주석·조국씨를 비롯한 7명의 공판은 연구단체에 반국가단체로 적용할 수 있는가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되며, 민교협을 비롯한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 모으고 있다. 다음 공판은 24일 오전 10시 3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서울법원 당직상황실 597-1919

양심선언 전경 3년 구형 이종수 첫 공판에서

91년 10월 15일 연세대에서 ‘전투경찰대 해체’와 ‘전투경찰대 설치법폐지’ 등을 주장하는 양심선언을 하여 ‘군무기피’로 기소된 이종수 일경에 대한 첫 공판에서 징역 3년이 구형되었다.

이종수 일경은 이날 최후진술에서 “나는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군에 입대한 것이 전경으로 입대한 것이 아니다”며, “군입대자 중에서 강제로 전경으로 차출하는 전투경찰대 설치법이 올바른 국방의 의무수행을 막고 있는 것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이어 “백보를 양보하더라도 전투경찰의 임무는 대간첩작전을 수행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내가 전경으로 근무할 동안 시위집회와 민자당사 경비 등에 동원되었을 뿐이었다’며 전경생활을 하는 동안 갈등과 양심선언을 하게 된 동기를 내비쳤다. 그리고 “양심선언은 이런 전경의 임무를 벗어나는 역할을 거부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종수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은 9월 24일 10시 서울형사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다.

고 이경동씨 ‘민주국민장’

12일(일) 모교인 광주교대에 안치하였다가, 13일(월) 9시 30분 발인을 하여 도청 앞에서 노제를 지낸 후 망월동 묘역에 안장한다.

편집자 주 : 황주석씨 등의 모두진술을 게재하려 하였으나 내용이 많아 이 글로 대신한다.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 하는가

“남한사회주의과학원” 사건의 진실을 알립니다.

지난 군사독재 통치하에서 국가보안법이 어떠한 역할을 했던가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있습니다. 언론기본법, 학원안정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사회안전법 등 국가안보를 구실로 민주주의를 능멸하고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마저 억압하려 했던 각종 악법들 중에서도 국가보안법은 단연 중심된 지위를 차지하는 법이었으며,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든지 ‘적을 이롭게’ 한다는 등의 애매한-그러나 무시무시한 죄목으로 수많은 민주인사의 피눈물을 쏟게 했던 법이지 않았습니까.(중략)

사건의 발단은 지난 6월초 서울경찰청 산하 장안동 대공본실 수사대가 서울지검 공안1부(부장 조준호)의 지휘를 받아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이하 ‘과학원’) 회원이었다가 지금 학업 또는 생업에 종사중인 10여명을 불시에 불법연행한 뒤,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구속 수감한데서 비롯되었습니다.

소위 문민시대에 정상적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들을 영장도 없이 강제연행하고, 강압적 밀실수사를 한다는 것부터가 용납할 수 없는 일이지와 정작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이 사건을 사법처리하는 서울지검 공안1부의 몰지각하고 파렴치한 태도였습니다.

저희 ‘과학원’은 진보적 학술운동과 함께 성장해온 젊은 연구자들이 주축이 되어 뜻있는 연구활동을 해오고자 1년 가까운 준비기간을 거친 뒤 91년 7월 정식 결성한 단체입니다. 약 20여명인 ‘과학원’ 회원들은 대개가 대학원 석·박사 과정중에 있으면서, 각종 학술단체 회원으로도 열심히 활동하였습니다.

저희들이 ‘과학원’을 결성한 목적은 다른 진보적 학술연구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진단하고 건설적 대안을 제안하는 실천적 연구활동을 하는데 있습니다. ‘과학원’을 별도로 새로이 결성한 특별한 이유를 찾는다면, 이제는 사회주의 문제에 대해서도 소신있는 연구를 할 수 있는 연구단체가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다른 단체를 과소평가하거나 폐쇄적 태도를 가졌던 것은 아니며,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과학원’을 결성했던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저희들을 어떠한 정치집단, 정파와도 독립적인 단체임을 전지하였으며, 다른 연구단체들과는 가능한 연대하려는 태도를 전지하였으며 실제로 그런 시도를 하였습니다.

‘과학원’은 몇개의 연구분과 단위로 연구·집필·토론회 활동을 하며 그 성과를 이룬지 ‘우리사상’에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다가 92년 가을경 다수의 회원이 합법적인 연구활동으로 이전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탈퇴하는 가운데 자신해산하였습니다.

또한 ‘사노맹’ 조직원 백태웅씨가 ‘과학원’ 회원으로 참여했다고 하여, 마치 ‘과학원’이 ‘사노맹’의 ‘산하조직’이나 되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백태웅씨는 역시 다른 회원들과 마찬가지로 한 사람의 사회주의 이론가로서 참여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그나마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다가 나중에 그 신원이 밝혀지자 활동을 줄여나가다가 중단하였습니다. 그리고 ‘과학원’은 다른

정치조직에 독립적인 연구단체임을 설립 초기부터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기도 “사노맹, 산하” 운운은 모함에 지나지 않습니다.

한편, 저희들 ‘과학원’이 비공개적으로 활동한 이유는 오직 정보기관의 미행과 사찰로 인한 만약의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부득이한 자구조치였습니다. 이를 빌미로 무슨 지하음모단체나 되는 듯 매도하는 것은 정말로 적반하장적입니다.

사정이 이러한을 입이 닳도록 말하였건만, 서울지검 공안1부는 7월 중순경 ‘과학원’ 관련 피의자 전원을 ‘반국가단체’ 가입 등의 죄로 기소하고 말았습니다. 어처구니없게도, ‘과학원’이 ‘국가를 변란’하려 한 ‘반국가단체’라는 것입니다.

저희들로서는 ‘국가를 변란’하려 한다는 죄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범죄행위를 두고 말하는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이는 비단 저희들만이 아니라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허구의 죄목이고 보면, ‘국가를 변란’ 운운하는 것은 오직 그럴 듯한 구실일 뿐 실은 ‘과학원’의 활동 - 나아가 모든 사회주의에 대한 소신있는 학문 및 사상활동을 금압하겠다는 속마음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고 이처럼, 존엄한 인간의 기본적 권리-표현의 자유, 사상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를 탄압하려는 시도가 문민정부 하에서 또 다시 일어나고 있으니 이 어찌 통탄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이미 자신 해산까지 한 연구단체인 ‘과학원’을, 그것도 군사독재도 아닌 문민정부 하에서 ‘반국가단체’라고 기소하려드니 진정 이 나라 공안검찰은 시대를 거꾸로 살려려는 것입니까? 아니면 정년 ‘브레이크 없는 벤츠’처럼 합리적 이성을 영영 상실한 것입니까? 그리고 이러한 사태를 묵인 방조하고 있는 김영삼정부는 진정으로 민주개혁을 할 의사를 갖고 있는 것입니까?

저희들은 이런 식으로 문민정부 下 반국가단체 1호를 만들어 내려는 작태는 목과할 수 없는 수구적 책동이며, 있어서 안될 ‘학문 및 정치사상활동의 자유’에 대한 침해 행위라 믿기에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며, 지금이라도 이런 불순한 책동을 중지하기를 진심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살아 꿈틀거리는 군사독재의 망령이 있음을 그리고 불순한 수구적 책동을 꾸미고 있음을 널리 민주시민 여러분께 알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공안검찰은 ‘과학원’의 강령 규약이 ‘사회주의 혁명을 지향하고’ 있으며, ‘사노맹’ 조직원 백태웅씨가 ‘과학원’ 회원이었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마치 무슨 지하혁명단체라도 찾아낸 양 불은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에서 보듯이 ‘과학원’은 어느모로 보나 학술운동의 발전선상에 있는 진보적 학술단체임에 틀림없습니다. ‘과학원’의 구성원의 성격, 활동 동기와 내용, 조직체제와 운영방식 등, 어느 면에서 보더라도 이는 ‘과학’을 유일한 무기로 삼고, ‘진리’를 자신의 준거로 삼는 진보적 학술연구단체인 것입니다. 굳이 다른 단체와의 차이를 찾으려면, 사회주의도 포함하여 어떠한 연구주제에 대해서도 제한을 두지 않고 소신있는 연구를 하고자 하였던 것이겠습니까. 또한 저희들이 사회주의에 대해 남다른 신념이 있어서라기 보다는 ‘사상의 빈곤’으로 고통받는 이 시대 민중의 아픔에 공감하는 바 있었기에 이를 빌미로 ‘반국가적’ 운운하는 것은 타당치 못할 것입니다.

「남한사회주의 과학원」 관련 구속자 일동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원진 특별법’ 제정 강력요구

원진 노동자, 오늘 명동성당 2차 농성 돌입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의 원진직업병 환자, 관리자, 원진 노동조합원 등은 오늘(9월 14일, 수) 취업대책·직업병 치료대책 마련과 위의 내용을 제도화시킬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며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또한 9월 18일(토) 2시에 명동성당에서 “노동법 개정 및 원진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가져 원진 문제의 해결의 대안으로 특별법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같은 장소에서 5일동안 농성을 벌였던 원진 현직 노동자와 원진비대위 등은 “일년의 수확에 감사해야 할 추석이 보름남짓 밖에 안남았는데도 산업은행 측은 원진문제 해결에 다른 전향적인 대안은 거의 내놓지 않은채 거의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원진문제의 폐업을 주도한 것이 측이 민자당인 만큼 정부가 나서지 않고 산업은행만 내세워서 해결이 더디어 질뿐이고, 원진문제의 궁극적인 해법은 정치적인 문제”라며 “정기국회가 열리는 이때 정부의 입장변화가 없는 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농성단과 대책위는 15일(수) 오전 9시 30분 기자

회견을 통해 명동성당 재농성에 임하는 입장과 앞으로의 투쟁방침을 천명할 예정이다. 기자회견에 이어 청와대 로가서 원진문제의 심각성과 그 해결을 위해 김영삼

대통령을 면담할 예정이다.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15일(수)에 대통령과의 면담 요청서를 13일(월) 오후 1시에 청와대에 접수시켰다.

‘해고노동자 원직복직 특별법 필요’

11일, 전해투 대회에서

9월 11일 오후 3시 전국 해고노동자 및 단체, 학생 등 700여명이 모인 가운데 ‘5·6공 군사정권하에서 희생된 해고노동자의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위한 전국 해고노동자 대회」가 전국 구속·수배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위원장 조준호, 36세, 수배중. 기아자동차 해고노동자)의 주최로 서울역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대회에는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의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대책위원장, 전노협 양규현 수석부위원장, 문익환·백기완씨 등의 격려연설이 있었다.

이날 전해투의 조준호 위원장은 대회사를 통해 “김영삼 정권의 해고노동자 복직 방침이 말뿐인 허울임이 밝혀졌다”며, 앞으로

는 청원의 단계를 넘어 보다 본격적으로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을 다짐하였다.

대회에서는 정부의 해고노동자에 대한 정책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는 것과 함께 이의 해결방안으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전국 업종 노동조합 회의」, 권영길 의장, 「전국 노동조합 협의회」, 단병호

위원장 등이 “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특별법” 청원을 지난 9월 7일 국회에 접수시켰다.

특별법은 “국가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노동자에게 과거 군사정권은 제도적·물리적 탄압으로 수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며, “과거 군사정권이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의 명예를 회복시켜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특별법에서 그동안 정부의 해고노동자 복직방침이 아무런 강제력을 갖지 못함으로써 사실상 해고자의 미복직을 조장했다며, 이를 막기 위한 복직강제조항과 이를 어길시 처벌하는 조항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날 집회도중 ‘병역특례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례법 개정’ 등을 주장하는 대우정밀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씨 등 8명이 삭발·단식에 들어가 14일(화) 4일째 농성중이다.

이날 대회후에는 경찰과 몸싸움을 벌이면서 현재 농성중인 마포 민주당사가 지 행진하였다.

■단체등정■

유가협과 유가협 후원회 총회
유가협 제8차 정기총회 / 유가협 후원회 제4차 정기총회
장소 : 성균관대학교 학생회관 3층 4304호 / 유학대 1211호
시간 : 93년 9월 18일(토) 오후 1시 / 4시
민가협 <민주가족>회의 / 양심수 후원회 산형
9월 16일(목), 2시, 민가협 사무실
9월 19일(일), 도봉산

이 주일의 민생운동 동향

(9. 13 - 9. 19)

***전국 노동조합 대표자회의**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는 오는 14-15일 양일간 울산에서 전국 노조 대표자회의를 갖는다. 이번의 대표자회의는 지난 8월 말 속리산에서 진행된 수련회에서 결의된 노동법개정투쟁에 관하여 구체적인 일정과 11월 민중대의의 일시를 확정하게 된다. 전노대의 관계자에 따르면 노동법 개정에 관한 노동현장의 분위기가 예년과는 달리 상당한 수준으로 고양되어 있으며 투쟁의 구심체 역할을 할 전노대가 지난 6월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올해의 노동법 개정투쟁은 예년의 연례행사처럼 진행되던 관행에서 노동자대중의 힘이 실린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 한다.

***서울 지하철공사 노동조합**
서울시 지하철공사 노조는 지난 6. 7. 8일 파업돌입에 대한 조합원 투표를 갖고 9일 10:30에 오는 16일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간 널리 알려지지 않았지만 지하철공사 노동조합은 해고자의 원직복직, 임금 정액 5만원 인상, 노동조합 활동의 자유, 새로 건설되는 지하철 5-8호선의 운영권 단일화를 내걸고 공사와 9차에 걸쳐 단체교섭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하철공사는 교섭에 대하여 성실하게 임하지 않고 지난해 제 4대 강진도 집행부와 체결한 일방중재를 이유로 8월 말에 일방중재 신청을 하는 폭거를 자행했다.

지하철 공사 노동조합은 회사의 이러한 일방적인 행위에 대하여 묵과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오는 16일에 총파업을 결의하였다. 그러나 16일 파업은 일방중재가 신청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는 것이므로 불법적인 파업이 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공권력의 즉각적인 투입과 집단이기주의로 배도하는 여론 압박이 동시에 진행되리라 예상된다.

그러나 교섭이 결렬된 이유가 공사의 일방적인 중재요청에 있으므로 지하철의 정상적인 운행과 노사의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공사측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원진레이온**
원진레이온 폐업 비상대책위에서는 그간 산업은행과 교섭을 벌여왔으나 요구사항의 핵심인 평생 직업병진료권과 취업보장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 민주당이나 민자당등 정당과 정치단체 그리고 각종집회를 통해 원진레이온 문제를 알려왔다. 원진레이온 비대위는 그간의 성과를 총화하고 정부의 결단(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하여 명동성당에서 14일 부터 농성에 돌입하며 18일에는 서울시민들과 함께 집회를 갖는다.

원진레이온 관계자는 원진 비대위의 농성에 많은 격려와 지지방문을 요청하고 있다.

***전국 구속·수배·해고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전국해고자 복지투쟁위원회는 지난 9일 서울역광장에서 4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제 4차 전해투 결의대회를

가지고 민주당사까지 행진을 하였다. 전해투는 앞으로 죽음을 각오하는 투쟁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간 전해투의 투쟁으로 올해들어 해고자가 한명도 안생기는 성과도 있었으나, 해고자들은 아직 아무도 복직되고 있지 않다. 애초에 노동부가 약속한 해고자의 원직복직은 정부 출연기관에서 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고 있는데 돌연 노동부에서는 올해들어 1천여건이 넘는 해고자의 복지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0일에 발표하여 해고자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다.

***병원노련**
병원노련에서는 오는 21일 의료비리 척결과 의료민주화를 위한 공청회를 종로성당에서 갖는다. 지금까지 의료비는 울며 겨자먹기로 아무런 항의도 못한채 환자와 보호자들이 떠안아 왔다. 그러나 보도에 의해서도 밝혀진 각종의 랜딩비와 커미션등이 결국환자의 부담으로 떠안겨지는 사태가 지속되어 왔다.

이러한 문제를 노조가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그간 병원노련에서는 각종의 자료와 비리를 모아 의료비리 백서를 발간하고 의료민주화에 대한 각계의 참여속에 진행하기 위해 공청회를 갖도록 결정하였다.

***전빈협**
전국 노점상 연합회에서는 오는 16일 탑골공원에서 노점상 합법성 쟁취 결의대회를 갖는다. 그간 노점상들은 정부의 정책에 협조하여 거리정화와 같은 사업을 시행하여 왔으나 정부에서는 노점상에 대한 대책을 예전의 군사정권과 같은 관행으로 일관하여 오고 있다.

서울철거민협의회에 따르면 현재 서울에서 동대문지구를 비롯하여 각지에서 철거에 반대하는 투쟁이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 현재 철거반대투쟁과 관련하여 구속자도 나오고 있으며 어머니가 어린아이와 함께 구류당하는 사태가 경찰에 의해 자행되고 있다.

공판안내

- *9월 14일(화)
10, 엄삼탁, 특가법등, 413호 / 10, 이종구의 1인, 특가법, 311호, 선고 / 10, 신호승, 국가보안법, 318호
14, 박철언, 특가법(알선수재등), 417호, 5회
14, 이상욱, 국가보안법, 423호
- *9월 15일(수)
10, 김소희, 국가보안법, 311호, 선고 / 10:30, 안영모의 1인, 특가법, 318호, 4회 / 11, 마광수의 1인, 음란한문서제조등, 418호 / 14, 시노하라마사도, 국가보안법, 311호, 1회 / 14, 이진삼, 폭력행위등 처벌법, 311호, 선고 / 14, 정은수의 1인, 국가보안법, 318호, 1회
14, 노태훈, 국가보안법, 425호, 1회
- *9월 16일(목)
17, 정덕진, 특가법, 311호, 5회
- *9월 17일(금)
14, 이진개, 특가법, 311호, 5회
14, 배종렬의 12인, 특가법등, 417호, 4회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노태훈씨 즉각 석방 요구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등 187명

9월 14일 입국한 일본 '노태훈씨의 석방을 요구하는 친구의 모임' 한 관계자는 노태훈씨의 1심 재판 시작을 앞두고 그동안 모아왔던 일본 학자, 법조인, 문화인 등 187명의 노태훈씨 석방요구 서명용지를 공개했다. <노태훈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된 한국 정부당국에 보내는 문안(2면 전문)에 서명한 인사들은 저명한 국회의원인 덴(田英夫)씨등 9명의 의원을 비롯하여 법조계, 학계, 문학예술계, 종교계, 출판계등 다양한 영역에서 현재 활동중인 중견 및 원로 인사들이 망라되어 있다.

이들은 이 문안에서 노태훈씨 사건에 있어 공안당국이 형사절차상 중대한 위반을 저질렀음을 지적하는 한편 노태훈씨에 대한 혐의내용에 대해서도 큰 의혹을 제기하면서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고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치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장기수용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씨가 해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탄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분단시대를 통하여 사회에 투쟁된 불신과 대립을 해

소하여 신뢰와 화합을 조성하기 위하여 크게 기여하는 것"이라는 견해를 강력하게 피력했다. 89명의 변호사와 54명의 학자를 포함하는 이 187명의 서명자 중에는 다음과 같은 사람들이 눈길을 끈다. 이이누마(飯沼二郎, 경도 대학 명예교수), 시로야나(白柳誠一, 천주교 동경 대주교), 시마오(芝生瑞和, 일본 펜 육중작가위원회 부위원장), 이데스 헨슨(엠펙스터 인터내셔널 일본

지부장), 야스에(安江良介, 岩波서점 사장), 오가와(小川晴久, 동경대학 교수), 시바타(芝田進午-히로시마 대학 명예교수), 소오마(相馬信夫, 천주교 주교), 다바타(田畑忍, 동지사대학 명예교수). 한편 노태훈씨의 1심 첫 회 공판일정이 노태훈씨와 노태훈씨의 변호인(천정배 이오영·조용환 변호사)과 노태훈씨에게 뒤늦게 통고됨에 따라 변호인은 재판 연기 신청을 냈다.

'원진레이온 직업병은 군사독재의 유물' 원진 노동자, 정치권에서 해결요구

원진 현직 근로자, 원진 직업병 환자등의 '원진 상대책위원회'(위원장 황환도)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위원장 김금수, 홍성우등 6인) 등은 14일 오후 3시 명동성당에서 농성에 돌입했다. 원진대책위 관계자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오랫동안 장기수용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씨가 해온 활동을 높이 평가하면서 이러한 활동이 탄압되어야 할 것이 아니라 "분단시대를 통하여 사회에 투쟁된 불신과 대립을 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발상"이기에 더이상 미룰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문민정부는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던 과거 군사정권의 잔재인 원진 직업병을 이제는 '개혁' 차원에서 청산·해결해야 한다"며, "이제는 정부가 '고통'은 원진레이온 문제에 대한 해결의 전망이 보일때까지 무기한 농성할 것이라고 밝혔다. "생명이 걸린 원진 직업병 문제를 경제논리나 원진레이온의 주거래 은행인 산업은행에만 맡기는 것은

의 농성에 이어 2차 농성에 들어가는 이유를 밝혔다. 300여명이 참가한 14일의 농성에서 저녁 7시 30분에 명동성당에서 시내로 쫓겨나 행진을 시도하였으나 경찰이 가로막아서서 원진실상과 농성이유를 알리는 간단한 집회를 가졌다. 이날 농성장에는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국연합' 이창복 상임의장, 황인성 집행위원장 등 20여명이 지지방문을 하였다. 명동성당 농성단은 오늘부터 농성장 주위에 지금까지 원진 직업병으로 사망한 15명의 부부경력 등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고,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 등에 관한 비디오를 상영한다. 한편 원진직업병을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로 규정하고, '과거를 청산하고 생명을 보호하는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오늘 9시 30분에 명동성당 앞의 향린교회에서 기자회견을 갖는다. 기자회견에서는 원진직업병 문제가 이제 정치적인 해결 이외에는 아무런 해결방법이 없다는 것과 이를 위해 김영삼 대통령과의 면담계획, 향후의 투쟁에 대한 입장을 천명할 예정이다.

정대협 '수요시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의 각회원단체가 주관하는 일본의 중군위안부 문제의 진상규명과 보상 및 배상을 촉구하는 <정대협 수요시위>가 오늘은 「한국여성학자 협의회」 주관으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12시에 열린다.

일본의 정계·법조계·학계·문화예술계·종교계 등에서 노태훈씨의 석방을 요구하며 한국정부 당국에 낸 성명

「인권운동 사랑방」·「유엔 세계인권대회를 위한 민간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상근자

노태훈씨의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한국에서 인권옹호를 위하여 활동해온 노태훈씨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된데 대하여 우리는 강하게 항의함과 동시에 즉시 석방을 요구합니다.

우리에게 인간의 존엄을 가르쳐 주고 깊은 감명을 준 「한국양심수 서화전」의 일본 개최를 실현시키기 위하여 노태훈씨는 한국에서 분주하게 활동해왔습니다.

올해들어서는 「인권운동 사랑방」에서 활약하여 유엔세계인권대회에도 참가한 바 있습니다. 남북분단의 희생자이며 오랫동안 세상에서 외면당해온 장기수, 양심수들에게 조명을 비추고 그 사람들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력해온 노태훈씨의 활동은 개혁을 추진시키고 있는 κυβέρνηση에게 이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토피바퀴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잃음으로써 생기는 삐그덕거림을 우리는 우려합니다.

이번 노태훈씨의 체포에는 본래 질차적으로 증대한 위반이 있으며 혐의내용에도 큰 의혹이 있습니다. 체포현장에 있던 조용환·백승현 두 변호사에 의하면, 수사관은 정식체포명장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 뿐만 아니라 이집을 지지하고 제지하려 했던 두 변호사를 폭력적으로 배제하여 힘으로 노태훈씨를 연행하였습니다. 두 변호사는 그후 이사건을 서울지방검찰청에 고소·고발했고 이것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혐의로서 신문에 게재된 내용은 다음과 같은 점에 지나지 않습니다. 즉 「주체사상과 북한의 통일노선을 찬양하는 책자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 2, 3호를 입수담독했다」

그러나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의 내용은 장기복역출소자의 체험담 등으로 되어 있으며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것이 아님은 장기수 문제에 관심있는 사람들에게는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누구나가 손에 넣을 수 있으며 비밀리에 출판·배포될 만한 것은 아닙니다.

혐의를 뒷받침하는 물증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것은 「빼앗긴 세월을 되찾기 위하여」에 지나지 않으며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이런 것이 물증이 될 수 없음을 새삼스레 논할 필요조차 없는 것입니다. 노태훈씨를 접견한 변호사에 의하면 취조과정에서 같은 질문이 수없이 되풀이 되면서 오로지 혐의를 인정하도록 강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백」을 유일한 증거로 삼아 「간첩」을 만들어온 과거 정권의 수법이 지금까지도 답습되어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움을 금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체포될 때의 상황과 혐의 내용을 검토한 결과, 이번 노태훈씨에 대한 체포가 지극히 부당하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일련의 경과를 볼 때 이번 사건은 장기수 구원에 노력해온 노태훈씨의 활동 그 자체를 재판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인권옹호운동에 대한 탄압으로써 우리는 이것을 간파할 수 없습니다.

이미 말한 바와 같이 장기수의 인권옹호를 위하여 노태훈씨가 해온 활동은 「광주의 정신을 계승한다」라고 선언한 κυβέρνη리의 걸어가야 할 방향과 경로를 함께하면 됐지 결코 국가보안법 위반으로써 심판받아야 할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분단시대를 통하여 사회에 축적된 불신과 대립을 해소하고 신뢰와 화합을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는 것입니다. 노태훈씨에게 걸려있는 부당한 혐의를 벗기고 즉시 석방조치를 취할 것을 우리는 강하게 요구합니다.

서명인 일동

정치수배자 투쟁기금 마련 일일주점

정치수배자들의 친구·선후배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일일 주점이 열린다. 수배된 사람들이 속한 각학교의 선후배·친구들을 중심으로 6공 정치수배 해제 투쟁을 대중화시키고, 실질적으로 수배 해제를 싸움에 힘이 될 방안을 모색하다가 이번 일일주점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한

다. 일일주점은 9월 19일(일)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연세대 학생회관 1층에서 열린다. 한편 「전대협 동우회」(회장 이인영)가 주최하는 <6공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행사가 25일 한양대에서 열린다.

독자 여러분의 투고를 받습니다.

「인권하루소식」은 바로 여러분의 소식이 되고자합니다.

자기단체의 활동에 대한 소개, 주위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사례, 우리나라 인권신장을 위한 대책, 여러분이 살고 싶으신 글, 「인권하루소식」에 대한 평가의 글 등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면 언제든지 「인권운동 사랑방」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인권운동 사랑방」: 766-1163(전화) 745-9712(팩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원진 노동자, 청와대 면담 무산

명동성당 2차 농성 속보

명동성당에서 지난 달에 이어 2번째 농성중인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원진 비대위)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이하 원진 대책위) 등은 15일 오전 12시경에 청와대에 김영삼 대통령과 면담을 하기 위해 청와대로 향했으나, 경찰과 대치하다 다시 성당으로 돌아왔다. 농성단은 이에 앞서 오전 9시 30분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밝히는 등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원진 비대위와 대책위는 원진레이온 직업병 문제가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이라며 「문민정부」는 과거정권의 일환으로 원진문제에 대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대책위의 한 관계자는 「원진의 현·퇴직 노동자는 원진출신이라는 사실하나 만으로도 취업의 길이 막혀 생계가 막막한데다가 직업병에 노출되어 언제 발병할지 모르는 그야말로 천형아닌 천형의 삶을 살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이런 원진 노동자에게는 더이상 물러서고 싶어도 물러설 자리가 없다」라며 「과거의 유물인 원진 직업병 문제는 한시바삐 해결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한편 이날 농성단 300여

명은 오후 2시부터 4시간 동안 원진레이온의 주거래 은행인 법원에 원진레이온의 파산을 신청한 법적 주체인 산업은행 청사에서, 원진 현·퇴직 노동

자에 대한 보상 및 배상방안 마련, 잠재적 직업병 환자로 평가되는 원진출신 노동자들에 대한 재취업 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민정련 용인지부장 경찰에 연행 -소재파악 안됨

「민중정치연합」 용인지부장인 양춘모(34세, 민정련 강원·경기협의회 의장)씨가 14일(화) 오후 경찰에 연행되어 15일 저녁 6시 현재까지 소재지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민중정치연합」에 따르면 14일 저녁에 소재지가 확인되었다가 15일 오전부터 다시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14일 저녁 11시에 양춘모씨가 김중식(민정련 전 용인지부장) 집으로 전화통화를 걸어와 자신이 원주경찰서 우산동 파출소에 있다고 연락을 해왔다고 한다. 민정련에서는 이에 따라 15일 오전에 관계기관에 전화로 확인할 때에는 연행사실을 시인하다가 나중에 다시 번복하는 등 양씨의 소재지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연행된 양춘모 민정련 용인지부장은 강원·경기협의회 의장 자격으로 민정련 원주지부를 상황파악 및 지원을 위해 13일부터 원주에 있었다.

전해투 투쟁기금 마련 시 민한미당-26일 서울대에서

전해투 지원대책위에서 주최하는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들의 투쟁기금 마련을 위한 「노동자·학생·시민 한미당」이 9월 26일 서울대 노천극장에서 오전 10시부터 열린다.

이에 앞서 전해투 지원대책방안 마련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9월 18일(토) 오전 8시에 마포 민주당 회의실에서 93년 하반기 지원대책위 활동을 논의한다.

· 상설기구 준비위원회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참가요청

--단체 및 개인에게 문호개방--

지난 9월 7일 「윤금이 공대위」를 해소하고 「주한미군범죄 근절을 위한 상설기구」 건설을 추진중인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각 민주당계의 상설기구에의 참가를 바라고 있다. 또한 개인자격으로도 참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준비위원회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설기구의 사업으로는 1)미군범죄 신고센터 개설, 미군범죄자의 엄중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정당한 배상 2)미군범죄 피해자에 대한 집단적인 손해배상청구 3)불명등한 한미행정협정 개정 운동 4)미군주둔으로 파생되는 피해들에 대한 조사, 연구 및 시정을 위한 활동 5)에이즈, 환경오염, 교육문제, 저질문화 등 미군기지로부터 파생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미군기지 실태조사 등이다.

연락처--전화 : 708-4181 / 팩스 : 708-4186

* 민가협 장기수가족협의회 월례회의

·일시 : 93년 9월 19일 오후 2시

·장소 : 경희대학교 정문앞

* 박선영 열사 추모제 및 추모식수

·일시 : 93년 9월 16일 오후 1시

·장소 : 서울고대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가 9월 10일자로 제출한 청원서 <5·6공화국하에서 노동조합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의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1. 도입방향

1) 헌법 제34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인 한국에서 노동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는 노동자 개개인이 땀흘려 노동함으로써 의·식·주·교육·의료등 인간다운 생활을 가능케하는 제반 물질적 조건을 확보할 때만이 실현 가능하다. 따라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생존권)"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헌법 제32조 1항은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하여 "일할 권리(근로권)"를 보장하고 있다.

2) 그런데 5·6공 군사정권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6공이후 해고자만도 5200여명이라고 노동부가 공식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수많은 해고노동자들이 헌법으로 보장된 "일할 권리(근로권)"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근로권)"를 박탈당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 정권의제도적·폭력적 탄압과 기업주의 배타적 이윤추적의 희생물로 해고가 발생하였고, 이러한 해고는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활기반이 송두리째 뒤흔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또한 이렇게 해고된 노동자들은 기업주들간에 공공연히 블랙리스트를 공유하여 재취업의 기회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음에 문제의 심각성은 더하다.

3) 따라서 국가사회발전에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던 노동자에게 과거 군사정권은 사업주 일방을 옹호두둔하고 국가사회의 민주적 발전에 심각한 장애를 초래하여 왔다. 그러므로 이러한 장애를 제거하고 사회발전과 새로운 민주질서의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5·6공 군사독재 정권하에서 노동자의 권익향상을 위한 모든 행동(예를들면 노동조합 결성, 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선, 민주노조 건설, 노동악법 철폐, 근로조건 개선, 비인간적 대우철폐, 부당노동행위 시정등등)을 하되 부당하게 해고당한 모든 해고노동자는 선결적으로 원상회복되어야 한다.

(1) 해고 노동자에 대한 원상회복을 시행할 기구가 구성되어야 하며 그 기구는 강제 집행력을 가져야 한다.

(2) 사법기관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 노동자는 즉시 복직되어야 하고 이를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처벌받아야 한다.

(3) 5·6공하의 노동자 권익향상을 위해 해고된 노동자중 복직신청자 전원에게 대해 원직복직 시켜야 한다. 또한 물질적 보상과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4) 복직을 단지 사업주에게 권고사항으로서가 아니라 강제사항으로 하여 이행치 않는 사업주는 처벌토록 하여야 한다.

2. 주요내용

1) 취지: 국가사회 발전을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오고 있는 노동자에게 과거 역대 군사정권은 제도적·물리적 탄압과 고통을 강요하였고, 사업주 일

방을 옹호두둔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나머지 많은 해고자를 발생시켰다. 그래서 5·6공 군사독재정권의 일방적 탄압으로 해고된 노동자들에게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해고의 고통에서 헤어나게하고 명예회복 시키는 것이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불신을 해소하고 국가사회 발전을 위한 필수적 전제이므로, 적어도 5·6공 군사정권하에서 억울하게 해고된 노동자들의 원상회복을 위한 제반조치를 제도적으로 취하기 위함이다.

2) 대상: 5·6공하 노동조합 설립과정을 비롯하여 임금인상, 단체협약 개선, 민주노조 건설, 근로조건 개선, 비인간적 대우철폐, 부당노동행위 시정, 노동악법 철폐를 비롯한 조합원 권익향상을 위한 행동을 하다 해고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3) 이러한 대상자들에 대한 접수를 받고, 심의하고 제반 복직업무 처리를 위한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 위원회>를 한시적으로 10인의 위원(여야동수 국회의원 4인, 노동부 2인, 노조대표 2인, 해고자대표 2인)으로 구성한다.

4) 위 2항의대상자중 본인이 원하는 대상자들은 모두 원직복직시키며 고용계약관계가 해고된 회사의 최초입사일로부터 지속승계된 것으로 한다. 또한 지속승계되었다면 받을 모든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다.

5) 물질적 보상과 명예회복: 위 2항의 대상자들은 해고되어 있는 동안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으므로, 밀린 임금상승분을 포함한 평균임금으로 복직과 아울러 이를 지급한다.

6) 위 2항의 대상자가 소속되었던 회사가 소멸되었다면 비슷한 업종과 규모의 회사로, 계열사가 있는 회사는 계열사에, 계열회사가 없는 경우는 타회사에, 소속되었던 부서만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당 회사의 타부서에 해고되기 이전과 같은 직능을 수행할 부서로 복직시키는 것을 우선으로 한다.

7) (재해고 금지) 이렇게 해서 복직된 사람을 사업주가 과거의 일을 들추어 재차 해고시키는 경우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업주를 즉각 자유형으로 처벌하고 해당해고자를 즉시 원상회복 시킨다.

8)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는 대상자들에게서 접수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사하여 해당기업주에게 복직권고 명령을 내리고,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로부터 복직권고명령을 받은 기업주는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9)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가 복직 대상자를 위해 열거한 내용으로 복직시킬 것을 각 사업주에게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제반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사업주를 자유형으로 처벌한다.

10)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는 이미 사법기관에서 복직판결을 받은 해고 노동자들을 파악하여 해당사업주에게 복직권고 명령을 통보하고 통보받은 사업주가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복직조치를 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신체형으로 처벌한다.

11) <해고자 원상회복 처리위원회>는 대상자 전원에게 대한 처리 임무가 끝나는 즉시 자동해체 된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폭행 당한 장애인, '공무집행방해' 혐의

'가평군 장애인 폭행사건', 수사의 공정성의 의문

지난 달 10일 경기도 가평군청 직원과 경찰이 장애인을 폭행, 8월 23일 뒤늦게 텔레비전에 보도됨으로써 이해적으로 김영삼 대령의 '철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엄중문책' 지시 까지 떨어졌으나 폭행당한 장애인 이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됨으로써 수사의 본말이 전도된 듯한 인상을 주고있다.

지난달 10일 가평군청 직원과 경찰의 '대한성인장애인 자립복지협의회, 회원 20여명에 대한 무자비한 폭행으로 이 단체 정책위원장인 김충겸씨를 지난 9월 9일 기소하였다.

김충겸씨에 대한 혐의사실은 폭행에 동원된 장애인 전인차의 유리창을 부렸다는 것, 가평군청 직원 7명을 폭행해 부상을 입혔다는 것, 장애인이 가평유원지에 야시장을 여는 것을 막으려 은 공무원들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등이다.

한편 가평군청 직원 7명은 '가평군 장애인 폭행' 당시 김충겸씨한테 맞았다는 진술을 한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대해 '대한성인장애인 자립복지협의회'의 한 관계자는 가평유원지에 야시장을 여는데 대해 허가를 받지 못해 포기하고 내려오던 길에 경찰과 가평군청 직원을 만났던 것이

라며, 이러한데도 장애인에게 경찰이 달려들어 목발까지 빼앗은 상태에서 무자비하게 두드리 맞을 때 어쩔수 없이 저항한 것 이외에는 폭력이라는 것은 전혀없다라고 주장하였다. 성장협의 한 관계자는 이어 김충겸씨가 공공기물을 파손했다는 혐의에 대해 이미 다른 사람이 자신이 깨트린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데도 김씨에게

혐의를 두는 것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이어 야시장을 철거한다는 이유로 장애인 한명에 4-5명씩 달려들어 무자비하게 구타한 것을 정당한 공무집행이라고 말한다면 금지한 일이라며, 당시 가평군청 직원과 전부경찰이 행한 폭력은 폭력 그 자체일 뿐 공무집행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인륜적 행위 이제는 그만

해고 노동자 부모, 아들 복직 안되자 자살

배일도(44세, 서울지하철 공사 노동조합 초대위원장)씨가 이번 단체협상에 서도 복직이 되지 않자, 이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배일도씨의 아버지 배상봉(74세)씨가 14일 오후 5시 경에 농약을 마시고 치료 중 15일 정오경에 사망하였다.

이에 대해 배일도씨가 기획실장으로 있는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는 16일 성명을 통해 배일도씨의 아버지 자살 사건은 해고 노동자 뿐 아니라 해고 노동자들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웅변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김영삼 정부의 해고노동자 복직 권

이 때, 기업주가 정부의 해고자 복직권고를 받아들였느냐며, 결국 '정부의 해고노동자 복직 권고'는 해고자와 그 가족에게 헛된 기대만 잔뜩부풀려 이번과 같은 더욱 쓰라린 상처만 안겨주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지난 14일의 지하철 노조와 공사간의 단체협상 결과로는 10명의 지하철공사 해고자 중 6명이 복직되고 배일도씨를 비롯하여 정운광, 조상호, 홍순용씨등 4명이 복직되지 않았다.

명동성당 농성 원진레이온 속보

명동성당에서 2차농성 4일째를 맞고있는 원진레이온 노동자와 원진대책위원회는 15일 원진실상바로알리기 거리홍보를 시내중심가에서 가졌다.

문민시대에 걸맞은 원진직업병 대책을 세울 것과 원진노동자들의 재취업 보장의 결박성을 호소하는 내용의 홍보는 오후 2시부터 6시 30분까지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거리홍보는 명동일대, 남대문시장, 퇴계로 등에서 '몸뚱이' 등을 사용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농성장에는 서노협 중동부지역 노조위원장 7명을 비롯 한국여성노동자회 등에서 20여명이 지지방문을 하였다.

판대증
<유서사건 총자료집> / 전 3권 총 3000쪽
강기훈씨 사건의 모든 기록!
사법사상 초유의 쾌거!
값 10만원 / 구입문의 : 766-1163

<15일 사망한 배일도 지하철노조 초대위원장 부모 배상봉씨의 자살에 대한 전해투의 성명서>

“빛좋은 개살구” 김영삼 정부의 허위발표는 결국 해고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불러오야 말았습니다! 지하철공사 해고 노동자 배일도(지하철 노조 초대 위원장) 동지 아버님의 비관자살을 부른 김영삼 정부의 해고 노동자 복직발표의 허구성을 규탄한다.

김영삼 정부의 해고 노동자 복직에 대한 허구적 발표는 결국 한 해고 노동자 가족의 죽음을 불러오야 말았습니다. 배일도 동지의 아버님은 9월 14일 지하철 노조의 입단교섭이 타결되었다는 소식과 해고자 복직 뉴스를 듣고 아들의 복직소식을 확인하기 위해 배일도 동지에게 직접 전화를 하였다. 그러나 아들로부터 들은 소식은 “이번에는 복직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내년을 기대해 봐야죠”라는 배일도 동지의 힘없는 전화였다. 이 전화를 받고 충격을 이기지 못한 배일도 동지의 아버님께서 제조제용 농약을 드시고 운명을 달리하시고 말았다.

이 사건은 해고 노동자들의 고통은 둘째치고서라도 우선 해고노동자들의 가족의 고통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알려주고 있는 것이다.

배일도 동지는 고향인 김제군 만경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농부의 장남으로 태어나 불우한 생활속에서도 거의 독학으로 학교를 다녔으며 해고자의 삶을 살면서 제때에 집세조차 못내면서도 매달 아버님께 생활비를 꼬박 꼬박 부쳐드릴 정도로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었다.

누구보다도 촉망받고 성실했던 아들이 조합원을 위해 앞장섰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본과 정권의 탄압에 의해 해고당하고 그것 때문에 인간으로서의 기본권리가 박탈당하는 것을 지켜보는 그 심정은 어찌했겠는가? 아들은 분명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며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일해 왔었는데, 다른 해고 노동자들은 복직이 되는데도 당신의 아들만이 유독 제외되었다는 소식은 나이 드신 아버님의 가슴에 분노와 슬픔의 못을 박고 말았던 것이다.

이 사건에 대해서 현정부는 책임을 져야한다. 3/10과 4/7 단식이후 현정부는 해고 노동자들을 복직시키겠다고 거듭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현정부의 노력으로 복직이 된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는가? 일부 대기업에서의 조합원대중의 투쟁에 의한 복직 말고 정부의 노력에 의해 복직이 된 경우는 없을 뿐더러 현정부는 스스로가 복직권을 쥐고 있는 지하철공사와 같은 정부출연기관의 해고자조차 복직시키지도 않으면서 “정부는 해고자 복직을 위해 각 기업에 적극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노동자 복직은 기업의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강제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보자! 정부 스스로가 복직시킬 수 있는 정부출연기관 해고 노동자조차 복직시키지 않는 데, 과연 어느 기업이 정부 복직권고를 제대로 된 복직권고로서 받아들일 것인가? 이러한 정부의 기만적 발표는 해고 노동자의 가족에게 헛된 기대만 잔뜩 부풀리게 하였다가 결국은 더욱 쓰라린 상처만 주어 아예 발표를 하지 않은 것보다 훨씬 심한 고통을 안겨준 것이고 이번 사건은 현정권의 기만이 가져온 해고 노동자 가족의 희생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정부는 이제라도 대오각성하여 지난 3월 10일 정부가 밝힌 약속을 지금이라도 실현시켜 더이상 해고 노동자들의 가족들이 죽음보다도 못한 고통에 시달리는 것을 이 정도에서 마감하여야 할 것이다. 더이상 해고 노동자들을 두 번 세 번 해고시키는 반인륜적 행위에 대한 즉각적인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바이다.

1993. 9. 16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김삼석씨 남매 사건 설명회 연락모임 가지기로

지난 8일 안기부에 강제연행되어 현재까지 안기부에서 조사받고 있는 김삼석·김은주씨 남매 사건에 대한 설명회가 16일 아침 7시 30분 백주년 기념관에서 있었다.

「교회여성연합회」등 8개 여성운동 단체와 한교협 인권위 등 14개 단체 실무책임자들이 참석한 이날 모임에서는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에 의한 그동안의 경과보고 및 김삼석·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연행, 압수수색, 그리고 조사과정에서의 안기부가 저지른 불법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앞으로의 대책을 논의하였으며, 이 사건에 대처할 연락모임을 가지기로 하였다.

민정권 지부장 양준모씨 16일 오후 석방

지난 14일 오후 경찰에 연행되어 행방이 알려지지 않았던 「민중정치연합」(대표 오세철, 전화 : 849-5887) 용인지부장 양

준모(34세)씨가 16일 오후 4시경에 석방되었다. 강원도경 보안과 수사대원에게 연행된 것으로 밝혀진 양씨의 소재는 3일동안 가족

을 비롯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았다. 양씨는 사노맹 관련으로 조사를 받은 끝에 ‘입건보류’로 석방되었다고 한다.

*국가보안법상의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태훈씨의 공판이 연기되었다.

일시 : 93년 10월 6일(목) 10시 30분
장소 : 서울형사지방법원 425호 법정

*윤금이씨 살해혐의로 1심 재판을 끝낸 마를일씨에 대한 항소심

일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4시
장소 : 서울 고등법원 대법정

(주한미군범죄 상설기구 준비위원회는 23일 3시에 법정앞에서 재판에 앞서 간이집회를 할 예정이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국보법의 간첩개념 너무 광범하다’

엠네스티, 영장없는 체포·잠안재우기에 우려

안기부, 김삼석씨 부인의 남편구원활동 위협

국제 엠네스티는 9월 17일 김삼석·김은주씨 남매에 대한 긴급구원활동을 펼치기로 하였다. 엠네스티는 긴급구원활동(URGENT ACTION) 문서를 통해 김씨 남매가 안기부에 영장없이 불법으로 체포되었다는 사실과 수사과정에서 김씨 남매에게 외부와의 연락을 두절시켰다는 점, 그리고 잠안재우기 등의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실에 대해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그리고 김덕 안기부장에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엠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개념의 광범위함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날 개관식은 비가 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개관식후에는 ‘여성 평화의 집, 현판식이 있었다. 『여성 평화의 집』은 대표적인 한국여성운동 단체들이 3년동안의 준비끝에 지

을 발간한 배후조직이 있는지 여부 등이었다고 한다. 안기부는 참고인 조사과정에서 윤미향씨가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세계인권대

회 기간에 정신대문제로 북한대표단을 만난 것을 가지고 구속운운하며, 밖에서 남편의 구원활동을 벌이지 말라고 위협하기도 하였다

여성운동의 장충동 시대 개막

17일, 여성 평화의 집 개관식

여성운동 단체들이 입주한 장충동 『여성 평화의 집』 개관식이 17일 오후 4시 「민주주의 민족통일 전향의향회, 김씨 남매에게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서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요구하도록 촉구하였다.

엠네스티는 이어 김씨 남매가 간첩혐의를 받고 있다며 한국에서 국가보안법상의 간첩개념의 광범위함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이날 개관식은 비가 온 강당에서 진행되었다. 개관식후에는 ‘여성 평화의 집, 현판식이 있었다. 『여성 평화의 집』은 대표적인 한국여성운동 단체들이 3년동안의 준비끝에 지

윤미향(김삼석씨 부인)씨 참고인 조사

9월 8일 영장없이 연행되었다가, 10일 구속된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씨에 대한 안기부의 참고인 조사가 17일에 있었다. 참고인 조사에서 지난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유엔세계인권대회에서 북한 대표단과의 접촉여부, 김삼석씨가 쓴 『청년과 군대』라는 책

(269-5763/6), 한국 여성의 전화(269-2962/4), 한국 여신학자협의회(275-7754), 기독교민회,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275-8506)와 그 밖의 여성운동 단체로 아시아 여성신학교육원, 기독교여성평화연구원, 여성사회교육원, 여성교회 등이 있다.

대구·경북 총학생회 연합회장 권혁명씨 붙잡혀 ‘한총련 전화회담’ 관련

대구·경북지역 총학생회연합 의장인 권혁명(22세, 계명대 총학생회장)씨가 9월 15일 오전 11시 15분경 대구 고속터미널에서 서울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 요원들에게 연행되었다.

권혁명씨는 93년 5월 한총련 출범식에서 북한 조선학생위원회와 전화회담을 한 이유로 수배중이었다.

일간인권 9월호 발행

한교협 인권위
한교협 인권위는 9월 『월간인권』을 발행하였다. 주요내용은 원진 직업병, 팔레스타인의 인권 상황, 조국교수 구속에 항의하는 서울법대 학생회 성명, 노태훈씨의 구속사건, 엠네스티가 보는 한국인권상황 등이다.

정보를 보내주십시오

인권운동사랑방에서는 국내외 인권상황을 모아서 각 단체 및 인권 현실에 관심 있는 개인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인권하루소식』을 발간하고 있습니다.

계획하고 계신 사업, 구속자들의 상황, 재판소식 등 인권에 관련된 정보를 인권운동사랑방에 전화나 팩스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인권운동사랑방 전화 : 766-1163 / 팩스 : 745-9712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김은주씨 남매의 '간첩' 사건에 대해 벌이는 긴급구원활동 공문(편집자 주)>

가혹행위/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국 김삼석(28세), 김은주(24세) / 93년 9월 17일

김삼석·김은주씨 남매가 9월 8일 국가안전기획부에 영장없이 체포되어 이틀동안 외부와 연락이 끊긴채 있었다. 가족에 의하면 체포이후 잠깐 동안의 접견이 허용되었을 뿐이고 그들은 구타를 당했고 잠을 자지못했다고 한다. 국제 앰네스티 그들이 더욱더 가혹행위를 받을 가능성과 '자백'을 강요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김삼석·김은주씨는 9월 8일 오후에 연행되었다. 그러나 가족과 인권단체는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을 청구한 9월 10일 오후까지는 그들이 어디에 붙잡혀 있는지 알수가 없었다. 이런 사실은 그들이 연행된지 만 이들이 지난뒤에 서울형사지방법원에서 확인되었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은 조사받는 동안 수면을 박탈당했고 김삼석씨는 구타당했다고 한다. 가족들에 의하면 그들이 몽롱한 상태로 접견장에 나왔다고 한다.

두 사람의 수인은 일본에서 1974년 '스파이' 사건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는 재일교포를 일본에서 접촉한 혐의로 국가보안법으로 구금되어 있다. 그들은 북한을 위해 간첩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제 사면위원회는 국가보안법상의 간첩개념이 허가를 받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적인 그룹과의 모든 접촉 등을 포함하는 매우 광범위한 것임을 우려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이들이 양심수로서 장기간의 형을 살지 않을까, 국가안보라는 미명아래 불공정한 재판을 받지 않을까 우려한다.

배경

김삼석씨는 반핵과 군축분야에서 평화와 인권의 옹호자이고, 김은주씨는 가톨릭 청년 활동가다. 1992년에 김삼석씨는 반핵평화운동연합에서 실무진으로 일했다. 1993년에는 '태평양 전쟁 유가족회' 사무국장으로 일했고, 이 자격으로 1993년 6월 비엔나에서 열린 <세계인권대회>에 참가했다. 국제 앰네스티는 그의 체포가 인권활동가로서의 활동과 관련이 있지않나 우려한다.

다음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십시오.

- 전보·전화·팩스·팩스를 이용해서 영어로 혹은 모국어로 편지를 써서 항공편으로 보내주세요.
- 김삼석·김은주씨가 수면을 박탈당하고 구타를 당한 사실에 우려를 표시하고 관계당국에 그들이 더이상 부당한 대우를 받지않도록 촉구할 것.
- 그들이 영장없이 체포된 것과 이틀동안 외부와 연락이 두절된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시할 것
- 김삼석·김은주씨는 양심수일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하고, 국제적 기준에 비추어 그들의 완전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거나 각 그들을 석방할 것을 촉구할 것

다음에 호소하여 주십시오.

김영삼 대통령, 김두희 법무부 장관, 김덕 국가안전기획부장

항의문 사본을 다음에 보내시오.

한겨레신문, 조선일보, 인권단체(민가협)와 당신 나라에 있는 한국정부 대표기관

<국제 앰네스티 긴급구원활동 공문을 18일 새벽에 수신하고 긴급 재편집한 것임>

『노동법 개정 및 원진특별법 제정촉구 결의대회』

주최 : 원진레이온 비상대책위원회
후원 :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

장소 : 명동성당 앞
일시 : 93년 9월 18일 오후 2시
집회후 행진로: 명동성당-미도파 백화점-을지로 입구-종각-종묘공원

*원진노동자들은 명동성당에서 무기한 밤샘 농성중입니다. 농성단은 농성장에 격려방문을 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유서대필 사건'의 판결을 당신에게 맡깁니다.

유서사건 총자료집

전3권 2700쪽

제1권 : 수사자료(약800쪽)

제2권 : 재판기록(약900쪽)

제3권 : 참고자료(약1000쪽)

구입문의 : 766-1163 / 3책 1질 10만원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문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의문사·고문등 과거청산 주력'

유가협, 18일 8차 정기총회, 회장단 개편, 명칭도 바뀜

유가협은 18일 오후 성균관대에서 제8차 총회를 갖고 단체의 명칭을 바꾸고, 회장단을 새로 선출하였다. 그러나 약칭 회장단을 새로 선출하였으나 '유가협'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유가협 후원회도 같은 날 열린 제4차총회에서 신임 회장단을 선출했다. 유가협은 단체의 명칭을 '전국 민주주의 민족통일 유가족협의회'로 개칭하

고, 신임 회장에 강민조씨, 수석부회장에 김재훈씨를 선출하였다. 그러나 약칭 회장단은 새로 선출하였으나 '유가협'을 계속 사용하기로 했다. 유가협 후원회도 총회를 통해 신임회장으로 이돈명 변호사를, 부회장에 진관스님과 김거성 목사를 선출했다.

유가협은 8차 회기년도 사업으로 의문사 진상규명, 고문·폭력 진상규명 투쟁 등을 과거청산 차원에서 벌이고, 인권단체로서의 성격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또한 앞으로 통일 투쟁에 더욱 힘을 실기기로 결의하였다.

고도소 곳곳에서
옥중투쟁
공주, 홍성, 춘천고도소등

민가협에 의하면 윤석양(양심선언 군인)씨가 공주 고도소에 이감된 후 강제 삭발을 당해 이에 항의하는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으며, 홍성고도소에 수감 중인 류창호(마창지역 노동자)씨는 소내처우 문제에 항의하다가 징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춘천고도소에서는 현주역·전문환씨등이 4일째 단식농성중이다.

'창살없는 감옥생활'

6공정치수배 해제 촉구

20일, 불교인권위, 8일 한교협 인권위

불교인권위원회(공동대표 송월주, 한상범)와 동국대학교 석림동문회(대표 혜총 스님)는 9월 20일 김영삼 대통령에게 6공 정치수배자의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보냈다. 청원서에서 독재시대의 상처를 씻고 지역, 계층 간의 갈등을 뛰어넘어 소외된 인권을 회복하고 국민적 화합으로 새출발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고 전제하고, "과거의 비정상적인 정치상황에서 발생한 정치수배자들이 길게는 5년이상 공민권을 빼앗긴채 사회적 고립과 창살없는 감옥생활을 강요당하고 있는 정치수배자들의 수배해제를 촉구하였다.

일 청와대에 보내는 청원서 통해 6공 정치수배자들이 수배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한편 9월 19일 6공 정치수배자의 친구·동료들이 주최한 일일주점이 오전 10시부터 저녁 12시까지 1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현재 명동성당에서 농성 중인 원진 노동자와 원진 직업병 환자들은 18일 종묘공원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화형식을 가졌다. <노동법 개정 및 원진특별법 제정 촉구대회>를 마친 후에 을지로 입구, 종각 등지를 행진하다가 종묘공원에서 원진레이온 직업병 화형식을 가진후 해산했다.

이날 오후 2시 명동성당 앞에서 열린 결의대회는 서노협, 노운협 등을 포함한 30여개 단체, 1500여명이 참가하였다. 결의대회는 백기완씨의 격려사와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원회' 조준호(36세, 기아자동차 해고 노동자) 위원장의 연대사가 있었다.

방북(시도)인사, 국보법 공판
함석영, 박동수씨등
20일 북한을 방문한 황석영씨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이 신청한 조성우(평화연구소 소장), 나병식(풀빛출판사 대표), 이덕화(텔런트)에 대한 증인신청을

하고, 다음공판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다. 지난 4월 독일을 거쳐 북한을 방문하려다가 무산되어 귀국, 6월 안기부에 연행된 박동수(29세, 서노협 전 북부조직국장), 정인근(30세)씨에 대한 결심공

판에서 각각 징역5년, 3년을 선고받았다. 박동수씨는 최후진술에서 "나 자신이라도 노동운동 내의 통일물꼬를 트기 위하여 방북을 추진하려고 했다"며 추진동기를 밝혔다. 다음 선고공판은 10월 6일 오전 10시 317호.

박동수씨의 최후진술중 방북추진 동기

(생략)먼저 방북취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생각했던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올해 노동절에 북한을 공개리에 방문하여, 노동절 행사에 참가하고 공장 사업소들을 순회 방문하여 북쪽 노동자들과 상호오해와 불신을 해소하여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통일문제를 협의한 후 광복절에 판문점 혹은 제3국을 경유하여 귀국하려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바랬던 것은 통일에 가장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노동자들의 첫교류를 실천함으로써 앞으로 노동자의 다양한 자주교류 실천계기를 마련하여 통일운동의 발전을 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방북취지를 정세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민족의 통일의지가 더이상 외세에 유린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남북당국자들은 우리 민족의 통일염원을 모아 91. 12월 남·북화해 불가침, 남북교류 협력의 내용을 담은 남북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채택함으로써 통일은 이제 실천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아직도 않은 북한의 핵문제를 들고나와 TS훈련을 하면서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한 당국은 자주적으로 북과 대화하지 않고 소위 "국제공조체계" 운운하며 외세의존 정책을 취하면서 남북합의서 실천을 지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은 남북이 화해하고 통일로 가길 기대했지만, 정세는 다시 외세의 간섭으로 대립하게 되었으며, 우리 민족의 통일의지는 다시 한 번 짓밟혔습니다. 언제까지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받아가며 민족의 수치를 참아야 합니까? 저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이겨내고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외세와 싸워야 하며, 그 힘은 민족대단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전체가 자기의 계급계층의 이익보다 민족의 이익앞에 무조건 단결하는 그 힘만이 통일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라고 여겼습니다.(생략)

이제는 노동자들이 생존권과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서, 그리고 타계종과 연대하여 민주주의 참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서도, 노동자들이 앞장서서 조국통일 투쟁을 이끌어 통일을 실현시키는 길 밖에 없습니다. 남북 노동자들은 진정으로 통일을 바랍니다. 그들은 체제경쟁과 갈등. 대립으로 그들이 생산한 민족의 재산이 낭비되지 않고 민족구성원의 복지와 민족사회 발전에 사용되길 바랍니다.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만나 서로의 오해와 불신을 씻고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실현방도에 대하여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야 합니다. 저는 청년학생들이 임수경양의 방북을 성사시키고 자주교류투쟁을 힘차게 진행하여 통일운동을 대중화시키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우리 노동자들도 그러한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졌습니다. 저는 전국단위 노동운동 조직들이 청년학생처럼 남북 노동자의 자주교류투쟁

을 전개하여 노동자 통일운동을 발전시키길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실천유지임은 없고, 민족 내부정세는 냉전체제 등 통일실현에 유리한 외부환경에도 불구하고 긴장과 대립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이라도 노동운동내의 통일물꼬를 트기 위하여 노동자의 가장 경사스러운 날인 노동절에 노동자 방북을 추진하기로 결심했습니다.(생략)

저는 이같은 결심을 하고 두가지 문제에 대하여 고민했습니다. 첫째는 제가 방북할 자격이 있는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저는 임수경양처럼 조직의 대표도 아니고 문익환 목사님이나 황석영씨처럼 이름있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민족의 한 사람으로 통일을 위한 길에 나서는 일이 당연하다고 여겼고 또 통일만이 노동자가 살 길이라고 믿으며 노동운동을 해 온 한사람으로서 통일을 위해 실천하는 것이 책임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둘째는 정세와 통일운동 발전문제를 놓고 고민했습니다. 문민정부 수립이후 현정부의 개혁에 대하여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는 상황에서 저희들의 방북이 국민들과 유리되고 운동권을 탄압하는 명분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걱정했습니다. 그러나 개혁과 통일을 지향하는 현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처럼 민간통일운동을 탄압하기가 쉽지않고, 현 정부의 통일의지를 시험하는 갖대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으며 노동자의 통일물꼬를 더 통일운동 발전에 밀려들 수 있다는 판단에 방북을 실천하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방북이 성사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정치적 판단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고려할 점이 있어서 그것을 규명하는데는 오랜시간이 지난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이번 사건으로 서노협과 북부지역 노조활동에 누를 끼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그 벌은 앞으로 열심히 활동하겠다는 실천의지로 달게 받겠습니다. 저는 저희들의 방북이 우여곡절을 겪으며 좌절됐지만 앞으로 노동자들이 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설것으로 믿습니다. 노총이나 전노협등 노동자 전국조직이 북의 조선직업 총동맹과 만나고, 포항제철 노동자가 북의 김책 체철소 노동자와 서울지하철 노동자들이 평양지하철 노동자들과 만나는 등 남북 노동자 서로가 여러가지 교류를 통해 서로 화해하고 단합하여 통일실현의 길로 나가는 날이 빨리 올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후략)

□ 주요공판안내 □

- 9월 21일(화)
 - 10, 황경로·유상부, 특가법, 311호, 5회/10, 백성기, 국보법, 318호, 3회/10, 유창민, 국보법, 321호, 선고/14, 이상달의 4인, 특가법, 318호, 4회/14, 김영미, 국보법, 421호, 1회
- 9월 22일(수)
 - 10, 천기호, 특가법, 318호, 선고/10, 강태중, 군무이탈, 전주지법 정주지원, 선고/10, 김옥기, 국보법, 418호/10:30, 한주석, 특가법, 318호, 1회/10:30, 조중건의 3인, 특가법, 318호, 1회/14, 문영찬, 국보법, 311호, 2회/15, 박형순, 국보법, 321호
- 9월 23일(목)
 - 10, 김철우의 3인, 특가법, 311호, 6회/10, 임성호, 군무이탈, 춘천지법/11:30, 이상훈, 특가법, 3회/16, 전제순, 국보법, 418호
- 9월 24일(금)
 - 10, 이부영, 국보법, 319호/10, 이종수, 군무이탈, 서울동부지원/10, 황주석·조국의 5인, 311호, 2회/10, 김경순, 국보법, 423호, 2회

발행처: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서준식

편집인: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한·일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 21일(수)부터 사흘동안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가 9월 21일(화)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705-8217)에서 가톨릭 노동사목협의회(279-2302), 한국교회 외국인 노동자 선교협의회(857-9135), 외국인 노동자 인권을 위한 모임(749-6052) 등의 주최로 진행중이다.

'한·일 연대회의'는 종교단체, 노동관련단체 그리고 의사, 변호사, 약사, 교수 등의 전문직종 종사자들과 학생 및 일반시민들이 날로 심각해져가는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동인권, 취업 등의 문제에 대한 해결점을 공동으로 모색하기 위한 자리라고 주최측은 밝히고 있다.

이번 '연대회의'에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 을 가지고 활동해온 단체와 개인이 주로 참여한다. 일본에서 고바야시 겐고(小林賢吾, 요코하마 교구체일 외국인연대하는회), 이로히라(色平哲郎, 시민의 회)등을 비롯한 8명의 대표가, 한국에서 이영순(한국여성노동자회 대표), 이석태 변호사, 박석운(노동정책 연구소 소장) 등 20여명의 대표가 참석하는 '연대회의'는 2박 3일 동안 한국·일본 양국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실태 발표에서 노동자들이 겪는 인권침해와 문화충돌 문제에 이르기까지 여러가지 각도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문제를 살피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 및 정책대안을 모색한다.

한편 '연대회의'가 끝나는 9월 23일(목) 오후 2시 서강대학교 산업문제연구소에서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한·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연대회의'는 그동안 외국인 노동자 인권에 대한 문제 이미 우리나라보다 앞서 같은 노동자 문제를 겪고있는 일본내 외국인 노동자 지원단체들의 사례와 국내의 사례 등을 서로 교류함으로써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연대회의'는 외국인 노동자 지원활동에서 국제적인 연대를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연대회의'의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다.

9월 21일(화)
제1회의: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한국, 일본 양국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과 실태 발표) / 제2회의: 일본에 있어서 외국인

노동자 지원활동(일본의 지원단체 소개 및 형성과정)(한국부분 2면 참조)

9월 22일(수)

<이문옥 전 감사관 무죄판결 환영 범회 및 강연회>
일시: 9월 22일(수) 오후 7시/ 장소: 부산일보사 소강당 / 주최: 부산불교인권위·부산불교교육원

<보육사업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
일시: 93년 9월 24일(금) 오후 2시/ 장소: 종로2가 YWCA대강당 / 주최: 지역사탁아소연합회

1부: 영·유아 보육시설의 현황과 보육정책의 대안
2부: 논평 및 토론
민간·국공립·가정 보육시설 설문지 결과 주제발표(지역사회탁아소 연합) / 국가지원에 관하여(동국대학교 조은교수) / 행정체계 개선(김종혜 성심여대 교수) / 현행 보육정책에 관한 민간보육시설의 입장
3부: 종합토론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 방문>
일시: 93년 9월 25일(토) 오후 2시 / 장소: 명동성당 / 주최: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장애인 교육에 관한 기본법안중 조기교육부분에 관한 시행령, 시행규칙, 마련을 위한 워크샵>
일시: 93년 9월 27일(월) 오전 11시 / 장소: 장애인복지문제연구소 회의실(521-5364) / 주최: 장애인복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사회: 조정환(비손조기교육원장) / 토론자: 이소현(이화여대 특수교육과 교수), 박희찬(은평복지학교 조기교육연구원), 최진희(이화여대 강사), 한기정(조기교육연구원 회장)

제3회의:한국의 활동사례 보고(근로조건, 임금, 산재 문제) / 제4회의: 일본의 활동사례보고 / 제5회의: 한국과 일본에서의 제도 개선방안
9월 23일(목)
제6회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연대의 모색 / 기자회견(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한·일 공동선언문, 일본·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실태, 질의·응답)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첫날 제1회의 발표중 한국관련부분 요약발제

<한국내 외국인 노동자들의 실태와 현황>

(실동훈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원)

1. 외국인 노동자의 한국유입 실태

법무부는 92년 6월 10일부터 7월 31일까지 불법체류 외국인과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업주를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이 기간중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다고 신고한 업주는 10,796명 이었으며, 외국인은 6만여명에 달했다.

법무부의 "불법취업 외국인 적발 현황"을 통해 외국인의 직업을 살펴보면, 88년 이전까지의 불법취업은 주로 기업체 직원이나 학원의 강사, 또는 연예인들이 다수를 이루었으나 89년 이후에는 단순노무자의 수가 급증하였다. 이들은 기계류 등 생산업체, 섬유류 등 가공업체, 철관 등 도금업체, 가정부 등 종업원으로 취업하였다. 이들이 주로 취업했던 직업은 제조업의 섬유·플라스틱·전자·철강·금속·제지·전기·화학·유리 등으로 단순작업을 요하는 것이다.

외국인들은 공해산업 및 작업환경이 열악한 산업, 내국인들이 취업을 기피하여 일손이 부족한 부문에 취업하고 있는데, 저임금·장시간 노동·열악한 작업환경 등에 시달리고 있다.

2. 외국인 노동자의 국내 취업현황

1)제조업 : 대표적인 산업은 섬유·봉제·피혁·염색업, 주물·화학·철강·전자 등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본국의 임금보다 높다는 점에서 한국에서 계속 취업하기를 희망한다. 이러한 약점을 이용하여 기업주는 이들에게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의 경우 저임금에다 노동통제가 용이하다는 점은 기업주에게 더욱 매력적으로 작용한다.

2)건설업 : 한국의 경우 인력난이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업종이다. 외국인이 공사판에서 막노동을 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가 아니다. 92년의 한 신문에 의하면 중국인 2만여명, 필리핀·파키스탄·네팔 등지에서 온 노동자 2만 5천여명 등 4만 5천여명의 외국인들이 건설현장의 시멘트 벽돌쌓기·콘크리트 비비는 일등 막일에 종사하고 있다.

3)농업·수산업·원양어업 : 외국인 노동력은 한국의 농촌에도 파고 들어가고 있다. 중국 교포들이 추수기에 농촌 노동력으로 동원되었거나, 양계장에서 잡역부들 하는 사례도 있다. 연근해 어업과 양식업은 대표적으로 일손이 많이 가는 업종이다.

4)서비스업 : 서비스업은 최근에 내국인의 취업이 날로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정부나 유흥업소 종업원은 내국인들의 취업기피 직종이 된지 오래다. 이러한 직종은 노동력의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형태로 보아야 한다. 그런데, 외국인들도 한국인들과 마찬가지로 쉽게 일하고 돈벌 수 있는 업종을 추구한다. 중국 교포 여성들의 경우 행사·판매업이나 가정부, 음식점, 유흥업소 종업원을 하는 사례가 많이 발견되고, 필리핀 여성은 가정부로 취업을 많이 한다.

3. 외국인 노동자의 직업생활 분석

1) 임금과 노동시장 :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모임이 92년에 조사한 바로는 외국인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은 310,500원 및 335,500원으로 나타났다. 시간당 임금

으로 환산하면 930원-1,100원 정도이다. 상여금은 2.7개월마다 32,500원 정도에 불과하다. 외국인 취업실태조사 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내국인 노동자의 평균초임이 320,120원인데 비해 외국인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335,470원으로 오히려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도에 이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과 내국인의 임금격차는 그다지 크지 않다고 결론 내릴 수 있다.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이 현저히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예상과는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취업한 직종에 내국인 노동자들이 거의 취업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내국인들이 취업하기를 기피하는 업종 자체가 임금수준이 매우 낮으므로 그 내부에서 임금격차가 두드러지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준에서 내국인과 외국인의 임금격차는 현저히 크다.

2)노동시간·작업환경 및 노동과정·노동통제 : 외국인 노동자는 자신이 가진 약점 때문에 업주들로부터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다. 자양동과 구로공단을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각각 11시간 24분 및 10시간 5분으로 나타났다. 철야작업도 잦다. 이들은 하루 8시간 이상을 일하지만 잔업수당을 전혀받지 못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에게 주어지는 일은 먼지와 소음이 가득한 제조업체와 공사장의 일이 대부분이다. 열악한 작업환경으로 재해를 당하거나 직업병에 걸리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은 산업재해를 당하더라도 영세규모의 회사로부터 치료비 지원을 기대하기 힘들고, 불법취업이라는 이유로 국내 노동관계법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있다.

3) 노동력 재생산 : 노동력 재생산과 관련된 문제는 주거, 음식, 휴일, 여가활용에 대한 것이다. 구리노동상담소(0346-67-3010)의 '외국인 노동자 고용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숙식을 직장에서 해결하는 것이 88.7%, 외국인 노동자 자신들이 알아서 한다가 7.5% 등으로 드러났다. 숙식은 대체로 회사에서 제공하는데 밀집·집단 주거가 대부분이고, 주거환경이 열악하다. 여가시간이나 휴일에는 경찰이나 출입국관리소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외출을 삼가고 있고, 그나마 작업시간이 너무 길어 여가시간이 많지 않다.

4)노사관계 : 업주는 통제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외국인의 취업을 환영하지만 내국인 노동자는 국내노동자의 고용지위를 약화시키고 교섭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원론적으로 국내 노동조합과의 협조를 구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업주가 이들을 출국시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다.

5)외국인 노동자의 희망사항 : 제1우선 순위는 당연히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취업이 가능한 사증을 얻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 그 다음은 '한국인 노동자와 동일한 임금과 노동조건을 보장받는 것'이다.

바로잡습니다.

「인권하루소식」 9월 21일(제11호) 방북(시도)인사, 국보법 공판이라는 제목의 기사중 '결심공판에서 각각 징역 5년·3년을 선고받았다'의 '선고'를 구형으로 고칩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안기부
자백강요

김삼석씨 '자해'로 고발

안기부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되어 조사를 받던 김삼석씨가 지난 9월 20일(월) 오후 5시경 변호인과의 접견도중 "조사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며 갑자기 벽에 머리를 들이박는 등 자해행위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삼석씨는 21일 변호인, 부인과의 접견에서 왜 자해행위를 했느냐는 물음에 "밥먹는 시간과 화장실에 앉고 있는 시간을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15명의 수사관들에 의해 정신없이 조사를 받는다. 내가 안한 것도 있다고 자백하게 한다. 강제진술을 안할 수가 없게 만든다"며 안기부의 강압적인 자백강요를 고발할 수 있는 길은 자해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런데 안기부는 김삼석씨가 머리를 받고 쓰러지는 과정에서 꼬리뼈가 구부러져 앉지도 못하고 목에는 기부스를 한 상태에서도 바로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백강요에 대한 항의로 자해행위를 하여 부상당한 김삼석씨를 치료도 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심각한 고문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고 가족과 인권단체들은 지적하고 있다. '민가협'은 22일 <안기부 조사중 자살기도한 김삼석씨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김삼석씨가 자해행위를 기도하기 전에도 가슴을 구타당

하는 등의 가혹행위를 하고 있는 사실이 변호인 접견을 통해 김삼석씨가 밝혔음을 지적하며, 부상당한 김씨를 안기부 지하밀실에서 당장 병원으로 옮겨 진료를 받을 것을 촉구하였다.

'외국인 노동자 보호 필요'

<한·일 연대회의> 이틀째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23일까지 진행되는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가 22일 이틀째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 부 조사중 자살기도한 김삼석씨 사건에 대한 입장이라는 성명을 통해 김삼석씨가 자해행위를 기도하기 전에도 가슴을 구타당

'연대회의'는 오늘 오후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 정책에 관한 한·일 공동선언문'을 발표한다.

강태중 일경 집유선고 양심선언 군·경중 첫 집유

9월 22일 오전 10시 전주지법 정주지원에서 열린 강태중 일경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다.

강태중 일경은 재판후 곧바로 함소하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일경은 이날 오후 5시경에 정주경찰서 대용감방에서 석방되었다.

수감중인 8명의 군인·전경은 이등익·고대성씨가 1심에서 각각 실형 2년·3년을 선고받았고, 임성호·이종수씨가 오늘과 내일 선고공판이며, 이재원 일경과 조경희 일병은 아직 날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박석진 일경은 10월 8일 수원지법에서 첫공판이 열린다.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5차 월간세미나 개최

93년 9월 27일(월) 오후 7시

국제사면위원회란 어떤 조직인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 국제사면위원회 오완호 사무국장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9월 27일(월) 월간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으로 인권신장을 위해 애써오신 오완호 사무국장님과 함께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방식과 '인권'에 대해 얘기하고자 합니다.

장 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시 간 : 9월 27일(월) 오후 7시

7시-8시 : 오완호 사무국장 발제 / 8시-9시 30분 : 질의, 응답 그리고 토론

'원진' 정치적 해결 촉구 청와대 뒤 인왕산에서

평동성당에서 농성중인 원진태이온 노동자들은 9월 22일(수) 12시에 청와대 뒷편인 인왕산에 올라가 군사독재의 유물인 '원진직업병'을 정치적으 해결할 것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250여명이 한목소리로 외쳤다.

또한 원진태이온 직업병 문제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것과 원진 출신 노동자의 재취업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도 아울러 요구했다.

한국의 외국인 노동자 관련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향(요약)

박석운(노동정책연구소장)

1. 출입국 관리와 관련제도

가. 체류자격 : 한국에 있어서 외국인의 취업은, 기본적으로 금지되 필요불가결한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선별적으로 허용하는 정책을 쓰고 있다.

현행 출입국 관리법상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29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그 중 합법적인 취업이 가능한 것은 상용, 투자, 고용, 흥행, 기술제공, 취재, 교육연구 등이다.

나. 강제퇴거·처벌 : 체류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의 경우, 단속에 적발되면 강제퇴거된다. 이 경우 당사자는 간단한 조사를 받고 벌금을 물게 되며, 고용주도 처벌된다. 출국을 위해 자진출두한 경우에는 정상참작이 되지만 처벌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고용주의 경우에는 벌금 또는 1년 이하의 체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개정안이 정부의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 자진출두가 아니고 단속의 경우 적발된 때에는 수용영장서에 의해 외국인 수용소에 수용되는 경우도 있다.

다. 외국인 등록제도 : 외국인이 91일 이상 체류하는 것을 '거류'라고 하는데, 국내거류 외국인은 출입국 관리사무소에 거류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하면 거류신고증을 교부받는다. 또한 1년 이상 거류하는 경우에는 지문을 찍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내에 합법거류하는 경우에만 등록하는 것이기 때문에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라. 유사합법화 : 한국정부는 92년 6월부터 7월까지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자진신고 기간을 설정하였다.

신고한 사업주 책임하에 국내체류를 사실상 연장해주었던 것이어서, 만일 다른 사업장으로 직장을 옮긴 것이 적발될 때는 강제출국하게 된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근로조건이

나은 경우에는 다른 사업장으로 옮길 수도 없고, 사실상 그 사업장에 매이게 된다. 더욱 딱한 경우는 사업체 도산의 경우나, 수개월간 임금체불이 되어도 다른 공장으로 옮기지 못하는 경우이다.

마. 연수제도 : 91. 10 법무부는 '외국인 산업기술 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을 발표하여, 외국인 연수제도를 통해 이 지침을 외국인 고용방법으로 활용하도록 한 이후 급격히 연수명목의 외국인 고용이 증가하고 있다.

외국에 직접투자한 사업체나 합작투자업체, 외국에 기술제공한 업체 및 산업설비를 수출한 업체에 기술연수하려는 외국인 외에도, 외국인 연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 주무부처의 장이 추천하는 업체에 연수하려는 경우에도 연수 VISA를 내주도록 되었다.

2. 근로조건과의 관련

한국노동법·산재보험의 부적용 : 정부는 외국인 불법체류 노동자에게 한국노동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체불임금 등의 노동기본권 침해가 있어도 근로감독관의 보호를 못받고 있다.

또한 외국인 노동자는 산재보험도 적용되지 않는다.

3. 사회복지 관련

의료보험, 주택문제, 교육문제 :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의료보험도 적용받지 못해 비싼 의료비용을 부담하기 일쑤다.

그리고 한국인에게도 주택문제는 심각하지만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는 대개가 공장기숙사나 공장 뒷방동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살고 있다.

한국에 외국인 노동자가 입국한지 몇년되지 않기 때문에 망정이지 시간이 흐르면 그들 자녀의 교육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를 것이다.

4. 기타

외국인 노동자는 다른 사람에게 폭행등을 당했을 경우조차 불법체류자의 경우 법적인 처리가 매우 어렵다. 또한 법무부에 소개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는 송금하기가 곤란해 송금사기를 당하기도 한다.

5. 제도개선 방향

가. 외국인 노동인력 도입을 합법화 할 것인지 여부 : 합법화 시키는 문제는 시간을 두고 연구해야 하나, 인도주의 원칙에서, 한국 노동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서, 노동자 국제주의 입장에서 이미 한국에 취업하여 있는 노동자들의 인권은 보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한국 노동자들과 차별대우를 철폐하고 동등한 대우를 해야 한다.

다. 제도적 보호 필요 :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한국 노동법 적용이 필요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에도 국적에 의한 차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현행법을 고치지 않고도 한국 노동법을 적용할 수 있다. 산재보험도 똑같은 논리로 적용되어야 한다.

라. 벌금의 하향조정 또는 면제가 필요하다.

마. 신고된 노동자들의 직장이동이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 도산이나 임금체불시에는 더욱더 당연하다.

바. 한국 경제에 기여하고 있는 이상 의료보험 적용이 마땅하다. 난점이 있다면 다른 차원에서라도 의료보험이 적용되어야 한다.

서울지방 변호사회

시민인권상 시상식

일시 : 93년 9월 23일(목) 오후 7시

장소 : 인터컨티넨탈 호텔(2층)

수상 : 최열 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민가협, 매주 「목요일」

민가협은 9월 23일(목) 제1회 「목요일」을 갖는다.

매주 목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종로 탑골공원 앞에서 <양심수 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목요일>을 연다 (763-2606).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검찰, '과잉진압' 수사기록 '분실'

의도적인 제출회피 의혹, 김귀정씨 유족 손해배상청구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송부촉탁한 문서등본 중 일부를 검찰이 분실했다며 송부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91년 5월 25일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숨진 김귀정씨의 유족들이 2주기를 맞아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이덕우 변호사는 당시 시위진압 과정에 대하여 수사한 기록의 문서등본 송부촉탁 신청을 하여 법원에 채택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법원이 서울지방검찰청에 위 문서등본을 송부촉탁 의뢰하였으나 약 1,300여 쪽이 넘는 방대한 기록중 일부가 분실되었다며 송부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후 이덕우 변호사는 2회에 걸쳐 변론기일을 열고 검찰의 송부를 기다렸으나 반응이 없어 9월 22일 오전 담당판사가 직접 검찰청을 방문 서증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러나 서울지검의 담당자는 3권으로 편철되어 함께 묶여 있던 기록 중 1권을 찾을 수 없다고 2권만을 제시하였다. 분실되었다는 수사기록의 내용은 당시 시위진압에 동원되었던 전경 187명의 진술서와 부검소견서 등으로 이 소송에 있어서 승패의 판전이 되는 중요한 문서이다.

따라서 위 민사소송에서 김귀정씨의 사인파 당시 시위진압의 폭력성을 밝히려는 당초의도가 난관에 봉착하였다고 이덕우 변호사는 주장하고 있다.

당시 사회적으로 커다란 관심을 불러일으켰던 중대 한 사건의 수사기록을 검

찰에서 분실하였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더욱이 분실하였다는 기록이 약 400쪽이 넘는 분량으로서, 검찰에서 의도적으로 제출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가협, 23일 첫목요일집회

'성탄절까지 양심수 석방하라'

'민가협'은 23일(목) 오후 2시 <양심수 전원석방 한 목요일>을 탑골공원

■ 인권운동 사랑방 광고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5차 월례세미나 개최

93년 9월 27일(월) 오후 7시

국제사면위원회란 어떤 조직인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인권운동 사랑방에서는 9월 27일(월) 월례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그동안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사무국장으로 인권신장을 위해 애써오신 오완호 사무국장님을 초청하여 풍부한 경험과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국제사면위원회의 활동방식을 듣고 토론을 합니다.

장 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 / 참가비 : 2,000원

시 간 : 9월 27일 (월) 오후 7시(사랑방에서 6시 30분전까지 오는 분에게 저녁 제공)

7시-8시 : 오완호 사무국장 발제 / 8시-10시 : 질의, 응답, 토론

앞에서 가졌다.

회원 40여명이 참가한 이날 '목요일'은 양심수 사면과 양심수의 석방을 요구하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탑골공원 주위를 돌며 지나가는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주었다.

민가협의 '목요일'은 앞으로 매주 목요일 2시 탑골공원에서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전체기조로 하면서 매주마다 새로운 주제로 집회를 열 예정이다. 또한 춤공연, 거리음악제 등의 다양한 방식도 시도할 예정이다. 다음주 목요일은 추석이라 한주 쉬는다.

민가협은 23일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글'을 통해, 과거 암울했던 독재치하에서 민주화를 외쳤다는 이유만으로 투옥된 독재시대의 유물인 양심수에게는 문민정부가 단지 감옥밖에 존재하는 이름이라고

(2면으로 이어짐)

☞(1면에서 계속)
주장하며 양심수의 전원석방을 요구하였다.
이어 성명은 "국가보안법이 위헌이므로 철폐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법학교수들·바로 그 법을 적용해 구속시켰고 연구목적으로 소지한 책 몇권을 빌미로 인권활동가를 구속시키는 등 국가보안법 구속은 계속되고 있다"며, 김영삼 정부 출범후에도 국가보안법 남용이 변함이 없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민가협 자료에 따르면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의 양심수로 분류되는 구속자 수는 69명이고 이중에 국가보안법이 적용된 것은 모두 51건이나 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9월 23일 현재 양심수는 국가보안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253명을 포함하여 총 359명에 이르고 있다.
성명은 계속해서 "냉전과 반목의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화해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는 이때 국제인권 규약을 지키는 것이 선진 대열에 나서는 길"이라며, 분단시대의 산물인 국가보안법 등 악법문제를 정기 국회에서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민가협은 5·60대 중년의 민가협 회원들이 또다시 거리로 나서야 하는 현실에 분노보다 서글픔을 감출 수 없다며, 양심수가 겨울이 오기전에, 늦어도 이번 성 단절에는 풀려날 것이라 믿고 12월 24일을 양심수 전원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의 날로 만들기 위해 매주 목요일집회를 연다고 이날 성명을 통해 밝혔다.

신내 택지지구 철거민 찬바람에 내몰려

90년 3월 택지공고를 한 이래 도시개발공사에서 지난 6월 18일 1차 철거와 8월 3·4일 행정대집행으로 강제 철거를 당하여 오갈데가 없게 된 중랑구 신내동 650번지 일대에 거주하는 83세대 400여 주민들의 최소한의 요구조건으로 임시로라도 거주할 공간인 가 이주단지라도 짓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며 21일(화)부터 탑골공원 앞과 광화문 등지에서 계속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재개발 등으로 신

내지역 전월세금이 폭등, 이들은 재개발 등으로 지하 3평 정도의 전세금 기준이 1천만에서 1천 5백만원 정도이며 월세는 보증금 7·800만원에 월 15만원선이나 하는 상황에서 이사할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로 건설현장의 막노동과 영세가내공업의 공원 등으로 살아왔다는 신내지구 650번지 강제철거민들은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고 있어, 우리 민족의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할 준비는 커녕 간밤의 추위를 떨쳐버리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호소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 공동성명

우리들은 한국과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문제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93년 9월 21일부터 23일까지 서강대학교에서 제1회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를 개최하였다.

우리는 이 회의를 통하여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제해, 임금체불, 인종차별 등에서 비롯되는 어려움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였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동아시아의 대표적인 국가인 한국과 일본은 단순 노동자들의 국내취업을 불허하는 출입국정책 및 노동정책을 통하여 수만, 수십만의 '불법' 노동자를 만들어내고 있다. 한·일 양국정부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어떠한 권리조차 인정해 주지 않은 채 이들의 입국과 출국을 사실상 묵인하고 있다.

유럽, 미국 등 서구에서는 가족들의 권익을 옹호하고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공통인식과 국제적 연대운동이 성숙되고 있다. 이에 비하여 동아시아 지역은 이러한 인식과 운동이 아직까지 형성되지 못하고 있다. 위와 같은 공통인식과 이해위에서 우리는 한·일 양국정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촉구하기로 결의하였다.

1. 우리는 한국 및 일본정부가 양국내 "불법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에 대해, 국제연합의 인권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리고 노동자로서 함유해야 할 모든 기본 권리를 보장해 줄 것을 촉구한다.
2. 우리는 한·일 양국정부가 국내체류 외국인에 가하고 있는 모든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외국인 노동자 문제의 해결을 앞당기기 위해 양국 시민에게 문제의 심각성을 널리 알리고, 국내외 시민단체와 적극 연대할 것을 확인하였다. 이 회의에 참가한 양국단체들과 대표들은 한국과 일본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을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돕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을 결의한다. (전문개제)

'외국인 노동자 기본권 보장해야'

한·일 연대회의의 공동성명, 차별법규·제도 철폐도 요구

9월 21일 부터 3일간 서강대 산업문제연구소에서 열린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를 마친 양측의 참석단체는 23일 오후 2시 기자회견을 갖고 "외국인 노동자를 위한 한·일 연대회의의 공동성명"(오른쪽 참조)과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한 한 국측 결의"를 발표하였다.
'연대회의'는 공동성명을 통해 양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산업제해, 임금체불 등 갖가지 문제로 고통받고 있음을 공동으로 인식하고, 양국 정부에 외국인 노동자들에 게 노동자로서 함유해야 할 노동자의 기본권을 보장해 줄 것과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적인 법규정과 정책들을 폐기할 것 등을 촉구하였다. "한국측 결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한 방면에서 권리를 제한 당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의 시정을 요구하였다. 또 "한국측 결의"는 국내 외국인 노

동자 단체간의 지속적인 교류와 연대가 필요함을 확인하고 상설적인 연락기구를 설치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이어서 가진 기자들과의 일문일답에서 기자들은 불법체류자의 송금보장 여부, 제1회 한·일 연대회의라고 한 의미 등을 질문했고, 노동정책연구소 박석은 소장은 송금보장 문제는 "공법 영역에서는 어떻게 모르지만 사법영역에서는 당연한 것이며, 무엇보다도 보편적인 인권이고 원초적인 당연한 요구", 앞으로 연대회의는 홍콩 대만 등을 포함하여 동북아 4개국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
이날 공동성명은 「외국인 노동자의 인권을 위한 모임」등 한국 3개 단체와 「난민 외국인문제 그리스도 연락회등 일본 8개 단체명의로 발표되었다.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766-1163 팩스)745-9712

안기부, 김삼석씨 남매 간첩혐의 수사발표, 검찰송치

연행과정 여전히 의문

검찰의 공정한 수사 여부에 관심 집중

국가안전기획부는 24일 "김삼석(28세, 전 반핵평화 운동연합 정책위원)·김은주(24세) 남매가 재일북한 대남공작조직과 연계되어,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과 「김정일 선집」 등 북한원전을 받아 한총련 등에 전달하였으며, 일본의 한총련 등에 「청년과 군대」, 「말」, 「길」, 「한총련 출범식 비디오 테이프」, 「운동권 노래테이프」 등을 제공하고, 활동자금으로 총 120만엔을 수수하는 등의 간첩행위를 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안기부 발표내용 2면 참조)
또한 안기부 발표에 따르면 "92년 3월 이래 이들이 재일북한 대남공작조직에

연계된 혐의를 두고 내사를 하던중, 93년 9월 8일 제일 연락공작원이 입국하여 김은주씨와 접선, 공작 문건을 전달하는 현장을 확인, 검거함과 동시에 김삼석씨를 독산동 자가에서 검거하여, 9월 10일 구속 영장을 발부받아 그동안 조사를 마치고 9월 24일 검찰에 서울지검에 송치하였다"고 검거 및 수사경위를 밝혔다. 김삼석씨는 서울구치소에 김은주씨는 영등포구치소에 각각 수감되었다.

이와같은 안기부의 수사 발표에 대하여 가족 및 관련단체들은 안기부가 김은주씨와 접선하는 현장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작문건을 전달해주었다는 연락공작원을 검거하지 않은 것은 합정수사일 가

만만큼 벗어나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은 서울지검 공안 1부(장윤석 부장검사)가 맡게 되었으며, 수사담당은 김영한 검사(김삼석씨)·함커용 검사(김은주씨)이다. 이들 두 검사는 올해 들어 검찰에 송치된 황석영씨, 조국교수, 노태훈씨 등의 주요 국보법 위반사건을 담당했었다.

앤네스티, 김삼석씨 남매 고문과 자백강요 우려

앤네스티는 9월 24일 김삼석씨 남매사건과 관련한 긴급구명활동을 요청하는 2차 문서를 전세계에 보냈 다. (2면 참조)

※ 알림 ※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방문
일시 : 93년 9월 25일(토) 오후 2시
장소 : 명동성당
주최 : 원진 비상대책위원회 · 원진 대책위원회

□어머니, 보고싶은 나의 어머니
-정치수배 해제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
일시 : 93년 9월 25일(토) 오후 5시
장소 : 한양대 올림픽체육관
주최 : 전대협 동우회

■ 재판결과

□배병성(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죄) 첫 공판, 배병성씨의 모두진술, 검사신문, 다음 공판은 10월15일 2시
□사회과학원 사건 / 검사심리-황주석씨 등 6명 신문, 조국교수는 다음 공판에, 10월 8일, 10시
□자민통 사건 / 김경순, 선고(구형7년), 징역 3년 집유 4년
□이종수 일경, 동부지원,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임성호 일경, 춘천지법, 징역 1년 6월, 집유 2년
□윤금이씨 사건, 케네스 마클(1심 무기징역 선고), 항소심 첫 공판, 변호인 신문, 검사 신문, 검사가 구형을 하려고 했으나 판사가 기록검토가 필요하다며 10월 28일 오후 4시 결심공판 연기.

□ 인권운동 사랑방 공고 □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를 위한 제5차 월례세미나 개최

93년 9월 27일(월) 오후 7시

국제사면위원회란 어떤 조직인가?
어떻게 활동하는가?

/ 국제사면위원회 한국지부 오완호 사무국장

장 소 : 인권운동 사랑방 회의실/참가비 : 2,000원
* 6시 30분전까지 오시는 분에게 사랑방에서 저녁 제공

안기부 발표 중 김삼석씨 남매 '간첩활동' 사실

김삼석씨 <활동사실>

- 92. 2. 제일간첩 이좌영을 처음 만나 그에게 자신은 한국군의 왜곡된 현실을 보고 군사문제에 관심을 가져 "민족자주대쟁취 투쟁위원회"를 조직,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군사 관련 글들을 쓰고 있다고 소개한 후, 한반도에는 42,000여명의 미군과 핵무기가 배치되어 있고 최근에는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고 있다. 국방비 가운데 34%를 무기도입에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군인들의 처우나 복지는 형편없고 사기는 침체되어 있다

라고 보고하면서

·각군 병력규모, 계급별 인원현황, 한미연합사령부 기구 표 등 군사기밀을 수록 제작한 "청년과 군대"라는 책자를 제공하였고

- 92. 5. 이좌영 접선시, 자신은 재야단체인 '반핵평화운동연합'의 정책실 연구위원으로 일하게 되었다는 근황을 보고하고

·국내에서 수집해간 운동권 노래테이프, <반핵> 기관지 '반핵평화', 민가협 유인물 및 80년대 이후 군 의문사 실태, 군경 양심선언 현황 등을 수록 작성한 "80년대 이후 군 민주화운동사" 등 자료를 제공하였으며

- 93. 5. 일본에서 이좌영 주선으로 접선한 북한 공작지도원 이철(50대)에게

·현 정권이 민중운동세력 성장으로 이룩해 낸 최초의 문민정부이지만 성격은 군사독재정권의 연속이다. 울곡비리로 숙군작업이 있겠지만 빙산의 일각이고 재야에서 일고 있는 국민운동체 조직도 아직 초보단계이다. 재야는 제14대 대통령 선거 패배 후 후유증에서 벗어나 새롭게 전열을 정비하고 있다

는 등 문민정부 출범후 국내 정치정세, 군부동향, 재야운동권 실태 등을 보고하였음.

김은주씨 <활동사실>

- 92. 1-93. 3.간 4차례에 걸쳐 일본을 출입하며 상부선 이좌영과 권용부를 접선하고 이들에게

·한국에서는 공무원 사회가 부패되어 노동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비참한 실정이다

·새로 탄생한 김영삼 대통령은 과거 재야에서 활동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민주화를 어느정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익환 목사나 재야교수를 비롯 많은 양심수들이 통일운동을 위해 활동하고 있으나 아직은 큰 성과를 기대하기는 힘들 것 같다

는 등 국내운동권 실태와 정치정세를 보고하고

·국내에서 수집해간 '말', '지', '길', '노동자신문'과 전국연합, 민가협 발행 유인물 및 전대협, 한총련 출범식 비디오 테이프와 운동권 노래테이프 등을 수집, 이들에게 제공하였으며

·93. 8. 8. 제일 공작조직에서 보낸 김일성의 '10대 강령'과 '민족과 운동', 등 북한 선전문건을 받아 한총련에 전달하고

·93. 9. 8. 강남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일본에서 입국한 연락공작원으로부터 김일성 회고록인 '세기와 더불어', 제4권, '김정일 선집', 1-2권 등 북한원전을 제공받았음

* 편집자 주 : 안기부는 <민족자주대쟁취투쟁위원회>는 양심선언 사병으로 수배중인 이규원(33세, 서울공대 출신)씨가 위원장이고, 세종대 예비역협의회 회원 황기수(29세)씨 등이 회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양심선언 군인전경 지원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양심선언으로 수배중인 사병중에서 이규원·황기수라는 이름으로 양심선언한 사실이 없으며, 나이가 만33세이거나(31세가 가장 높음. 이동균 대위), 서울대·세종대 출신이 없다"고 밝힌 점, 김삼석씨가 강압수사에 항의하여 자해한 점, 김은주씨 연행과정의 의혹 등에 비추어볼 때 안기부의 수사발표가 과장 또는 왜곡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긴급구명 활동 (전문 게재)

93년 9월 24일 가혹행위/양심수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 한국 김삼석(28세), 김은주(24세)

김삼석씨의 변호사는 "9월 20일 김삼석씨가 벽에 머리를 부딪혀 자살을 시도하고 의식을 잃었다"고 전했다. 김삼석씨는 조사과정과 가혹행위로 인해 명백히 심적 고통을 당했고, 그리고 그는 하지 않은 일을 인정하라고 강요 받았다고 말했다. 그가 의식을 되찾은 후에 대략 15명의 수사관들은 그를 위협적인 태도로 다시 수사를 하였다.

김삼석씨의 부인은 9월 21일 김삼석씨를 면회하였다. 부인은 김삼석씨가 목에 기부스를 하고 있었고, 머리는 부어올랐으며, 얼굴은 온통 멍들어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엉덩이 부상으로 앉을 수도 없었다.

국제 앰네스티는 또한 김은주씨가 신문과정에서 자백할 것을 강요받았을지도 모른다는 김삼석씨 부인의 보고에 관심을 갖고 있다.

김삼석씨와 그의 여동생 김은주씨는 9월 8일 이후 국가안전기획부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그들은 잠 안재우기와 구타를 당했다. 그들은 74년 "간첩" 사건과 연관된 제일교포와 접촉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보안법은 정부에 알리지 않고 북한이나 친북한단체와 접촉한 것을 포함하는 등의 광범한 "간첩"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국제 앰네스티는 김삼석씨와 김은주씨가 양심수로서 장기형을 살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다음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쓰십시오.

- 김삼석씨를 즉각 병원에 입원시키고, 안기부의 압력을 받지 않는 의사의 건강진단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연기할 것을 요구하고,
- 김삼석씨와 김은주씨가 고문과 가혹행위로 받아낸 자백과, 이 자백이 국가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목으로 그들에게 장기형이 선고될 수 있을 가능성에 우려를 표시하며,
- 정부당국에 김삼석씨와 김은주씨가 조사받았던 상황을 공정하게 조사할 것과 더 이상의 가혹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촉구할 것.

발행처: 인권운동사랑방

발행인: 서준식

편집인: 심보선

인권하루소식

(110-330)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39-2 낙원오피스텔 901호

전화) 766-1163 742-2769

팩스) 745-9712

전국 구속·수배·해고 노동자 원상회복 투쟁위 121일째 농성중

해고자 복직요구 잇따라

병역특례 해고노동자 8명 18일째 단식농성중

대우정밀 해고 노동자 박정수(91년 해고)씨 등 8명이 18일째 민주당사에서 삭발·단식 농성중이다. 이들은 '병역특례 해고 노동자의 원상회복'과 '병역특별법 개정' 등을 주장하며 지난 9월 11일 서울역에서 열린 '전국 해고 노동자 대회'에서 삭발·단식을 시작하였다.

한편 대우그룹 해고 노동자 40여명은 27일(월) 서울역 앞에 있는 대우그룹 본사를 방문, 김우중 회장과 면담을 요청하여, 방문단 대표 3명과 대우그룹 기획조정실의 박태웅 전무와 면담을 하였다.

면담에서 대표단은 '해고 노동자의 원상복직', '병역특례 문제를 해고자의 원상복직으로 풀 수 있도록 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박 전무는 이에 대해 '좀더 지켜보자'는 입장만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전해투는 이에 앞선 26일에 서울대에서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노동자·시민·학생 한마당'을 열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오후 2시에 '전해투 지원대책위

(집행위원장 김동환)' 주최로 매일도씨 아버지 고배상봉씨 추모집회를 열었다. 이날 추모집회는 국회노동위 위원장인 장석화 민주당 의원 등이 추모사를 하였다.

전해투는 26일 '죽어도 죽지 않는다(전해투-그 영원한 투쟁의 불꽃)',이라는 제목의 54쪽짜리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 자료집에는 사진을 통해서 본 전해

투 투쟁, 93년 복직 현황, 구속·수배 해고 노동자 현황, 5·6공하에서 노조운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해고노동자 원상회복을 위한 특별법 제정 청원서 및 법안, 복직 신청 제출자 명단, 지역별·사업장별 해고노동자 현황, 병역 특례자 및 부당징집자 명단, 전해투 2차 철야농성 참가자 명단 등이 실려 있다.

정부의 원진문제 해결자세 규탄 25일 명동성당 집회에서

'원진 비상대책위원회'와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는 25일 명동성당에서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대회"를 2천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이번 원진레이온 직업병 싸움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나라 산업재해는 10-20년 후퇴하게 될 것이라며 원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결코 물러설 수 없다는 결의를 밝히고, 정부가 경제논리를 내세우면서 노동자를 기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명서 2면 참조)

집회 이후 청와대 합의방문을 시도하다가 종묘공원 앞에서 경찰의 제지를 받고 자진 해산하였다.

검찰, 김삼석씨 송치 후

수사 이유로 사실상

10일간 접견 금지

지난 9월 24일(금) 안기부의 수사결과 발표와 함께 검찰에 송치된 김삼석씨는 검찰이 매일 조사하

기 위해 검찰청으로 불러내어 사실상 가족의 면회가 봉쇄되고 있다. 이에 김삼석씨의 부인 윤미향씨는 9월 27일(월) 김영한 담당 검사에게 가족면회를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2면 참조)

윤씨는 이 글에서 "안기부에서 조사받는 기간 중 자해를 행해 몸 상태가 아주 불편한 상태"라며 "심신이 약해진 가운데서 또 다시 안기부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염려된다"고 심경을 밝혔다.

한편 민가협, 한교협 인권위 등을 포함하는 13개 단체는 지난 25일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안기부의 불법가혹수사를 규탄하며, 검찰의 공정수사를 강력히 촉구한다"라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검찰은 김씨 남매에 대한 수사에 앞서 두 사람에게 불법을 저지른 안기부 수사관계자를 즉각 구속, 수사"하고, "김삼석씨 담당검사는 김씨의 건강상태를 즉각 확인한 뒤 필요한 모든 의료적 도움과 가족 면회를 허용할 것"과 "검찰은 김삼석씨 남매에 대한 수사에서 모든 법정차를 엄수, 공정한 태도로 진상을 밝힐 것" 등을 요구하였다.

주요 공판안내

- 9월 28일(화) 10시 (서울지방법원)
 - 정은수 외 1인, 국가보안법, 선고, 311호
 - 유승운, 특경법, 2회, 318호
 - 박관순 외 2인, 업무방해 등, 선고, 320호
 - 이승수 외 21인, 업무방해 등, 선고, 412호

인권운동 사랑방 알림

'인권하루소식'을 9월 29일(수)부터 10월 4일(월)까지 추석 연휴로 6일동안 휴간합니다.

성명서

김영삼 정부가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즉각 해결하라!

1. 대책없는 폐업조치에 3천여 원진가족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다.

원진 노동자 폐업투쟁 1백 20일째, 명동성당 철야투쟁 20일째이다. 지난 6월 8일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폐업조치 이후 비대위는 6월 11일 원진폐업 주동자 민자당 강삼재 정책실장 면담을 시작으로 노동부, 산업은행 쪽과 30차례나 교섭을 진행하였다.

그러나 노동부, 산업은행 측은 "노동관계법 대로 하겠다"라며 파산조치를 운운하면서 책임회피해 3천여명 원진가족은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있다. 도대체 문민정부는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시절의 유물인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는가?

2. 문민정부라면 과거 군사독재 시대의 유물을 즉각 해결하라.

원진문제는 어느날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다. 친일파 박흥식, 3공의 박정희 친인척 정영삼(현 한국민속촌 회장), 5공 전창록(전 공군소장), 6공 백영기(전 육군소장)등 군사독재와 유착된 이들이 30년간 경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작업환경을 개선하기는 커녕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 환자를 은폐하고 방치해서 결국은 세계제일의 직업병을 양산해왔다.

어두운 시대의 참혹한 과거는 제대로 청산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김영삼 문민정부가 과거 30년간 군사독재 정권 시절의 유물인 원진 직업병 문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과거 30년간 원진직업병 문제를 해결하는 최소한의 방법은 간단하다.

첫째, 현재 3백명이 이황화탄소 중독 직업병에 시달리고 있고, 앞으로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많은 만큼 이에 대한 확실한 검진, 치료, 보상 등 종합적인 직업병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다.

둘째, 지난 8월 8일 민자당 당정협의회에서 공장폐쇄 결정을 했다. 이때문에 우리는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었으므로 확실한 재취업대책을 마련해달라는 것이 전부이다. 이러한 원진 노동자의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문제는 병들고 굶어죽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요구이다.

3. 우리는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의 요구는 너무나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노동부와 원진레이온 법정관리인인 산업은행 쪽이 직업병 대책, 재취업 대책의 요구를 묵살하고 파산조치를 강행하겠다는 행위에 대해 정상인으로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김영삼 문민정부라면 과거 30년간 독재정권시절의 유물인 대책없이 고통받으면서 죽어가는 노동자들의 건강과 생명은 존중해야 한다. 또한 취업대책을 마련해 8백명의 원진 노동자들이 최소한의 생계유지는 할 수 있도록 생존권 보호는 해야한다. 우리는 찬이슬 내리는 명동성당 앞

길거리에서 라면, 국수 등으로 끼니를 때우고 있는 실정이다. 3천여명 원진가족이 굶어죽을 위기에 놓여있기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1백 20일, 그리고 최근 명동성당 철야농성 투쟁으로 20일 동안은 정부의 적절한 대책을 촉구해왔다. 우리는 오늘 명동성당을 시발점으로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청와대 촉구방문' 투쟁에 나서면서 다시 한 번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청와대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까지 모든 힘을 총동원해 투쟁을 전개할 것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 원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
- 원진직업병 전문병원 설립하고 정부투자기관 재취업을 보장하라
- 원진특별법을 즉각 제정하라
- 원진 노동자도 추석명절 고향에 가고 싶다. 생계비를 지급하라

1993. 9. 25

원진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대책위원회
직업병 대책과 고용보장 쟁취를 위한 원진비상대책위원회

김삼석씨 부인 윤미향씨가 담당검사에게 보낸 면회요청서

안녕하십니까?
저는 현재 김 검사님께서 조사중인 김삼석씨의 아내되는 사람 윤미향입니다.

김삼석씨는 지난 9월 8일 안기부에 연행된 날로부터 23일까지 조사를 받는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고, 조사받는 기간중 자해를 행해 몸 상태가 아주 불편한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가운데 있으며, 심신은 지칠대로 지쳐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번 안기부에서 만나뵈 의사선생님의 말씀에 의하면 자해로 인해 다친 꼬리뼈는 오래 앉아 있으면 안되며, 한번 구부러진 꼬리뼈는 앞으로 계속 재발한다고 합니다. 부인인 저로서는 심신이 약해진 가운데서 또다시 지난번 안기부에서와 같은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여러가지로 걱정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타당한 이유가 있을 때 검사님 재량에 따라 가족면회를 거절하실 수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찰 송치 후 거의 10여일이 지난 후인 10월 2일이나 면회가 가능하다는 것은 온통 김삼석씨의 건강에 대한 걱정으로 마음 졸이고 있는 저희 가족으로서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이에 가족으로서 빠른 시일안에 김삼석씨를 면회할 수 있기를 바라며 알맞은 시간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993년 9월 27일

김삼석의 처 윤 미 향

인권하루소식

93년 10월

(제17호 - 제36호)